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연구



##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 세 원



<b>제1장 서론</b>	<b>1</b>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b>제2장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 및 전달체계의 현황 및 분석</b>	<b>8</b>
제1절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과 전달체계 현황	10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개와 정책대상	10
2.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확산 노력과 정책전달 구조	21
제2절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 및 전달체계의 성과 및 한계	36
1. 낮은 인지도와 특정 계층에 집중된 정책전달	36
2. 중앙공급형 매개자 중심 정책전달 체계의 한계	43
3. 공모사업 방식 지원의 한계	47
4.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사회서비스 개념 도입의 검토	49
<b>제3장 사회서비스 제도의 특징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도입의 쟁점 분석</b>	<b>52</b>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고도화의 시도	54
1.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념 및 특징	54
2. 사회서비스 제도의 전개 및 고도화의 시도	65
제2절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의 쟁점 분석	72
1. 정책 전달체계의 전면 재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필요	72
2. 문화예술교육 향유의 지역 격차 및 품질관리의 문제	76
3. 문화예술교육 정책 국고지원 대상의 문제	78
4. 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유료화의 문제	80
<b>제4장 사회서비스 제도 사례 및 시사점 분석</b>	<b>83</b>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서비스 사례	85
1. 통합문화이용권	85
2. 스포츠강좌 이용권	91
3. 문화비 소득공제	97
제2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례	102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4
2.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116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20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27

제3절   타 기관 사회서비스 사례 .....	134
1.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	134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	142
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	149
4. 서울형 여행바우처 .....	152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	158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165
<b>제5장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b>	<b>169</b>
제1절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의 필요성 .....	171
제2절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쟁점의 해결방안 제언 .....	175
1. 민간 예술교육 시장의 포괄과 프로그램 유료화 도입 .....	176
2. 국고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 또는 차등지원 .....	184
3. 지역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과 중앙의 개입 .....	190
4. 광역지원센터를 지역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로 .....	194
5. 정책 전달체계 및 이해관계자 역할의 점진적 재조정 .....	198
제3절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조입을 위한 방안 제언 .....	204
1.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와 연계를 통한 정책전달의 확대 .....	204
2. (가칭)문화예술교육 바우처의 도입 .....	211
<b>참고문헌 .....</b>	<b>215</b>

## 표 목차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명단 .....	6
〈표 2-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총합) 중 문화예술교육 예산 비중(2012~2023) .....	10
〈표 2-2〉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13
〈표 2-3〉 취약·소외계층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14
〈표 2-4〉 취약·소외계층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세부사업 현황(2018~2023) .....	15
〈표 2-5〉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세부사업 현황(2018~2023) .....	17
〈표 2-6〉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현황(2023) .....	19
〈표 2-7〉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20
〈표 2-8〉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추진체계 .....	22
〈표 2-9〉 지방이양사업 현황(2023) .....	22
〈표 2-10〉 문화예술교육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2018~2023) .....	23
〈표 2-11〉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중 공모사업 지원 방식 현황 .....	34
〈표 2-12〉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	37
〈표 2-13〉 문화예술교육 과정 미참여 이유 1위(미참여자 대상) .....	41
〈표 2-14〉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45
〈표 3-1〉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의 서비스 구분 .....	56
〈표 3-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의 대분류 및 포괄 범위 .....	57
〈표 3-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영역 .....	58
〈표 3-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 .....	59
〈표 3-5〉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예시 사업 .....	61
〈표 3-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	63
〈표 3-7〉 수요자 지원방식의 특징 .....	65
〈표 3-8〉 역대 정부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 .....	66
〈표 3-9〉 사회문화예술교육 선호 교육기관 현황 .....	81
〈표 4-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의 법적 근거 .....	86
〈표 4-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의 가맹 업종 및 품목 .....	86
〈표 4-3〉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법적 근거 .....	91
〈표 4-4〉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우선선정 기준 .....	92
〈표 4-5〉 문화비 소득공제의 법적 근거 .....	97
〈표 4-6〉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적용범위 .....	98
〈표 4-7〉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서비스 사업별 특성 요약표 .....	101
〈표 4-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구분 .....	103
〈표 4-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 .....	104
〈표 4-10〉 지자체 개별보조와 포괄보조의 비교 .....	105
〈표 4-11〉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회계 재정 운영방식 .....	105
〈표 4-12〉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현황 .....	107

〈표 4-1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해관계자 역할 .....	112
〈표 4-14〉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가격 .....	117
〈표 4-1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이해관계자 역할 .....	118
〈표 4-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표준서비스 .....	121
〈표 4-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가격 .....	122
〈표 4-18〉 바우처 서비스 범위 외 부가서비스 목록 .....	123
〈표 4-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해관계자의 역할 .....	124
〈표 4-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현황 .....	125
〈표 4-2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	128
〈표 4-2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및 가격 .....	128
〈표 4-2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별 특성 요약표 .....	133
〈표 4-24〉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의 법적 근거 .....	135
〈표 4-25〉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	135
〈표 4-2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	143
〈표 4-2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143
〈표 4-28〉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종류 .....	144
〈표 4-2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바우처의 정책 전달체계 .....	150
〈표 4-30〉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법적 근거 .....	152
〈표 4-31〉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연차별 추진계획 .....	156
〈표 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의 법적 근거 .....	158
〈표 4-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자격 .....	159
〈표 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상품 현황 .....	161
〈표 4-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수혜자 현황(2019~2022) .....	162
〈표 4-36〉 타 기관 사회서비스 사업별 특성 요약표 .....	164
〈표 5-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의 전제(성공)조건 : 선행연구 정리 .....	176
〈표 5-2〉 창의적 체험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안) .....	197
〈표 5-3〉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변화(안) .....	202
〈표 5-4〉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 규모 비교(2019~2023) .....	213
〈표 5-5〉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단계(안) .....	214



## 그림 목차

[그림 2-1] 국민 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 .....	17
[그림 2-2] 지역 센터별 총예산 및 예산출처별 예산(2022) .....	25
[그림 2-3] 중앙 직접 운영 방식 체계 .....	27
[그림 2-4] 매개자 파견 방식 체계 .....	29
[그림 2-5] 공모사업 지원 방식 체계 .....	32
[그림 2-6] 자체기획 지원 방식 체계 .....	33
[그림 2-7]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 .....	37
[그림 2-8]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률 .....	39
[그림 2-9]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1+2순위) .....	41
[그림 3-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54
[그림 3-2]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	64
[그림 3-3]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추진방향 및 과제 .....	68
[그림 3-4]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차이 .....	73
[그림 4-1] 통합문화이용권의 정책 전달체계 .....	87
[그림 4-2] 최근 5년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현황 .....	88
[그림 4-3]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시설 및 강좌 조회 예시 .....	93
[그림 4-4]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정책 전달체계 .....	93
[그림 4-5] 문화비 소득공제 기준 .....	98
[그림 4-6]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자 등록 처리 과정 .....	99
[그림 4-7]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	110
[그림 4-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 전달체계 .....	111
[그림 4-9] 전자바우처 포털 내 서비스 제공 정보 예시 .....	112
[그림 4-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가능 대상자 기준 .....	120
[그림 4-1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정책 전달체계 .....	130
[그림 4-12]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의 정책 전달체계 .....	136
[그림 4-13]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기관 조회 예시 .....	137
[그림 4-14] 최근 5년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현황 .....	139
[그림 4-1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책 전달체계 .....	145
[그림 4-16]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정책 전달체계 .....	154
[그림 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의 정책 전달체계 .....	160



## ■ 제1장 ■

---

### 서론



## 제1절 |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2004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이후 중앙정부 강력한 지원 속에 지난 20여 년간 빠르게 양적·질적으로 성장해왔으며, 우리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은 것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모범사례를 다수 선보이며 눈부시게 발전해 오
-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자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전달체계를 폭넓게 구축한 선구적인 분야이지만, 아직 전국민적인 인지도와 체감도를 구축하는 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9년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0.1%만이 ‘익숙한 용어이다’라고 답하였고, 국민의 23.8%는 ‘오늘 처음 들어본 말이다’라고 응답하였음. 강력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이 집중된 분야이지만 이에 비해 대국민 지지 기반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이는 그 동안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이 아동·청소년과 특수·소외계층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것과 관계하는데, 한정된 자원을 정책 우선대상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다보니 일반 국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대상에 포섭되기 한계가 있었음
- 문화예술교육이 한정된 정책전달이 진행된 데에는 정책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와도 관계가 있음
  -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초기부터 매개자를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이들을 직접 파견 또는 직접 지원함으로써 최종수혜자에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하향형 구조(Top-down)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구조는 중앙의존도를 심화함은 물론, 매개자의 개별 역량에 의존해 질적으로 안정적인 전달을 어렵게 하며, 관리에 과도한 행정력을 소요하게 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다수는 중앙에서 직접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지원구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 반영 및 정책효과 확산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지속성 및 전문성 축적에 한계를 제공하기도 함
- 현대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취향과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 전달체계는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 수요자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전달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 이를 위해 향후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서비스’의 관점을 적용해 정책 전달체계를 재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최근의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맞춤형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 이러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구조는 공급자 중심으로 경직화 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전달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지역과 대상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더 많은 국민들의 일상 속에 문화예술교육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연구목적

- 이에 본 연구는 우리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다가가 일상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 현재의 정책 전달체계의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해보고자 함
- 특히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인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진정으로 수요자의 문화향유 선택의 폭과 깊이를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라는 개념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체육, 보건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들의 장단점 분석 및 문화예술교육에의 적용에의 쟁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리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더 많은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전달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절 |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 현재를 기준으로 함

####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전체를 기본으로 함

#### □ 대상적 범위

- 본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17592호)」의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것을 대상으로 함
  -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함(제2조제1항)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중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3항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와 제24조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하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정의됨
- 본 연구는 주로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은 중앙정부의 정책 전달체계로, 지원사업의 구조에 주로 초점을 맞추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지원이나 인력양성 등과 관련한 사항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 □ 내용적 범위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책환경 분석 및 사회서비스 제도 적용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 및 환경 분석,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쟁점 분석,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적용의 필요성

- 사회서비스 정책의 개념 및 사례 분석
  - 사회서비스 정책의 개념 및 유형,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서비스 정책 사례의 분석,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 사례의 분석, 그 외 타 부처·기관의 사회서비스 정책 사례 분석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서비스 제도 적용 및 쟁점 분석
-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도 정책방안의 제안

## 2. 연구방법

### □ 연구방법

-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동향 관련 통계자료,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현황 및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선행연구,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쟁점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분석 등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폭넓게 검토함
  - 또한 문화예술 분야 및 타 분야의 기존 사회서비스와 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한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 선행연구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정책사업들의 구조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 자문회의(Focus Group interview)
  -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달체계의 쟁점 및 한계 분석, 개선방안의 제시, 사회서비스 개념 적용의 쟁점 및 예상 문제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함
  - 또한 문화예술체육 분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타 부처의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자문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쟁점을 도출함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명단

회차	일시	자문위원
1	2023.07.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수란 연구위원
2	2023.07.0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노준석 본부장, 김자현 본부장, 이상은 본부장, 정다워 팀장, 김세린 팀장, 최영희 팀장, 허윤정 팀장 등
3	2023.09.07	상명대학교 양현미 교수
4	2023.10.0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삼경 실장
5	2023.10.13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개선TF 정보희 팀장
6	2023.11.09	경희대학교 백령 교수



○ 사례분석(case study)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사회서비스 정책사업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목적, 정책대상, 전달체계, 성과 및 한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의 시사점 등을 분석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문화비 소득공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 등을 사례로 연구함

## ■ 제2장 ■

---

###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과 전달체계의 현황 및 분석



## 제1절 |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과 전달체계 현황

###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개와 정책대상

- 우리나라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작된 것은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예술교육과가 설치되면서부터인데, 이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제정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본격화되었음
-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강력한 지원이 제공되었는데, 이에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지난 20여 년 간 크게 발전하였으며 빠르게 외연을 확장하였음
- 이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주요 정책 영역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예산 규모를 보면 2005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한 데 비해<sup>1)</sup>, 2019년~2023년의 경우 전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의 약 2% 내외를 유지하며 크게 성장하였는데 별도의 시설 운영이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sup>2)</sup>

〈표 2-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총합) 중 문화예술교육 예산 비중(2012~2023)

(단위: 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문화체육관광부(총합)* 예산	37,194	41,723	44,224	49,959	54,948	56,971
문화예술부문 예산(총합)	16,225	17,461	13,597	13,604	15,069	16,092
문화예술교육 예산(총합)	696.27	994.6	1093.17	1066.66	1202.04	1198.39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예산 점유율(%)	1.87	2.38	2.47	2.14	2.19	2.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39.57	43.6	41	48.97	64.39	64.98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점유율	0.11	0.1	0.09	0.1	0.12	0.11
문화예술부문 예산 대비 점유율	0.24	0.25	0.3	0.36	0.43	0.40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체육관광부(총합)* 예산	52,578	59,233	64,803	68,637	73,968	67,408
문화예술부문 예산(총합)	16,387	18,853	21,213	22,165	24,975	23,140
문화예술교육 예산(총합)	1246.26	1217.35	1296.6	1323.05	1254.39	1212.9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예산 점유율(%)	2.37	2.06	2	1.93	1.70	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	64.96	64.96	69.6	97.4	107.22	110.01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점유율(%)	0.12	0.11	0.11	0.14	0.14	0.16
문화예술부문 예산 대비 점유율(%)	0.40	0.34	0.33	0.44	0.43	0.48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기금운용계획(2012~2023),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최보연(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참고.

1) 최보연(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특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 중에서도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우리 문화예술의 수요 저변을 확대함은 물론,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음
- 우리 문화예술 정책은 대부분 예술가에게 직간접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초점이 맞춰온 경향이 있는데, 2000년대 초반 ‘문화민주주의’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소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상당히 선회하였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수요자를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능동적인 주체’로 바라보고, 이들이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예술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물론 이를 통해 삶의 질은 개선하고 자아실현을 이루며 또 다른 창작주체로서의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sup>3)</sup>
-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적, 사회적 다양한 문제해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강조되며 파트너십을 통해 타 분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를 위한 정책적 요구와 관련한 사업에 결합했는데, 창의적 사고 개발을 위한 교육에 활용되거나 다문화 이해 증진, 청소년 범죄 감소, 학교폭력 감소, 자살방지 등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에 활용되었음
- 김혜인·차민경(2022)의 2004~2018년에 발표된 우리 문화예술교육 주요 정책자료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 따르면,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초기에는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힘써왔지만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답게 더 많은 지역에, 그리고 더 다양한 대상에게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sup>4)</sup>
- 정책초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인프라로서 매개자 양성 및 파견에 정책역량을 집중하였으나, 이후 2010년 이후 지방분권화와 함께 중앙 프로그램의 지역이양이 주요 정책이슈로 등극하면서 좀 더 다양한 지역의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
- 정책대상의 경우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강조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였는데, 이후 2010년대 창의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초등학생에의 프로그램 제공이 강화됨.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취약·소외계층에 집중하였는데, 장애인, 새터민,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로 수혜가 제공되었음

3)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4)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정책대상 :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

- ‘아동·청소년’은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초기부터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이었는데, 이는 아동기부터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경험이 문화예술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고 창의력을 고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한편 시민교육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음
  -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초기부터 ‘학교’와 ‘학교 외(사회)’로 구분할 만큼 어린 시절에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옴
  - 아동기부터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정책의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 투자가 진행되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현재에도 문화예술교육 전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은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예술꽃 씨앗학교가 있음.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인데, 전체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60% 내외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총 예산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약 7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이 중 주제 중심 학교문화예술교육 개발이나 예술꽃 새싹학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비중은 미미하며 주로 예술강사의 인건비 및 관련 비용에 소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예술강사 지원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 수요자인 아동·청소년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학교문화예술 다각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또 다른 주요 정책대상으로는 취약·소외계층을 들 수 있음. 이들은 문화예술 향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초기부터 주요 정책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어왔음
  - 특히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정책대상인데, 아동보호시설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더 많은 대상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표 2-2〉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 예산			129,998 (100)	127,546 (100)	141,126 (100)	128,184 (100)	131,912 (100)	134,993 (100)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 예산			101,175 (77.83)	99,390 (77.92)	98,618 (69.88)	93,294 (72.78)	116,733 (88.49)	80,653 (37.52)
학교 문화예술 교육지원	예술강사지원사업*		81,169	81,425	81,953	81,065	84,966	54,899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76,929 (59.18)	77,979 (61.14)	78,557 (55.66)	77,843 (60.73)	81,810 (62.02)	51,659 (38.27)
	예술꽃 씨앗학교 지원		4,000	3,200	3,200	3,070	3,070	3,070
기부금 사업비	기업사회공헌 사업**		240	246	196	152	86	170
사회 문화예술 교육지원			19,806	17,765	16,265	14,322	26,925	32,867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2,627	2,455	2,180	2,093	1,225	15,590
		예술누림 (아동·노인·장애인)	-	-	-	-	-	
		특수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5,459	5,859	6,114	5,405	13,590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6,750	4,293	3,427	2,840	1,886	6,853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	-	-	-	
		늘봄학교 지원 우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범 운영	-	-	-	-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	512	608	544	464	3,604	3,604
		국민 참여 문화예술치유 기획사업 시범 운영	-	-	-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4,458	4,550	4,000	3,430	3,480	6,730
		꿈의 댄스팀	-	-	-	-	3,050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90	90	90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	-	-	500	3,573	3,573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 온라인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지원	-	-	-	500	-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	2,000	2,00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	-	-	-	1,445	1,445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	-	-	-	-	128	128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 원조 (ODA)			200	200	400	384	384	576
	문화예술교육 ODA		200	200	400	384	384	576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중 진흥원을 통해 교부되는 사업예산은 국고(민간보조) + 지방교육재정(17개 시·도 교육청) 매칭 예산을 합산한 금액임

\*\*소외 아동 청소년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예술꽃 새싹학교 지원사업'을 본 항목으로 운영함

출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통계자료(2022.09.) 및 최근 6개년 교육진흥원 예산현황(2018~2023년),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대상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국고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며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짧은 기간에 더 극적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어, 아직 문화예술교육이 생소한 우리 사회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증명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었음
  - 특수 소외계층의 경우 타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군부대, 교정시설, 치료감호소, 북한이탈주민, 상이군경 등 특정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함
-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은 학교문화예술교육 다음으로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최근 문화예술교육 정책예산의 17%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산 비중으로 지난 6년간(2018~2023)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3〉 취약·소외계층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 예산		129,998 (100)	127,546 (100)	141,126 (100)	128,184 (100)	131,912 (100)	134,993 (100)
취약·소외계층 대상* 사업 예산		25,369 (19.51)	25,363 (19.89)	24,001 (17.01)	21,021 (16.4)	20,660 (15.66)	32,867 (24.35)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 취약·소외계층 대상 사업		25,369	25,363	24,001	21,021	20,660	32,867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9,019	8,835	8,039	7,366	6,171	15,590
	특수 소외계층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9,621	10,058	9,962	8,807	5,48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	-	6,85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4,458	4,550	4,000	3,430	6,530	6,730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	-	-		90	90	90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2,271	1,920	2,000	1,328	2,388	3,604

\*일반 국민 대상을 제외한 대상(취약·소외계층 대상) 사업 기준으로 집계 / 학령기(아동·청소년) 대상을 포함하여 학령기 대상사업에서 다루었던 부분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출처: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표 2-4〉 취약·소외계층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세부사업 현황(2018~2023) - 진흥원 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군/대상/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지원 - 취약 · 소외 계층 대상	(아동·노인 ·장애인)	아동보호시설*		아동	개편	2,627	2,455	2,180	2,093	1,225	218
		노인복지관		노인		2,932	2,930	2,712	2,441	2,297	732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3,460	3,450	3,147	2,832	2,649	95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군장병(군부대)		성인	개편	3,037.5	3,037.5	2,835	2,551.5	864	864
		교정시설 수용자		성인	개편	715.5	715.5	702	634.5	540	742.5
		치료감호소 수용자		성인	개편	108	108	108	27	27	-
		소년원 학생		아동 ·청소년	개편	148.5	297	283.5	148.5	135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아동 ·청소년	개편	3,870	4,158	4,777.5	4,297.5	3,105	3,105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개편	999	999	702	634.5	540	540
		근로자		성인	'22 일몰	405	405	216	202.5	-	-
		북한이탈주민*		아동 ·청소년	'22 일몰	121.5	121.5	121.5	108	-	-
		상이군경		노인	'22 일몰	216	216	216	202.5	-	-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22 신규	-	-	-	-	270	405
		부처 협력형	학교 부적응 학생*	아동 ·청소년	교육부 협력 참여 시설 (wee 프로젝트 시설)	272	384	368	320	800	1,440
					법무부	240	224	176	144	-	-
			각종 범죄사건 발생지역 거주 주민	전 생애	경찰청	352	160	144	160	-	-
			군대부적응 병사	전 생애	국방부	192	224	144	176	-	-
			성·가정폭력 피해자	전 생애	여가부	176	144	128	112	-	-
			도박중독자 및 가족	전 생애	사행위	112	48	48	-	-	-
			게임과몰입 대상	전 생애	게임문화재단	16	-	-	-	-	-
		치매 예방형	경도인지장애 / 치매고위험자 및 가족	전 생애	치매안심센터	135	384	512	416	672	768
		기획형	지원사각지대 대상(미혼모, 난치병환자 등)	전 생애		126	352	480	-	-	-
		정신건강 상담 수요층		전 생애	정신건강 복지센터	-	-	-	-	416	672
	폐쇄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		전 생애	요양원 등	-	-	-	-	500	-	
	복합외상 피해자 (친족 및 일반 성폭력 피해자, 가정 아동학대 피해자)		전 생애		650	-	-	-	-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개편	4,458	4,550	4,000	3,430	3,480	2,000
		꿈의 댄스팀*			'22 신규	-	-	-	-	3,050	4,730

\*학령기(아동·청소년) 대상을 포함하여 학령기 대상사업에서 다루었던 부분과 중복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출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계자료(2022.06.16.) 및 최근 6개년 교육진흥원 예산현황(2018~2022년 결산, 2023년 사업계획 - 2018~2023년 국고사업 중 개편 및 일몰, 신규 사업 포함),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2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술누림" 운영단체 공모안내문, 202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단체 공모 안내문.

##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의 필요성과 현황

- 위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정책 초기부터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했음.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강조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의 생애주기 개념의 도입은 특정 계층과 연령에 집중해 온 그 동안의 정책은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2010년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이후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서울어젠다’가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편적인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반성에서 시작됨
  -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이들의 생활주기에 맞는 정책전달 체계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시도하였음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영유아(7세 이하), 아동(8~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64세), 노년(65세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세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음
  -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음. 수요자들의 생활권에서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 실시한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정책자료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 따르면, 지역마다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다루는 생애주기별 대상이 다른데, 전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그 외에도 노인(경북, 강원), 유아(인천, 전남, 전북, 충남), 장애인(서울, 제주, 대구, 충남), 성인(충북), 청년(경북) 등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지며 이들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음<sup>5)</sup>
  -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한 사회의 분위기와 국민들의 우울감을 반영해 예술 치유 지원이 확대되었음

5)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1] 국민 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0). 2019 한눈에 보는 국민 문화예술교육(1) 참고.

〈표 2-5〉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세부사업 현황(2018~2023) - 진흥원 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군/대상/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지원 - 일반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노인영상시범사업	노인	일몰	100	100	100	100	-	-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성인	일몰	-	200	200	200	300	-
		농산어촌 이동형 교육	전 생애	'20 일몰	800	700	-	-	-	-
		명예교사	전 생애	'20 일몰	500	350	-	-	-	-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성인	(지역문화정책과 이관)	1,475	1,500	2,000	-	-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장년 (5060)	'22 일몰	420	420	1,000	900	1,000	-
		사회이슈 연계 확산 시범사업	전 생애	'22 일몰	-	-	-	815	600	-
		문화예술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성인	일몰	-	150	250	-	-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전 생애	'23 신설	-	-	-	-	-	6,853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예술가 힐링 프로그램 - 일반 국민 대상	전 생애	일몰	-	-	-	-	740	-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전 생애	'23 일몰	-	-	-	500	-	-
		마음치유, 봄처럼	전 생애	'23 신설	-	-	-	-	-	3,604

출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계자료(2022.06.16.) 및 최근 5개년 교육진흥원 예산현황(2018~2022년 결산, 2023년 사업계획

- 2018~2023년 국고사업 중 개편 및 일몰, 신규 사업 포함)

출처: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대표적인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사업인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아동과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당 대상의 가족까지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생애주기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을 운영함.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지역이 스스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소양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음<sup>6)</sup>
- 금년부터 중앙 중심의 하향식 지원에서 다소 벗어나 문화시설 및 단체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기획해 운영하는 상향식 체계를 일부 반영함. 선정이 된 지역에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 예산과 사업을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임
- 이를 위해 지역센터의 운영비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산, 그리고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현 사업 명으로 변경 전의 명칭)의 지역 연계사업 예산을 모두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 예산으로 통합함<sup>7)</sup>. 이는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반영해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전 생애 대상 문화예술교육 기획을 위한 것임
  - 그러나 점차 해가 지날수록 프로그램 수와 참여자 수, 지원예산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황임. 특히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참여자 수가 956명까지 줄어드는 추세로 확인됨<sup>8)</sup>. 2023년 기준, 총 6,853백만 원이 투입되어 운영됨<sup>9)</sup>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기존에 주된 정책대상이던 청소년과 가족 단위 외에도 직장인, 새롭게 도출된 신(新)중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한다는 목적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음
- ‘2023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 북’을 살펴보면 전체 프로그램이 ‘아동·청소년’, ‘청년·중장년’, ‘노년’, 그리고 ‘전 생애’로 생애주기에 맞춰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기획되어 진행되고 있음<sup>10)</sup>
  - 이처럼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운영됨
- 생애주기 대상별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6>과 같음.
-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각 지역 내 문화 재단의 사업으로 구성됨.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문화시설과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지역 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sup>11)</sup>
  - 선정된 시설 및 단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을 위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지역재단과 교육지원센터는 이에 대한 선정단체 및 시설을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모니터링을 수행해 관리함<sup>12)</sup>
  - 그러나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외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과 꿈의 오케스트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은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꿈의 무용단’이 ‘꿈의 댄스팀’으로 신설되어 함께 진행됨<sup>13)</sup>

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 연구자료 참고.

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 연구자료 참고.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지역연계팀(2023.3). 2023 꿈다락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북. 꿈다락문화예술학교.

11)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1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참고.

1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참고.

〈표 2-6〉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현황(2023년 기준)

구 분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 목적	'23년 현황(진행여부)
아동·청소년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교육 격차 해소	진행 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동·청소년	또래 간 소통 확대	통폐합됨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시민 성장기회 제공	'꿈의 댄스팀'을 신설해 함께 진행
성인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군장병, 재소자,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교육 격차 해소	진행 중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주말예술캠퍼스 _학부모	아동·청소년의 학부모 및 성인	가족 간 소통 확대	통폐합됨
		가족여가프로그램 _성인, 학부모			
		순환랩프로젝트 _성인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정신 건강 상담 수요층	심리 정서, 사회성 회복 및 치유 제공	'마음치유, 봄처럼'으로 개편됨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성인	다변화된 문화예술교육 제공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로 개편됨
사회이슈 연계 확산 시범사업					
노인	찾아가는 예술처방전		경도인지장애자, 치매 고위험자	심리 정서 치유 및 사회성 회복 제공	'마음치유, 봄처럼'으로 개편됨

출처: 이경석(2022). 2022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12).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찾아가는 예술처방전'은 '마음처럼, 봄처럼'이라는 사업명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경도 인지장애자와 치매 고위험자까지 대상으로 하여 예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적 피로감과 우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함<sup>14)</sup>
- 이외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로 개편되어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에 집중한 전국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sup>15)</sup>

○ 그러나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취약·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직 문화예술교육 정책 예산에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임.

-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예산 전체 문화예술교육 예산의 2%대를 유지하고 있음. 이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2018년~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감소폭을 보이며 축소됨

1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참고.

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부자료 참고.

- 앞서 <표 2-7>을 보면 대부분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현재는 일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음

<표 2-7>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진흥원 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 예산		129,998 (100)	127,546 (100)	141,126 (100)	128,184 (100)	131,912 (100)	134,993 (100)
일반 국민 대상* 사업 예산		3,715 (2.86)	3,920 (3.09)	4,650 (3.29)	5,415 (4.22)	10,707 (8.12)	12,457 (9.23)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 일반 국민 대상 사업		3,715	3,920	4,650	5,415	10,707	12,457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및 지역 확산	3,295	3,420	3,550	2,015	1,900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420	420	1,000	900	-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	6,067	6,853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	100	100	-	-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2,000	2,000	2,000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	-	500	740	3,604

\*유아 및 학령기(아동·청소년) 대상을 제외한 대상(전 생애, 성인, 노인, 청년 등) 사업 기준으로 집계

출처: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2.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확산 노력과 정책전달 구조

### □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반 확대의 노력과 지역이양

-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예술에 대한 문해력과 상상력을 증진시키며, 행복감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게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라 정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전달하는 것 노력 외에도,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임
- 특히 생애주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이 일상 속 공간에서 쉽게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 이에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정책 초기에는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정립하고 정책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10년대부터는 생애주기 개념을 도입한 정책대상 확대와 더불어 ‘지역 이양’에도 점차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왔음
  - 이는 국민의 일상의 공간에서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간적으로 더 많은 대상에게 다가가려는 노력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특징을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모든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을 기획 및 보급했던 종래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지역문화예술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지역의 협력형 체계 마련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음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근거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정책공급체계를 설치하였고, 기존의 중앙주도 정책 일부를 지역으로 이양하는 사업을 진행함. 특히 기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진행한 사업의 일부를 지역으로 이양을 추진함
  - 이러한 중앙-지역 협력형 정책공급체계의 강조는 중앙에서 지역사회로 정책중심을 이동하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적절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발표하고, 추진전략 1로 ‘지역기반 생태계 구축’을 세워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등을 전략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특히 광역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거점이 조성되고,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에 많은 성과를 구축함
- 2023년 초에 발표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이에 한발자국 더 나아가 기초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전달 체계를 강조하고 있는데, 생활권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실현을 위한 기본단위이자 지역민의 수요를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은 기초 단위의 사업 운영의 역량을 갖춘 곳을 선정하여 기초 지자체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리더십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표 2-8〉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추진체계

추진주체	주요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정책 수립 및 관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 관리 (공모, 심사, 컨설팅 운영 등)
기초 거점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기초조사, 워킹그룹 운영, 공론화 등 지역 내 논의구조 구성 및 운영, 협의체 운영 등)
기초 지자체	■ 지원 주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적극적 행정 지원 (협의문서 작성, 공간 지원, 지방비 매칭 등)
광역 센터	■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설계/실행의 간접적 지원

출처: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표 2-9〉 지방이양사업 현황(2023)

사업명	변화내용	
	변경 전(~'21년)	변경 후('22년~)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총액 26,090백만원)	지원사업비 (지특, 꿈다락 사업비 18,000백만원)	· 국비-지방비 매칭(5:5)  · 지방비 100%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존 예산규모 5년간 보전)
	지역센터 운영 (인건비 등 8,090백만원)	※ 지방이양 대상에서 제외 ※ 기존과 변동없음 : 국비-지방비 매칭(5:5)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총액 3,400백만원)	· 국비-지방비 매칭(5:5)	· 지방비 100%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존 예산규모 5년간 보전)

출처: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사업의 지역이양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10년~2019년까지는 지자체 보조사업(국비-지방비 5:5 매칭)을 통해 지역으로 사업을 이관하다가, 점차 지역으로 전체를 이양하는



사업이 증가하였음<sup>16)</sup>

〈표 2-10〉 문화예술교육 지방이양사업 예산 현황(2018~2023)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 예산			129,998	127,546	141,126	128,184	131,912	134,993		
학교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지역이관			지방이양	지방이양		
			국고 (민간보조)	1,000	450	299.5	259	-	-	
			국고 (지자체보조)	-	2,300	1,700	1,700	-	-	
			시도	-	2,300	1,700	1,700	-	-	
			지방비	-	-	-	-	3,400	3,400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 파출소 운영 사업			지역이관		개편			
			국고 (직접매칭)	1,000	900	230	32	290	-	
			진흥원 (자체예산)	-	-	-	-	20	20	
			지방비	-	-	-	-	290	285	
	꿈다락 문화학교							신설		
			국비	-	-	-	-	-	4,045	
			지방비	-	-	-	-	-	22,045	
			지역 문화 예술 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토요 문화 학교*		이관			지방이양
국고 (지자체보조)	9,000	-				-	-	-	-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방이양	지방이양	
	국고	2,945			-	-	-	-	-	
	지방비	2,945			-	-	-	-	-	
						통합			일부** 지방이양	개편
		국비			-	13,045	13,045	13,045	-	-
		지방비			-	13,045	13,045	13,045	-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지원사업 〈꿈꾸는 예술터〉				문체부 추진	문체부 추진	진흥원 예산편성	진흥원 예산편성	진흥원 예산편성
국고 (직접매칭)	4,000				-	5,000	5,000	4,400**	-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 중 지자체보조사업 항목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과는 별도 구분 / 2022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으로 통합

\*\*일부는 지역센터 운영지원으로 분리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중 '지역센터 운영지원'은 지방이양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변동사항 없음(국비-지방비 매칭)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통계자료(2022.06.16.), 최근 5개년 교육진흥원 예산현황(2018~2021년 결산, 2022년 사업계획), 연차보고서(2018~2021.),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16) 지역이관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고 사업업무 및 권리 일부를 지역으로 넘기는 것이며, 지역이양은 예산과 관할, 권리 등을 전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뜻함. 따라서 지역이양된 사업은 중앙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2010년 지역특성화사업과 꿈다락 지역연계사업을 시작으로 지역협력사업을 시작한 후, 2019년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을 지역이관사업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지역특성화 및 꿈다락 지역연계 등 기반구축사업,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완전히 지역으로 이양하였음
-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국고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협력망 구축 등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이양은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여 더 많은 국민들을 정책대상으로 포섭하고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아직 많은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을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여 한정적인 범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상황임
- 정책 초기단계부터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문화예술교육은 사업을 개발, 확산하는 과정에서 중앙의존적인 사업운영 형태를 고착화시켰으며, 이 후 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강조되어도 중앙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여전한 상태임
- 또한 아직 지역에는 자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자원 및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로 고유한 문화예술교육을 이끌어가는 데에 기반이 매우 미약한 상태임. 중앙의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중앙의 예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 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상당수의 지역은 아직 이러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일상 공간 속에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수요와 특징을 고려해 많은 지역민에게 효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은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많은 국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중앙중심의 현재 정책전달 구조를 점진적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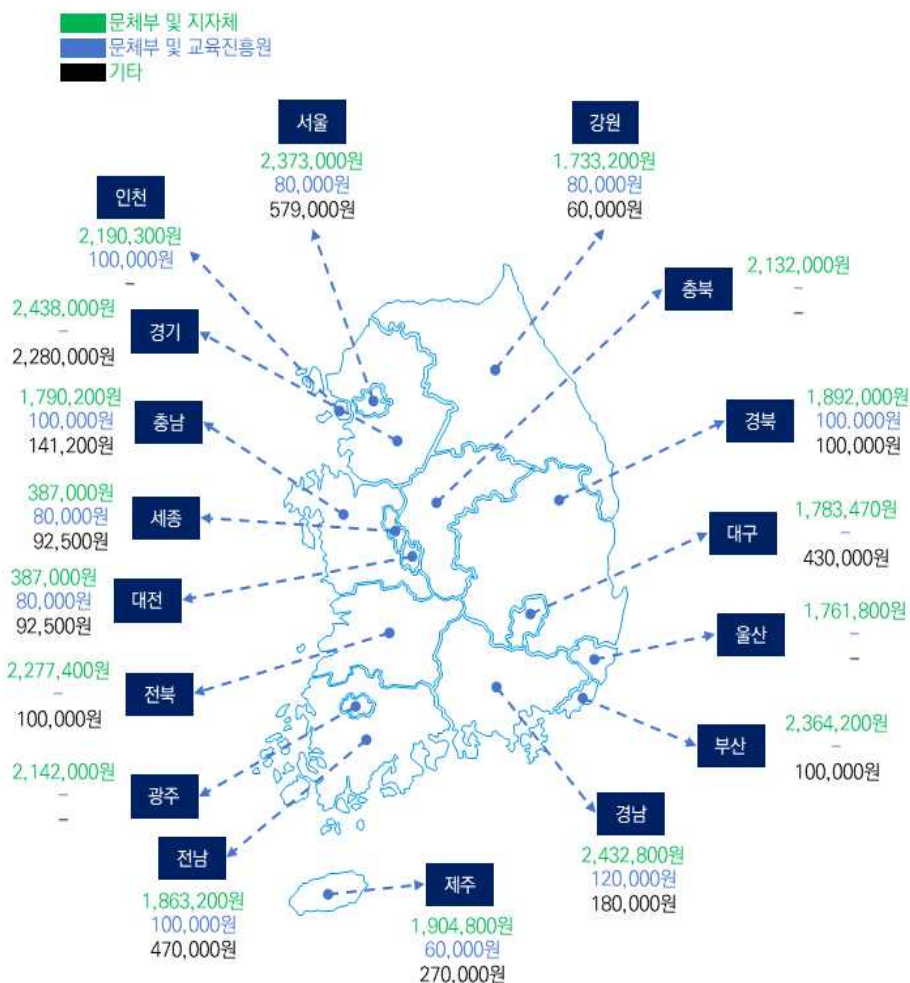
## □ 문화예술교육 정책전달 구조의 종류와 특징

-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계적으로 지역이양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중앙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태인데, 특히 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

-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과 관련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비용도 중앙에 상당히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의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문화예술교육 사업은 기획·운영하거나 예산을 매칭하는 경우도 다수임
- 이러한 경향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재정이 아직 매우 적은 규모인 것과 관계하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대다수가 중앙의 예산지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음

[그림 2-2] 지역 센터별 총예산 및 예산출처별 예산(2022)

(단위: 천원)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최근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2018~202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예술교육' 자료집, 6pg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2차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에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구성하며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17개의 광역 지자체에 지역

센터가 설치됨.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를 근거로 삼아 지역센터가 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수행함<sup>17)</sup>

- 각 지역의 사업은 예산 출처를 통해 문체부와 지자체의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과 교육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이외 기타 연계 및 자체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각 지역센터의 총 예산 규모와 예산 구성은 [그림 2-2]와 같음<sup>18)</sup>.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성에 있어 지역별로 정책전달 현황을 알 수 있음
- 중앙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단순히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사업 진행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전달하는 정책전달 구조에 따라서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 사업의 기획내용과 방향, 정책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지역의 자체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매우 적고 중앙의 예산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앙이 예산을 제공하는 방식은 정책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생태계의 모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와 같이 중앙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전달체계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방향과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앙의 정책전달 구조를 살펴보면 중앙 직접 운영, 매개자 파견, 공모사업, 국비-지방비 매칭의 네 가지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가. 중앙 직접 운영 방식

- 중앙 직접 운영 방식의 특징
- 중앙 직접 운영방식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에 주로 사용했던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모든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임
- 최근에도 많은 사업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특히 선도적 사업이나 타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형 사업, 인력개발이나 기반 구축 등과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아르떼 아카데미는 학교예술강사와 사회예술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중앙 직접 운영사업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진흥원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여 교원 및 관리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제공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이어가고 있음
- 중앙 직접 운영 방식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이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 결합하지 않고 있음. 사업의 실행을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1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최근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2018~202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예술교육' 자료집.

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최근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2018~202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예술교육' 자료집.

있으나 지역 문화예술교육센터나 지역재단이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음

○ 중앙 직접 운영 방식의 성과

- 중앙 직접 운영 방식은 정책 초기에 상당한 효과를 드러냈는데, 아직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생소한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보여주고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함
- 또한 사업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정책사업 운영 노하우를 가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타 부처 또는 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이 용이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 특히 선도적이거나 혁신적인 사업, 또는 국제교류 등 대외적인 사업 등에는 많은 노하우와 자원을 가진 중앙의 단독 운영이 훨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때문에 디지털 문화예술교육 개발 등과 같은 실험적인 사업의 경우 여전히 중앙 직접 운영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평가받고 있음

○ 중앙 직접 운영 방식의 한계

- 그러나 이러한 중앙 직접 운영의 방식은 정책 초기에는 효과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물리적으로 중앙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와 양은 한계가 있으며 우리 국민 모두가 생애주기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이러한 정책전달 구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또한 중앙 직접 운영은 정책사업의 기획과 실행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모두 중앙에만 쏠려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면에서 지역이양을 추진하는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의 기조와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의 지속은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인지도 및 접근성 개선에 상당한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와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그림 2-3] 중앙 직접 운영 방식 체계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나. 매개자 파견 방식

### ○ 매개자 파견 방식의 특징

- 매개자 파견 방식은 중앙에서 직접 매개자를 선발하여 문화예술교육 매개자가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파견하는 방식임. 이 경우 매개자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모두 중앙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파견하는 기관과의 협력에 의해 운영하기도 함
- 이 방식은 중앙 직접 운영 방식과 함께 정책 초기부터 활용했던 방식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직접 매개자를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양성교육 및 연수도 함께 진행해왔음
- 가장 대표적인 매개자 파견 방식은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의 절반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예술강사 풀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필요한 장르별 예술강사를 직접 파견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외에도 매개자 파견 방식에는 고학년의 초등생과 중·고등학교의 재학생, 기타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도 포함됨. 해당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구성된 체계를 통해 사용자에게 정책이 전달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전체 틀을 설정하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일종의 매개자로 지역 내에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함
-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예술강사 직접 파견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적합한 예술강사를 중앙에서 매칭 및 파견해 주는 구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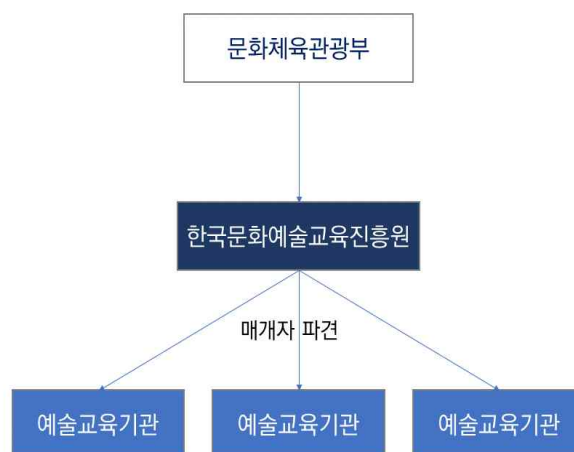
### ○ 매개자 파견 방식의 성과

- 매개자 파견 방식은 중앙 직접 운영 방식과 마찬가지로 정책 초기 단계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빠르게 자리잡게 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방법임.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매개자가 거의 전무하였던 정책초기에, 향후 우리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발전을 진행시킬 중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정책을 확산시켰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매개자는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요소로 특히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을 자리 잡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음
- 뿐만 아니라 매개자를 직접 지원하여 이들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통해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운영하는 데에 중요한 콘텐츠로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 매개자 파견 방식의 한계

- 매개자 직접 파견 방식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 동 분야에 대해 인식시키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발전에도 매우 큰 힘이 되는 역할을 하였지만, 매개자의 개별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라는 한계가 있음
- 중앙이 기획한 사업의 방향에 맞추어 매개자가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 실행까지 모두 수행하는 구조로, 모든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의 주도권을 매개자가 가지게 됨. 매개자의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성패가 결정되는 구조이며 중앙이 이를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구조임
- 중앙이 각 지역과 대상에 직접 매개자를 파견하게 되고 지역과 대상은 수혜만 받는 입장으로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개별 매개자에게 쌓이는 구조임. 즉 지역이 스스로 문화예술교육 기획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워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쌓기 어려움
- 지역에 따라서 원하는 매개자의 역량이나 종류도 다양한데, 중앙이 직접 파견하는 구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매개 인력의 양성이나 연수가 어려운 상황임.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인재상의 개발 및 연수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이러한 중앙집중형 공급구조는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대상에게 중앙이 가진 인적자원 파견을 통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을 가능하게 하지만, 강사 배치 및 노무관리, 시설-단체 매칭 등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게 하고 있음

[그림 2-4] 매개자 파견 방식 체계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다. 공모사업 지원

### ○ 공모사업의 특징

- 공모사업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책전달 방식으로 중앙에서 특정 사업을 기획·공모하면, 매개자 또는 매개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중앙은 심사를 거쳐 지원할 매개자 또는 매개단체를 선발하는 방식임. 선발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또는 매개단체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됨
- 대부분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별(취약계층(지역아동센터 등)/특수계층(군부대·교정시설 등)/생애주기), 목적별(교육/치유/온라인 등) 다양한 사업 등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실제로 2023년에 시행되고 있는 진흥원 사업 중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을 진행할 역량을 지닌 각 지역의 운영단체에 대해 공모를 내 선정함. 다만 전년도에 대비해 교육부 지정 공모 방식으로 운영되며 대상별로 지원하는 운영단체 수가 상이했던 과거와 달리, 대상 및 운영단체별로 최소와 최대 수가 설정된 일반 공모 방식으로 변경됨. 또한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단체가 직접적으로 시설을 섭외한 뒤 공모를 신청하도록 공모방식을 운영함
- 개별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조성 지원 사업도 이러한 공모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을 받아 2022년까지 14개 광역시도에 총 22개 기초 지자체에 거점 설치·운영을 지원하였음

### ○ 공모사업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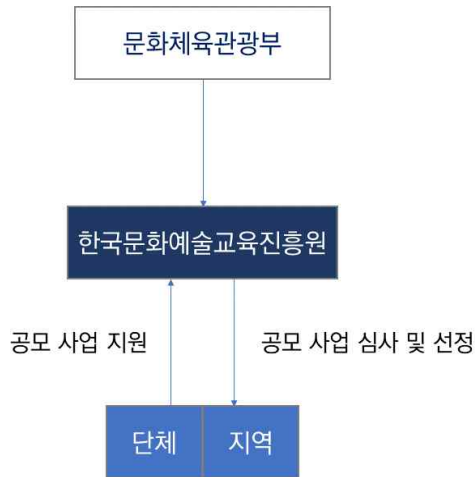
- 공모사업은 중앙이 진행하고자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을 가장 잘 반영하여 정책사업을 기획·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
- 또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목표로 하는 특정 계층·집단과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으로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모사업은 중앙이 운영하지만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지역 또는 매개자·단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수요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위의 중앙 직접 운영 또는 매개자 파견보다는 수요자 맞춤형이 일부 가능한 부분이 있음
- 이러한 공모사업은 예산의 한계로 개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도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많은 지역에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인식하게 하고,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방법임



## ○ 공모사업의 한계

- 그러나 공모사업은 중앙이 정책적 목표에 맞추어 기획한 ‘정책사업’에 맞추어 공모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수요자 맞춤형’이 아닌 ‘공급자의 목표에 맞춘’ 사업운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매개자·단체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이 기획한 공모사업의 기획의도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음. 지역민의 수요를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하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공모사업의 기획의도에 초점을 맞춘 기획이어야 선정될 수가 있기 때문임
-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원 선정이 된 이후에 프로그램 참여자, 즉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최종수혜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정책수요자인 지역민을 염두해 기획·운영되기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우선이고 프로그램 실제 수혜자를 추후에 모으는 방식임. 이는 앞서 살펴본 중앙 직접 운영 또는 매개자 파견과 마찬가지로 ‘중앙공급형 구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 공모사업 방식은 매우 구체적으로 정책대상과 사업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구체적인 요건에 맞출 수 없는 지역은 이러한 공모사업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또한 구체적으로 지정된 사업의 내용은 지역의 다양한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져오므로 수요자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하기 어려움
- 특히 이러한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중앙의 예산지원이 있을 때만 운영되는 단발성 이벤트와 같이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특징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독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단발성 이벤트와 같은 운영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운영과 관련한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과 깊이 관계하지만, 중앙의 기획의도에 맞추어 사업을 단발성으로 기획하도록 하는 방식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연구·개발하고 자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게 하는 동력으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2021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사업종료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가 4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악한 재정적 상황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공모사업 자체가 중앙의 기획의도에 맞춤형될 수밖에 없어 지속적 활용이 어려운 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아울러 이러한 공모사업은 앞서 살펴본 다른 중앙집중형 공급구조와 마찬가지로 재정적 상황이 열악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소액다건으로 제공되는 지원의 한계와 반복적인 지원신청으로 특정 매개자·단체가 보조금을 중복수령하게 된다는 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림 2-5] 공모사업 지원 방식 체계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라.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체기획 지원

-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체기획 지원의 특징
  -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체기획 지원 방식은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중앙에서 지원한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지원비에 ‘자체 사업’의 기획·운영비 지원을 포함하고, 광역센터는 이를 활용해 지역주민의 수요와 특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방식임
  -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인데,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일부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광역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임. 중앙은 광역의 사업 기획·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며, 광역이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의 수요에 맞게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함
-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체기획 지원의 성과
  -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체기획 지원 방식은 광역이 지역주민의 특징과 수요를 조사하고 이에 맞춤형하여 기획·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요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의 생애주기적인 공급이라는 정책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생애주기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 등의 정책수요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정책수요자인 지역민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기획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임

- 공모사업 방식의 경우에도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기획하고자 하지만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앙의 기획의도에 부합해야만 공모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민의 수요가 제1의 고려사항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음
  -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공급은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보다 더 다양한 상황, 더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매우 구체적인 지역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획·운영이 가능함. 이러한 지역의 자체기획에 대한 지원은 예산지원이 이미 전제가 된 상황에서 운영되므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역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기획을 가능하게 함
-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체기획 지원의 한계
- 그러나 이러한 지역 자체기획 지원은 이미 예산지원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중앙의 예산의존도가 매우 큰 지역 문화예술교육 상황을 고려하면 지역 자체기획은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진행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아직 많은 지역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깊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역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조성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지역민의 수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할 인적자원,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을 지원할 네트워크 조직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운영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어 많은 지역에서 폭넓게 진행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함

[그림 2-6] 자체기획 지원 방식 체계



출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표 2-11〉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중 공모사업 지원 방식 현황

구분		협력기관	지원 내용	대상	시설	소관 부서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전 생애 대상	선정된 시설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	5개 지역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 제공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지자체	선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민·지역 연계팀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한국 장애인 복지관협회	장애인 : 266개 시설, 298개 프로그램 아동 : 75개 시설, 158개 프로그램 노인 : 234개 시설, 234개 프로그램	장애인	전국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아동	전국 아동복지시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	전국 노인복지관	
부처 간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	군장병 문화예술교육지원	국방부 정신전력 문화정책과	(교육시설) 연간 60시수(최소 20회차 이상, 회당 3시간 이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운영단체) 프로그램당 13.5백만원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 등	선정된 교육시설	교육 나눔팀
	교정시설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무부 사회복귀과		교정시설 재소자		
	치료감호소 수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무부 치료처우과		법무부 치료처우과		
	소년원 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법무부 소년보호과		소년원 수용 청소년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교육시설) 연간 50~70시수(최소 17회차 이상, 회당 2~3시간 이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운영단체) 프로그램당 13.5백만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이용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아동권리 보장원	(교육시설) 연간 60시수(최소 19회차 이상, 회당 2~3시간 이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운영단체) 프로그램당 7.5백만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	경찰청 및 산하 기관	문화예술교육 및 예술치유, 대관 프로그램 등 운영	해당 지역 지역주민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예술단체,	시민·지역 연계팀

					관할 경찰서	
사각지대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	(교육시설) 연간 60시수 (최소 20회차 이상, 회당 2~3시간 이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획연구 프로그램 운영 (운영단체) 프로그램당 13.5백만원	문화취약계층 (상이군경, 미혼모,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등)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찾아가는 예술 처방전	교육부	1개 협력 부처/기관, 60개 시설, 60개 프로그램, 1033명 지원	아동 청소년	선정된 교육시설	가치 확산팀
		치매안심 센터	32개 시설, 32개 프로그램, 368명 지원	장애인/치매 위험군 대상 및 가족		
		정신건강 복지센터	26개 시설, 26개 프로그램, 415명 지원	정신 건강 상담 수요층		
	어디서든 예술치유	위탁운영	대상특화 예술치유 워크숍, 대국민 대상 예술치유 프로젝트 등 운영(총 15회, 1,500명 내외)	폐쇄시설 이용자 및 일반 국민		
취약 계층 아동 청소년 예술 활동 지원	꿈의 오케 스트라	-	거점기관 당 최대 6년간 오케스트라 교육 지속 지원	아동·청소년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비율 60%이상 구성)	선정된 지역 내 거점 기관	
	꿈의 댄스팀	국공립 무용기관	무용교육모델 개발, 지역 연계 무용교육 운영	아동·청소년 (사회·문화적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구성)	선정된 지역 운영기관	

자료: 지역자율형 포괄보조 사업(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연구 294p 이하) 참고.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기준 작성

## 제2절 |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 및 전달체계의 성과 및 한계

### 1. 낮은 인지도와 특정 계층에 집중된 정책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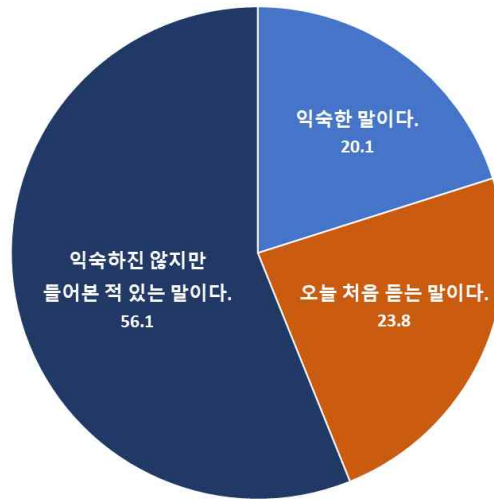
-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우리 문화예술 정책의 주요 분야로 빠르게 자리 잡았으며,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활동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자아실현, 삶의 질 향상, 공동체성 함양 등 다양한 정책적 효과성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함
- 또한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응하는 효과성 높은 정책 활동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주목을 받아옴
-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은 매개자 양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앙-지역 정책전달체계의 구축 등 해당 정책의 기반을 폭넓게 구축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목표로 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에 큰 힘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중앙 주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기간의 정책기반 구축과 외연확대에는 크게 기여해왔으나, 많은 노력에 비해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인지도나 체감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최대 76.2%(익숙한 용어 20.1% + 들어본 적이 있는 용어 56.1%)로, 오늘 처음 들어본 말이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23.8%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80%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아직 우리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전 국민적인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sup>19)</sup>
  - 조재현 외(2019)는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부족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원래 있었던 단어라기보다 정책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라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문화교육, 예술교육 등 유사용어로 인지하는 경우도 많았음. 즉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확보된 것으로 짧은 기간 크게 인지도를 넓혀왔으나 아직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에는 미흡한 상황임<sup>20)</sup>

19)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 조재현 외 (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그림 2-7]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

(단위: %, N=5,164)



출처: 조재현 외 (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표 2-12〉 문화예술교육 참여율

(단위: %)

구 분		사례 수 (명)	참여	미참여	계
전체		(10,042)	12.2	87.8	100.0
성별	남성	(4,955)	9.8	90.2	100.0
	여성	(5,087)	14.6	85.4	100.0
생애주기	유아(3~6세)	(645)	49.5	50.5	100.0
	아동(7~12세)	(913)	63.6	36.4	100.0
	청소년(13~18세)	(906)	24.1	42.6	100.0
	청년(19~34세)	(1,825)	7.3	92.7	100.0
	중년(35~49세)	(1,907)	5.4	94.6	100.0
	장년(50~64세)	(2,219)	7.3	92.7	100.0
	노년(65~79세)	(1,627)	7.0	93.0	100.0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참여율 면에서도 전 국민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22 문화예술교육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2.2%로 인지도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임. 조사기간이 아직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코로나19 기간의 후반부인 것을 감안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것을 고려하면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국민적인 인지도 및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제한적인 정책대상의 설정 및 정책실행과 큰 관계가 있음
  -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정책대상은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연령별로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계층적으로는 취약·소외계층이었음
  - 생애주기별로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참여율은 역시 특정 연령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표 2-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아동(7 ~ 12세)이 63.6%로 가장 높았음. 이외에 유아(3 ~ 6세)가 49.5%, 청소년(13 ~ 18세)이 24.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참여율을 보임. 그러나 청년(19 ~ 34세) 7.3%, 중년(35 ~ 49세) 5.4%, 장년(50 ~ 64세)과 노년(65 ~ 79세)은 각각 7.3%와 7.0%로 한 자리수로 참여율이 기록됨<sup>21)</sup>
  - 사회문화예술교육도 취약·소외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도 시행되고 있으나 예산 비중에 큰 차이가 있으며 여전히 취약·소외계층이 중점 정책대상임
-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의향율을 살펴보면 참여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의향율에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 「2022년 문화예술교육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9.4%는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는데 이 중 과거에 참여경험이 있는 이들은 83.2%, 경험이 없는 이들은 24.9%만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보면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경우 의향율이 높고, 그렇지 않은 대상의 경우 의향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문화예술교육의 참여경험 여부가 이들의 향후 참여의향에 큰 영향을 제공하는 것임
  - 이는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기회가 폭넓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의 빈익 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줌. 즉 참여기회가 거의 없었던 국민들은 계속해서 문화예술교육 참여에 대한 수요가 낮을 것이며, 참여기회가 있었던 국민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창출되어 정책이 기존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치우쳐져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지기반도 낮게 구축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 문화예술교육이 전 국민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문화예술교육 경험기회를 가져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21)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보고서.



[그림 2-8] 향후 문화예술교육 참여 의향률

(Base : 만 13세 이상 응답자, 단위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아동·청소년, 취약·소외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은 것은 한정된 정책자원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이 높거나 취약한 대상에게 더 우선적으로 배분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경우 정책 초기부터 어린 시절의 예술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정책대상자로 꼽혀왔는데, 이 때문에 예술강사 파견사업을 비롯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집중적인 투자 대상이 되어왔음
  - 취약·소외계층 또한 다양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정책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로 선정하는 것은 공공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으며, 민주적인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의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짐
-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을 정책 우선대상으로 삼고 정책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것은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의 저변이 사회적, 경제적 계층과 상관없이 폭넓게 형성되게 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현재의 아동·청소년이 성인기에도 문화예술 경험을 통해 창의력을 기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자본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가지고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상상력을 기르고 예술에 대한 문해력을 향상시키며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함에 있음
  -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는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을 제외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황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중앙정부가 정책 우선대상에게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거나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들에게 중점 투자하는 것을 통해 사실상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

던 것이나,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기반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를 발표하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일부 실시되었으며, 특히 신증년(생애전환), 노인, 유아에 대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음. 지역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이 실시되기도 함
  - 특히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중앙-지역 매칭을 거쳐 현재는 지역으로 이양되었는데, 아동·청소년과 함께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의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매우 작은 규모임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대상과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확대할 대상이 될 그 동안 미흡했던 대상인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문화예술교육 미참여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들 대상은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징이 기존의 대상보다 더욱 다양한 특징을 가지므로 이들의 수요와 상황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함
  - 특히 지역마다 일반 국민들이 가진 여건이나 관심사가 크게 차이가 있는데, 연령적·계층적 특징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징, 사회적·문화적으로 다양한 특징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특히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매우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것이 필요함. 문화예술교육 미참여한 사람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제약요인을 살펴 보면, 시간적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 부족도 큰 원인 중 하나였음
  - 「2022 문화예술교육 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미참여한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전 생애 국민 공통적으로 ‘시간이 없어서’였고, 그 다음으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였음
  - 특히 참여율이 저조한 청년, 장년, 노년은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은 청소년보다 수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의 부족에 대한 비율이 높았는데, 우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나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2-13〉 문화예술교육 과정 미참여 이유 1위(미참여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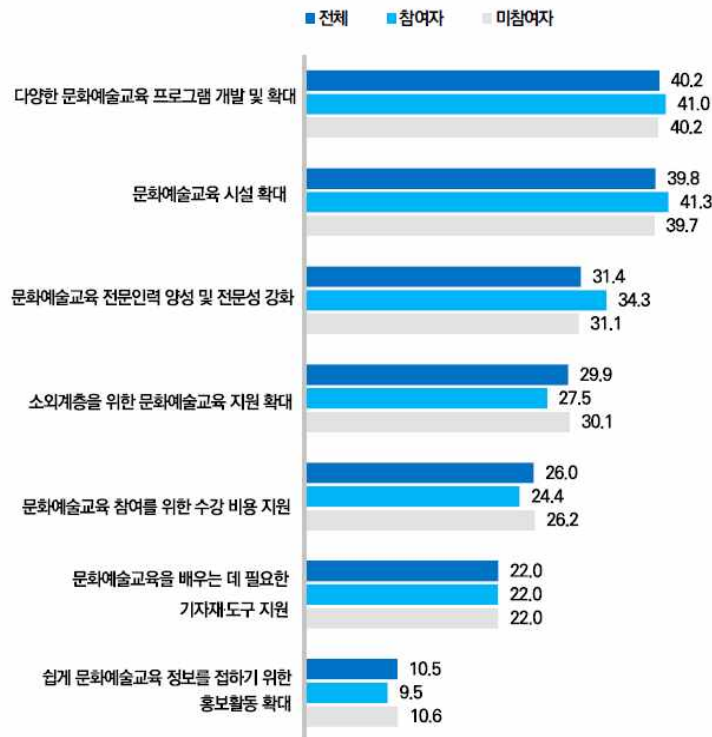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가까운 거리에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전체		(7,779)	50.8	22.2	8.7	6.0	5.0
생애주기	청소년(13~18세)	(706)	66.8	16.6	6.6	3.6	3.5
	청년(19~34세)	(1,692)	54.3	24.4	6.9	5.7	4.0
	중년(35~49세)	(1,802)	58.4	18.8	7.9	5.0	4.4
	장년(50~64세)	(2,065)	48.7	22.1	10.5	6.3	5.4
	노년(65~79세)	(1,514)	30.6	26.8	10.2	8.3	7.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9] 향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1+2순위)

(Base : 만 13세 이상 응답자, 단위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확보하고 폭넓은 지지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을 접하지 못했던 대상들을 중심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추구해왔던 생애주기적 정책 보급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특히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보급의 미흡은 국민의 해당 정책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가장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이 낮은 청년, 중년, 장년, 노년 등은 국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참여가 낮다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나 지지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음
-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문화예술교육 미참여자의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이 보다 쉽고 원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기획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수요와 상황을 가진 정책대상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 또한 지역에 따라 정책대상이 처한 상황과 요구도가 매우 다른데, 일반 국민의 경우 그 수요가 매우 다양해 이들을 타깃으로 한 정책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좀 더 열린 형태로 연구·개발하고 지원체계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중앙의 일괄적인 기획보다는 지역이 스스로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요자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가 있음

## 2. 중앙공급형 매개자 중심 정책전달 체계의 한계

-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아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시기에 문화예술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이해시키고 실행할 주체로서 ‘매개자’의 양성과 지원에 정책초기부터 많은 투자를 하였음
  - 매개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실제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주체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실행에 의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임
  -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을 중요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매개자의 역할은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자원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초기부터 현재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대상임
-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 직접 운영 방식, 매개자 파견 방식, 공모사업 지원, 광역센터 자체기획 지원 방식의 정책전달 체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중 광역센터 자체기획 지원 방식은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른 세 가지 방식이 주된 방식이었음
  - 중앙 직접 운영 방식, 매개자 파견 방식, 공모사업 지원은 중앙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책주도권을 가지고 기획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정책초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정책 프로그램이 이 방법을 활용해 운영되었음
- 이러한 ‘중앙공급형 구조’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이 아직 생소하고 저변이 미약했던 우리나라에 단기간 내에 매우 효율적으로 정책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었음
  - 무엇보다 대규모 국고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많은 노하우와 행정역량을 가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은 지난 20여 년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아직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매우 미흡한 각 지역에 필요한 지원을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서서히 구축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지역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운영을 위한 재정적, 인적, 사회적 자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인데, 중앙의 매개자 파견 또는 공모지원 등의 방법은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중앙공급형 정책전달체계는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 국민적인 인지도 및 체감도를 미흡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함. 정책효율성 측면에서도 하나의 기관이 다양한 지역, 계층, 연령의 모든 수요와 상황을 충족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집중된 정책에서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보급을 목표로 하면서 기존의 특정 연령이나 계층보다 더 다양

한 대상을 상대로 문화예술교육을 공급해야 하는 요구가 생겨났는데, 이 대상이 되는 다양한 연령, 계층, 지역의 일반 국민들은 기존의 주요 정책대상보다 매우 다양한 지역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대상자들에 대한 세분화와 이들의 수요에 맞춤형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혹은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이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향유하게 될 공간적 기반인 지역의 특징 및 수요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한데, 지역마다 그 특징이 매우 다양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맞춤화 하여 기획·운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움

○ 이에 그 동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그 주도권을 지역에 상당히 제공하고 중앙은 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및 지역 확산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프로그램 주도권을 넘겨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의 대표적 사례임. 기존의 사업 추진체계와 달리, 중앙이 지역에 상당한 권한은 부여한 덕분에 지역은 주체적으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를 기획하여 운영할 수 있었음. 중앙이 주가 되어 공급했던 형태와 달리 중앙은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한 뒤, 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을 넘김.
- 이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발휘해 사업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내 예술시설을 활용하여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기획을 설계함. 이 과정에서 중앙은 부수적인 지원만을 제공하여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함. 그 결과, 지역민의 수요에 특화된 일반국민 대상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음
- 또한 과거 진행되었던 문화파출소 사업의 경우도 공모를 통해 지역 내 사업 운영단체를 선정해 기획부터 운영까지의 권한을 일임함. 문체부와 진흥원은 경찰청과 사업운영에 있어 협력하며 전반적인 방향성을 수립할 뿐, 구체적인 운영과 실행은 지역자치단체와 지방경찰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문화재단과 민간예술단체, 그리고 관할 경찰서로 이어져 운영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이 과정에서 지역에 상당한 주도권이 부여되었고 진흥원은 경찰청과 연계하여 오직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중재 및 네트워킹만을 지원함. 그 결과, 이전과 다르게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중앙공급형 전달체계가 갖는 한계를 상쇄하여 지역 자체의 역량에 적합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적합한 사업 지원 체계가 설계됨
- 또한 코로나19 기간에 보급되었던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 단체와 기관이 주가 되어 운영됨. 이 또한 위 사례들과 같이 선정된 지역 내 운영 단체 및 기관에 중앙이 가졌던 사업 주도권을 넘기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교육시설과 매칭되어 운영됨.
- 이와 더불어 공모 과정에서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 서비스의 품질이

상향되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기획 및 운영에 대해 매개자가 갖는 책임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함. 실제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 지역 내 전문 인력과 관련 센터가 주도하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특성에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프로그램 수강자들은 높은 만족도를 드러냄

- 이렇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주기 프로그램을 지역 주도로 기획하고 중앙은 이를 지원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정책대상으로 하는 일반 국민의 수요와 상황은 기존의 정책대상보다 더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단순히 ‘일반 국민’으로 통칭하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경험해 온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매우 다르며 연령과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서도 매우 세분화되어 조사되어야만 함
  - 이렇게 다양한 상황과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해당 지역에 근거를 둔 문화예술교육 단체 또는 기관이 더욱 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들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함
- 그러나 이러한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예산 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며 사회문화 예술교육 전체에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4〉 일반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예산 현황(2018~2023) - 진흥원 사업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총 예산		129,998 (100)	127,546 (100)	141,126 (100)	128,184 (100)	131,912 (100)	134,993 (100)
일반 국민 대상* 사업 예산		3,715 (2.86)	3,920 (3.09)	4,650 (3.29)	5,415 (4.22)	10,707 (8.12)	12,457 (9.23)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 일반 국민 대상 사업		3,715	3,920	4,650	5,415	10,707	12,457
	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 및 지역 확산	3,295	3,420	3,550	2,015	1,900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420	420	1,000	900	-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	6,067	6,853
	창의예술교육 지원	-	100	100	-	-	-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	-	-	2,000	2,000	2,000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	-	-	500	740	3,604

\*유아 및 학령기(아동·청소년) 대상을 제외한 대상(전 생애, 성인, 노인, 청년 등) 사업 기준으로 집계

출처: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표 2-14〉의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

- 육 사업 예산은 전체의 2% 내외로 매우 미미한 비중임을 볼 수 있음
  - 또한 후술할 중앙의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지역의 자율성 및 전문성 축적에 한계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때문에 일반 국민 전반에 걸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성인의 정책체감도가 더욱 낮음
- 또한 중앙공급형 정책전달체계는 중앙이 강사의 선정과 파견, 배치, 노무관리, 공모사업의 기획과 심사, 관리 등 많은 부분에서의 행정력을 과도하게 소요되게 하는 구조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수록 한계점을 가지게 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운영되었던 시기에는 이러한 중앙공급형 구조가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정책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지역 또한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 생활권으로 확대해 운영하고자 할 때 하나의 중앙 기관이 모든 운영을 관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이양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수요 반영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정책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것이기도 함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목표로 하는 전 국민이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창조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전 국민의 다양한 상황과 요구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구성과 함께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전달 체계의 고민이 필요함
  - 현재의 중앙공급형 지원방식은 수요자의 요구를 조사하고 이에 대응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기보다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지역은 예산이 지원되면 이에 맞춰 수요자를 모으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중앙공급형 지원방식은 다양한 수요자의 수요와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임.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관심을 세심하게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후방지원하는 형태가 다양한 수요 충족에 더욱 적합한 방식일 수 있음



### 3. 공모사업 방식 지원의 한계

-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같이 예술강사 직접 파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공모지원의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공모사업은 중앙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다양한 목적과 대상의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공고하면, 지역의 매개자·단체 또는 기관이 지원신청을 하고, 중앙의 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지역 현장을 지원하는 방식임
  - 지역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이러한 공모지원 방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지원 사업이 공모지원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이러한 공모지원 방식은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와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특히 지역 현장에서 공모사업 지원의 과정에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관련 생태계를 조성해 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함
- 그러나 중앙에서 기획하는 각각의 공모사업은 사업의 목표, 의도, 대상이 정해져 공모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성격은 중앙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요구’에 맞춘 지원임
  - 공모사업 지원에 선정되어야만 예산지원을 받고 실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예산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모사업의 기획의도에 맞게 사업을 기획해야 함. 물론 사업공모에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특징을 잘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의 목표나 대상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지역에서는 중앙의 공모사업 조건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미리 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지역도 많아 신청단계에서 이미 제외되는 경우도 있음
- 중앙의 의도에 맞춘 하향식(Top-down) 방식의 기획이 이루어지다보니,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대상자의 수요에 맞추어 기획을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도 있음
  - 공모사업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의 기획을 가능하게 한다면 수요자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열악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환경과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구조는 중앙의 예산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아직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미흡한 상황에서 중앙의 예산지원이 거의 유일한 예산인 경우가 많음. 현재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만 운영이 가능한 현실임
  - 때문에 중앙의 예산지원이 있을 때에 한정하여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발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고취하고 이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나 기관이 공고하는 개별 프로그램 정보를 접하고 참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상황은 다르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기는 어려움
  -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이 지역민의 수요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획한 것이 아닌 경우도 있어 지역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음
- 이와 같이 공모방식은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지만, 중앙의 일괄적인 지원공모 방식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상황을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보다 지역 내의 다양한 실수요자를 발굴하고, 지역의 현장전문가로 하여금 이들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전달 접근방식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하나로 ‘간접지원’ 방식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 동안 중앙 정부가 직접 예산 집행을 기획·운영하던 중앙공급형 운영방식이 아닌,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를 촉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상향식 지원방식을 제안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서비스’의 개념 도입이 검토되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돕는 사회서비스의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정책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 4.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추진방향과 사회서비스 개념 도입의 검토

- 2018년 1월 발표된 최초의 문화예술교육 법정계획인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은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비전으로 발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였음
  - 제1차 종합계획은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구조를 벗어나 지역 중심의 정책 생태계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정 연령이나 계층 중심이 아닌 다양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를 중요시 함
  - 특히 추진전략 2로 ‘수요자 중심 교육 다각화’를 설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제1차 종합계획은 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중년, 장년·노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음
- 제1차 종합계획 이후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지역이양이 더욱 본격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음
  - 그러나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광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 생태계 구축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에 이전에 크게 증가하지 못해 다양한 정책대상을 위한 공급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였음
  - 여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예산이 크게 증가되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환경의 변화도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었음
- 이후 2023년 발표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은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 비전을 발표하고, 제1차 종합계획 실행에서 미흡했던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다각화를 더욱 강조하였음
  - 제2차 종합계획은 ‘공정한 문화예술교육 접근 기회 보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체감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책의 수요자를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수혜가 국민 모두에게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의 형태를 고안하고자 함
- 특히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일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일상 공간과 생활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쉽게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던 그 동안의 정책방향을 반성하고, 실수요자들이 더 가까운 공간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며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여 자신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제2차 종합계획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인증)제 도입, 생활권 내 문화예술교육 활용 공간 지원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율 기반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2)에서는 더 많은 국민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맞춤형한 대응을 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도와 연계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특정 연령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로서 위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음
-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사회서비스를 문화예술교육에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로 규정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고자 함임
- 이를 위해 김혜인·차민경(2022)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수요자 중심 정책서비스 제도와 연계할 것을 제시했는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내 문화예술교육 수강료의 인정, 문화누리카드 가맹서비스에 문화예술교육 분류 신설, 문화누리카드 내 문화예술교육 강좌이용권 지원 신설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음
- 이러한 제도와 연계는 수요자가 직접 자신의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수요자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지원함
- 이는 기존의 중앙이 프로그램을 모두 기획하고 수요자에게 내려보내는 방식과 달리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지원으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와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동적으로 맞춤형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그 동안 문화예술정책 안의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위치를 확보하고 운영되었는데, 이러한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의 위상확보는 장점도 있으나 문체부 내 다른 정책 분야와의 협력을 미흡하게 하기도 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개념의 도입은 이러한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으며 대상 중심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 모두에게 접근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2022)에서는 기존의 문체부의 수요자 지원제도와 연계할 것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였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연계하는 것도 더욱 다종다양해지는 우리 국민들의 수요와 지역이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열린 방식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음

-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정책인 문화예술교육이 더 많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더 다양한 지역과 대상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양적·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 전달 방향의 전략적 선회가 필요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문화예술 정책의 본질적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과거의 문화예술 정책이 예술가와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수요자 정책은 후자인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더욱 맞추고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수요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기획하여 운영하는 방식은 수요자 지원정책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없음. 보다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수요자 스스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자신에게 필요하고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수요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고려해볼만한 개념으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전달 체계의 한계점을 가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달체계 개선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구조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더 많은 국민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고찰하고자 함

## ■ 제3장 ■

---

### 사회서비스 제도의 특징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 도입의 쟁점 분석



## 제1절 |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고도화의 시도

### 1.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념 및 특징

#### □ 사회서비스 제도의 개념 및 유형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또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제도는 1980년대 중반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처럼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을 목표로 운영됨)에 따르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뉨
-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법에 의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이며, ‘공공부조(公共扶助)’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함<sup>22)</sup>

[그림 3-1]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출처: 이규석 외(200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예술경영지원센터. 97p

- ‘사회서비스’는 다양한 개념과 범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

2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 제3호



하게 정의되며 시대 또는 국가마다 포함되는 범주에 차이가 있음. 사회서비스의 최협(最狹)의 개념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에서부터 광의의 개념인 의료, 교육, 주거 등을 포괄한 모든 공공서비스를 지칭하기도 함

- 협의의 개념인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국가 지원의 영역으로 이동시킨 것을 의미함. 반면 광의의 의미는 가정에서는 제공하지 않던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 포괄함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도 포괄함
  - 1960~70년대의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책을 포함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협의의 개념을 활용에 대인 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미국 역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단일 체계로 운영되어 오던 사회서비스 산업 분류체계를 대상과 기능에 따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있음(강혜규 외, 2012)
- 우리나라에서는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회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왔음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 정의함<sup>23)</sup>
  -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단순히 가정에서 진행되었던 돌봄의 기능을 국가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개념 정의는 관련 법률이나 기준마다 포괄하는 수준과 내용이 상이하며, 사회서비스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나의 개념으로 합의가 되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에서 “사회서비스”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보다 더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한정하고 있음

2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4호

- 사회서비스 영역의 대표적인 국가승인통계인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는 「사회서비스기본법」에 준하여 돌봄부터 주거, 문화, 환경까지를 아우르는 18대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욕구에 관한 수요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적용하여 8대 영역의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를 활용하고 있음(박세경 외, 2019)
- 한편 후술하겠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가 전자바우처 형태로 시작됨에 따라 바우처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특정 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이해하기도 함(김은정, 2012)

〈표 3-1〉 2023년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의 서비스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
성인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노인생활시설(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이용,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방문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식사제공 서비스(무료급식소, 도시락·밀반찬 배달), 가사지원 서비스, 차량지원(이동지원), 복지용품 지급 등
	장애인 돌봄 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재가돌봄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등), 주간활동 지원(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식사제공 서비스(무료급식소, 도시락·밀반찬 배달), 가사지원 서비스, 차량지원(이동지원), 보조기기(휠체어, 보행기, 보완 대체의사소통(ACC) 기기 등) 지급 등
	기타 성인 돌봄 서비스	간병 서비스, 식사제공 서비스(무료급식소, 도시락·밀반찬 배달), 가사지원 서비스, 차량지원(이동지원) 등
아동 돌봄	출산지원 서비스	산후조리서비스(산후조리원 혹은 산후조리사 이용), 산모·신생아 영양관리 서비스(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홈헬퍼 등), 모유수유 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현물 지원(첫만남이용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등
	보육 서비스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이용, 재가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여성장애인 홈헬퍼 등),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방과후 활동 서비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발달장애인가과후활동서비스 등),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지역아동센터 이용, 방과후어린이집 이용, 재가돌봄서비스 등
건강	신체건강 서비스	운동, 금연, 절주, 식생활 관리를 위한 상담·교육 지원(금연 상담, 영양 상담 및 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생활체육 서비스(찾아가는 생활체육), 스포츠강좌 지원(스포츠바우처), 스포츠클럽 이용 등
	정신건강 서비스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이용, 각종 상담(아동상담, 부부상담, 사례관리, 가족상담 등), 중독(알콜·약물·인터넷·게임) 관리 서비스, 우울 및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일반아동 대상 음악·놀이·미술 등 심리치료, 학대 및 폭력 피해(아동, 노인, 성·가족·학교 등) 관련 지원 서비스 등
	재활 서비스	작업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언어재활(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발달재활(발달재활 서비스 등), 아동발달 관련 음악·놀이·미술 등 심리치료, 기타 재활서비스 등
교육	아동 교육지원 서비스	아동 학습지원 서비스(학습지, 학원, 공부방, 개인교습 등 포함), 방과후 교육지원 서비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 등) 등
	성인 교육지원 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평생교육원·주민센터·문화센터 등) 수강,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학원 교육 포함), 부모교육 서비스, 사회교육 서비스, 정보화교육 서비스 등
	정보제공 서비스	재무설계·노후설계 지원 서비스, 세무·법률지원 서비스 등

대분류	중분류	세부사업
고용	고용 서비스	취업알선, 구직지원 및 상담, 사례관리 등 서비스 이용
	직업훈련 서비스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업장의 직업훈련 서비스 및 재취업 교육 서비스 이용,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등
	창업지원 서비스	창업 공간지원, 창업 컨설팅 등 ※ 창업 및 운영 자금 대출, 창업 관련 임금 지원 등 현금지원 서비스는 제외
문화	문화 및 여가 서비스	문화/예술 관람(영화관람, 미술관, 박물관 이용 등),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이동 영화관, 취약계층 예술 지원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악기 지원 서비스 등
주거	주거지원 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주택 내 무상수리 및 부품교체), 에너지 효율 개선 서비스(단열, 창호교체, 난방용품 설치 또는 교체), 주택 개보수 및 집수리, 이사지원,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관련 교육서비스, 청소 및 방역 등 ※ 주택공급 및 주거지 제공 서비스는 제외
환경	환경 서비스	노후 경유차량 저감장치 지원 서비스, 라돈 측정기 대여, 미세먼지 대비 서비스(마스크 지급, 공기청정기 지급 등), 친환경 물품 지원 서비스, 환경성 질환 예방서비스, 석면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

출처: 김유희 외(2023), 「2023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예정

〈표 3-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의 대분류 및 포괄 범위

대분류	대분류 포괄 범위(정의)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재활·상담 등 사회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시설·협회 등의 산업 활동
돌봄서비스업	의료 관리가 필요한 노인·장애인 요양보호 및 단순 돌봄대상자에 대한 가정·비거주·거주시설 보호 산업 활동
상담·재활 서비스업	상담서비스와 재활을 위한 의료서비스 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건강지원 서비스업	재활서비스 외의 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공교육을 통한 유아·청소년기의 신체·사회적 발달 지원 및 평생교육·직장교육 등을 통한 역량 개발 지원과 관련된 산업 활동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사회서비스업	문화·예술·체육 활동 관련 국공립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관련 단체·시설 및 문화·예술·체육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활동
사회 참여 지원 서비스업	피고용자를 파견하거나 중개·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 또는 직업재활 등을 통해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산업 활동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노동 등 사회서비스와 사회보장 관련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된 산업 활동

출처: 보건복지부(2013),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이렇게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모호성은 실제 사회서비스 정책 현장에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개념, 범위, 보장에 대한 해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정책사업을 운용하는 관련 부처들의 사업의 운용방식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9년 범 부처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기준에 준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268개로 약 50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강혜규 외, 2019)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욕구나 충족 수준에 대한 판단에

- 어려움이 있으며 서비스 연계 및 전달체계의 단절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사업의 중복·편중 등의 현상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 지적됨(안수란 외, 2018)
- 이에 사회서비스에 관한 관련 법제적 정의를 재검토하고 유관 법률을 정비하여 정부사업 관련한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아직 논의되지 못한 상황임(강혜규 외, 2019; 박세경 외, 2021)
  - 사회서비스의 정의와 통용 범위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대응으로서 돌봄을 핵심 영역으로 하는 대인서비스의 특성과 일정 정도의 국가 혹은 공공 재원의 개입에 따른 ‘공공성(general interest)’이라는 특성이 혼재한다고 볼 수 있음(김은정, 2008)
  - 또한 사회서비스는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는 달리 서비스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공공부조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사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는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투자적 성격(Social investment)을 드러내고 있으며,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일상생활 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sup>24)</sup>
  -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국민은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제공하고 있는데 임신·출산부터 노후·임종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생활 내 복합적 욕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즉 탄생 시점부터 죽음까지 전 생애에 걸쳐 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sup>25)</sup>
  - <표 3-3>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볼 수 있는데, 다양한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외·특수계층,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과 일반 국민까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포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2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홈페이지, 2023.8.29., <https://url.kr/9bhq61>

2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홈페이지, 2023.8.29., <https://url.kr/9bhq61>

〈표 3-3〉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제공영역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고령	노인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지원</li> <li>• 고위험 임신부 지원</li> <li>•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서비스</li> <li>• 아이돌보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아동센터</li> <li>• 드림스타트</li> <li>• 방과후 돌봄</li> <li>• 놀이 문화</li> <li>• 심리상담</li> <li>• 영양, 신체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일자리</li> <li>• 노후설계 지원</li> <li>• 운동 등 건강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li> <li>• 노인 돌봄</li> <li>• 치매 돌봄</li> <li>• 노인 일자리</li> <li>• 지역통합 돌봄</li> <li>• 노인건강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스피스</li> <li>• 장사</li> </ul>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

〈표 3-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

사업명		시작 연도	대상	선정기준	지원 수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07년 5월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만 6세~만 65세)	종합점수 465점 장애인	등급에 따라 47~118시간 (추가급여 종류에 따라 시간상이)
	시·도 추가지원	10년 10월	등록 1~6급 장애인 (시도별 등급상이)	시·도별 상이	시도 및 등급에 따라 10~868시간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07년 8월	사업별 상이	중위소득 120%이하 (사업별로 상이)	사업별로 상이 (월 1회~월 20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08년 2월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단,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 시·군·구 별 예외 지원 가능	등급에 따라 5일~25일간 건강관리사 파견
	가사간병 방문지원	08년 9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월 24, 72시간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09년 2월	만 18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월 14~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지원 (월 8회 주2회 /회당 50분)
	언어발달 지원	10년 8월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월 16~22만원 내에서 포인트 제공 (월 8회 주2회 /회당 50분)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4년 2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월 16만원 포인트 제공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9년 3월	만 18세~만 65세 발달장애인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	월 56, 100, 132시간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19년 9월	만 12세~만 18세 발달장애학생	애인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의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재학중인 발달 장애학생	월 44시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08년 12월	임신험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임신험인서로 임신이 확 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임신 1회당 100만원 (일 한도 없음)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5년 5월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임신험인서 상의 임신험 인일 기준 만 19세 미만 의 청소년 산모	임신 1회당 12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5년 10월	저소득층 영아 (24개월 미만)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기저귀 : 월 64,000원 조제분유 : 월 86,000원
에너지바우처		15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 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 가 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보호아동 포함)을 포함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 거, 교육'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 산부, 중증·희귀중증 난 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을 포함하 는 세대	1인 세대: 148,000원 (여름 29,600원/겨울 118,500원) 2인 세대: 203,600원 (여름 44,200원 /겨울 159,400원) 3인 세대: 278,000원 (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4인 이상 세대: 372,000 원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
아이돌봄지원		17년 1월	·시간제: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종일제: 만 3개월~만 36개월 영아	기준 중위소득 150% 이 하 가구	소득 유형별 상이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		19년 1월	출생연도 기준 만 9세 ~ 만 18세 (만 24세 연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 거,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월 12,000원 (연간 최대 144,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22년 4월	2022년 1월 1일 출생 아동부터	없음	최초 1회 200만원 바우 처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광의의 접근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사회서비스 제도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제도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종합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없으나, 사회복지분야

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서비스 개념적 정의에 있는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를 기준으로 하거나,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서비스 제공 수단을 결합하여 사회서비스 기능에 따라 기능별 유형화를 하기도 함

- 안수란 외(2018)의 연구에서는 아동돌봄, 교육, 성인돌봄, 일상생활 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족지원, 안전 및 권익보장,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서비스 이용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의 규모를 분석함
  -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2021) 역시 유사하게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기타성인돌봄, 출산 지원, 보육, 방과후돌봄, 신체건강, 정신건강, 재활, 아동 교육지원, 성인 교육지원, 정보제공,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문화 및 여가서비스, 주거지원, 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욕구와 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 의향 등을 확인하고 있음.
  - 또한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전생애’ 등 서비스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분류를 시도하거나,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욕구, 예를 들면 다문화나 장애, 한부모 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기도 함
- 한편 급여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현금 급여, 사회수당, 서비스 제공, 현물 제공으로 나눌 수 있음
- 현금급여는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을 전액 또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우처 사업이 이에 포함되기도 하고 별도로 구분하기도 함. 급여형태별로 제공되는 사업들로 노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민임대주택지원 등이 현금급여 형태의 사회서비스로 포함됨(강혜규 외, 2019). 또한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16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를 비롯하여 문화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을 포함할 수 있음<sup>26)</sup>
  - 사회수당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로 아동수당 지급사업이나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급사업같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나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임
  - 서비스 제공의 경우 앞서 설명한 현금제공과는 달리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국고지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자부담이 함께 있음
  - 현물형태의 사회서비스는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등 특정 현물 제공으로 인해 삶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26) 급여 형태에 따른 분류는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1998)이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틀로 제시한 유형 중 하나임. 네 가지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①사회적할당(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②급여형태(어떤 형태로 지원할 것인가), ③전달체계(급여를 전달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④재원(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표 3-5〉 사회서비스의 유형 및 예시 사업

서비스 유형	내용	예시 사업
현금 급여(바우처)	사회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을 전액 또는 부분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바우처 사업 등	지역사회 투자사업 전자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노인일자리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민임대주택지원 등
사회수당	사회적 필요 또는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급되는 수당	아동수당 지급사업,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지급사업 등
서비스 제공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서비스	아이돌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현물 제공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현물을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사업

## □ 전자바우처 사업과 이용자 중심의 모델의 구축

-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바우처의 제도화’라 불릴 만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 공급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 다변화된 국민들의 욕구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을 바우처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바우처 방식의 신규 사회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함
  - 보건복지부에서는 학문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저소득 중심의, 잔여적 사회복지정책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개념화했으며, 새로운 위험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 욕구를 대응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에 기반한 바우처 형태의 사업을 기획함(이재원, 2007)
- 바우처(voucher) 방식은 개인에게 특정한 재화나 물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일정액의 구매권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함(Salamon, 2002)
  - 즉 공급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서비스의 공급량을 감안한 간접 지원으로 수요자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임
  - 이러한 측면에서 현금과 현물지급의 중간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현물과 현금급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급여형태로 정의되기도 함(Gilbert & Terrel, 2005)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를 구축하고 현재 16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시도 추가지원 제외),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수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시간이 절감했거나(정광호, 최슬기, 장윤희, 2009), 행정비용이 감소했다는 근거들은(엄태호, 조근식, 김공록, 2010; 이재원 외, 2009) 바우처



제도화를 가속화함

- 이에 도입 이후 10년 동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예산은 1,874억원에서 17,832억원으로, 이용자는 35만명에서 161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약 1만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6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3)

〈표 3-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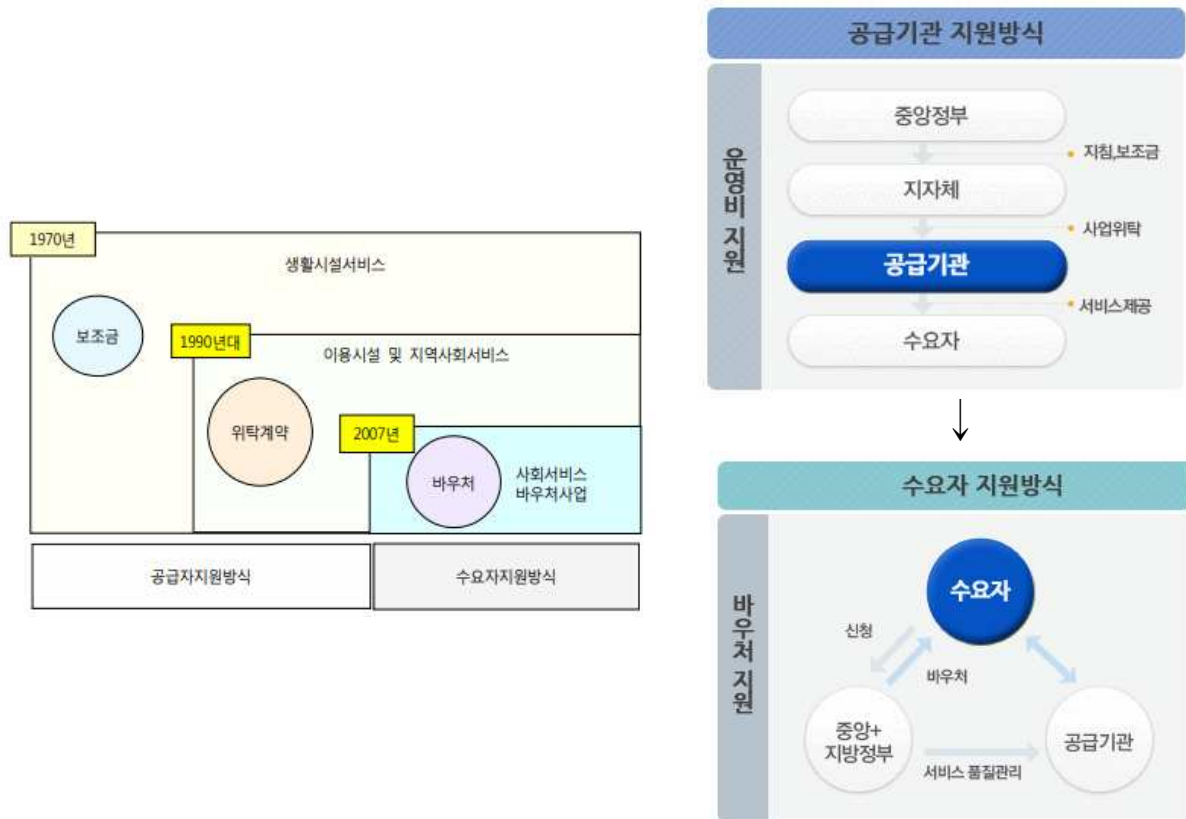
번호	사업명	바우처 시작연도
1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2		시·도 추가지원
3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5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6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7		언어발달지원
8	발달장애인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9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0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1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12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3	기저귀 조제분류 지원	
14	에너지 바우처	
15	아이돌봄지원	
16	여성청소년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17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2023).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2](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2)에서 2023.12.1. 인출

-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 중심의 대표적인 재정지원 방식(Consumer-Side Subsidies)으로 볼 수 있음(Salamon, 2002, p.446)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용자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의 방식이 개편’됨을 의미함
-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자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되었던 ‘공급자 중심의 방식’이었음
- 그러나 이용자 중심 모델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전달했던 재정지원을 축소 내지 제한하고 현금 또는 바우처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임(이승기, 2012)
- 이용자에게 재원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 아니 서비스를 구매하는, 서비스 성격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음

[그림 3-2]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



출처: 양난주(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사회복지정책」, 38(3), 202p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2023).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2](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2)에서 2023.12.1. 인출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와 영향력을 강조 하는 측면에서 클라이언트(client)가 아닌 이용자(use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용자의 선택을 강조하는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적인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이용자의 니즈를 반영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Consumer Driven)하여, 복지 분야 내에 ‘소비자 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함
- 수요자 재정지원의 방식은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 능동적인 구매자까지 대상으로 설정하여 공급자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sup>27)</sup>
  - 다양한 민간 공급자의 참여 아래 이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체계를 전제’함

- 즉 이용자 중심 모델인 현재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는 이용자들이 직접 통제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김보영, 2012)
- 또한 사회서비스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강화시키고 다양화된 서비스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다 강력하게 보장될 것으로 예측함
- 하지만 이용자 중심이 반드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며, 이용자가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예산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도 이용자 중심모델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

〈표 3-7〉 수요자 지원방식의 특징

구 분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수동적 보호대상)	서민·중산층까지 확대 (능동적 구매자)
서비스 비용	전액 국가 지원	일부 본인부담
서비스 시간	공급자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기관 경쟁
특징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 제공	공급자간 경쟁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2023).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2](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do?p_sn=2)에서 2023.12.1. 인출

## 2. 사회서비스 제도의 전개 및 고도화의 시도

### □ 사회서비스 제도의 시작과 전개

- 우리나라에 사회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부터인데, 사회서비스는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양극화와 가족해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신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면서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도됨
-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 위주의 선별적 복지였는데,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함
- 이에 따라 그 동안 비공식 영역에 놓여있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의 사회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되었고, 저출산과 관련한 일반 국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27) 박정민(2020).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추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년 3월 통권 제281호, 23pg.

확대됨

-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도화는 신규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높은 관심을 받음에 따라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됨
- 김형용(2023)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제도는 사회복지가 개인의 역량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국가로 비전으로 삼으면서 ‘보편적 사회정책’으로 발돋움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였음. 사회서비스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어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꾸준히 정부의 지원과 사업 확대가 이루어져 왔으나 정부 성향에 따라 사회서비스에서 강조한 방향에 차이가 있음<sup>28)</sup>
- 노무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강조하며 관련 일자리 91만개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을 발족하였으며, 사회서비스 선진화 전략을 강조하며 사회적기업, 노인장기요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도입함
- 이명박 정부는 복지 체감도 및 효율성을 강조하며 통합전산망 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사업을 운영함. 특히 사회서비스의 시장기능을 중요시하여 공공과 민간을 사회서비스에 모두 포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특히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원해 육성하고자 함
- 박근혜 정부 또한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하고 R&D 지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민간 기업들의 사회서비스 진출 확대를 지원함.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강조하기도 함
- 문재인 정부는 공급자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를 강조하였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 사회서비스 균형 발전 등을 추진하였음
- 이와 같이 각각의 정부에 따라 강조되어 온 사업의 방향을 차이가 있으나, 강은나 외(2023)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서비스 정책의 핵심 철학과 주로 다루어진 과제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공급 시장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로 정책의 주요 방향성은 정권의 특성과 관계없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sup>29)</sup>

28) 김형용(2023).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월간복지동향, 2023.04.03.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32537>.

29) 강은나·안수란·이상정·이한나(2023).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3-8〉 역대 정부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

구분	사회서비스 주요 정책
노무현 정부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운영(일자리 총괄 관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고용노동부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노인·장애인 돌봄, 지역사회 투자사업)
이명박 정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민간경상보조 사회서비스 벤처육성) 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선정 및 지원
박근혜 정부	영유아 무상 보육 실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 제시 전자바우처 사업 확대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산업 확립 및 표준화)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운영 아동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운영

출처 : 김형용(2023).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월간복지동향, 2023.04.03.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32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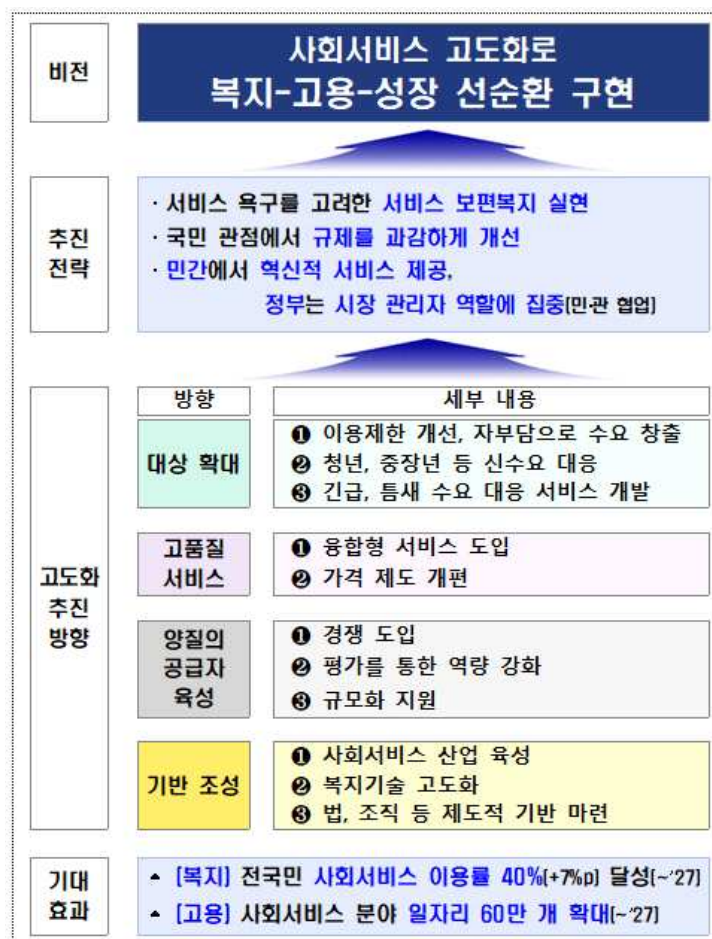
## □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

- 지난 2023년 5월 31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을 점검하고 추진전략 및 전략과제 방향을 발표함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 수립을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하고 약자 복지와 서비스 복지, 그리고 복지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함
  -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국정과제이자 2023년 최우선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였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대상자의 확대, 고품질 서비스의 실현, 양질의 공급자의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강화 등의 4가지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회서비스의 ‘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음. 윤석열 정부는 사회서비스가 원래 취지인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을 취약계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계획을 세움
  - 현재에도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있으나 취약 및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임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영유아 대상 사업의 경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비율이 높으나 성인이나 노인의 경우 특수욕구(장애 등)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선별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안수란 외, 20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에 무관하게 욕구나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선별적 서비스 제공에 비해 다소 높았음<sup>30)</sup>

- 또한 동일 조사에서 국민의 약 60%가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지만, 33.1%만이 실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욕구는 큰 것으로 나타남<sup>31)</sup>

[그림 3-3]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추진방향 및 과제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05.31.).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수립. 보건복지부.(2023.10.14. 접속)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513](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513)

- 이에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전 국민의 보편적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우고 사회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고자 함
- 보편적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기획하여,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30) 소득이나 자산에 무관하게 욕구나 필요가 있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7.9%, 소득이나 자산이 낮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45.0%로 나타남(안수란 외, 2021)

31) 보건복지부(2021). 20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지불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보건복지부, 2023)

-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복잡한 기준에 따라 제공되었던 사회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장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함(보건복지부, 2023)
- 한편 서비스의 수요 창출 방안으로 능력에 따른 차등 부담 전제된 구매력 있는 중산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상자 확대를 도모함
  -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게는 서비스를 보장하는 한편 중산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규정할 때, 소득 제한을 아예 풀거나 완화하여 정책대상에 중산층을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한편, 공공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중산층은 자기부담금을 늘려 이용하게 하는 것임. 이를 통해 구매력 있는 중산층의 사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0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기준에 따른 이용료 차등 부담 방안에 대한 동의 수준은 58.8%로 높으며, 국민의 44.1%가 사회서비스 이용 시에 비용지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32)</sup>
  - 이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에서 소득기준 상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한 융합형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유인할 수 있는 가격 탄력제를 도입하고 비용 상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함
  - 어린이집의 경우 특별활동비 상한을 차등화하고, 다함께 돌봄센터의 이용비용 결정을 센터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특히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높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추가할 수 있는 차등화된 가격탄력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격제도의 개편을 도입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산업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하였는데, 현재에도 다수의 민간 기업·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 재원마련, 품질 관리 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의 사업체 간 상호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32) 보건복지부(2021). 20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기초자치단체 내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선정하고(기존 1개소 지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사업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거나, 장기요양 영역에서는 부실서비스 제공기관을 퇴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공급 혁신 방안을 제시함
  -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공급주체가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투자편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고려하는 한편 공급혁신을 위한 공급주체의 역할과 복지기술 활용 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3)
-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은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주요 의제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강은나 외(2023)에 따르면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현재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방향이기도 함. 내용면에서는 그 동안의 사회서비스의 큰 틀과 완전히 이질적이지는 않으나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이용자의 자부담을 강화를 통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범 부처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고 있는데, 교육부(늘봄학교), 고용노동부(국민내일배움카드), 국토교통부(고령자복지주택) 등도 그 대상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문화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술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생애주기별 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계획으로 발표함
-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에서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바가 많음
- 무엇보다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라는 비전을 세우고 정책수요자를 특정 계층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은 이번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의 사회서비스 정책대상 확대와 맥을 같이함. 이는 그 동안의 우리 정책서비스가 많은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며 더 많은 국민이 사회서비스나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포섭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많은 국민이 일상의 공간에서 쉽게 자신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수요자의 선택기회 강화는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해 국민의 사회서비스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의 계획과도 결을 같이함.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이나 관련 공간



지원 강화 등 공급에 다소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있으나, 지역의 자율 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존의 중앙공급형 정책전달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사회서비스의 정책추진 방향과 전달체계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제2차 종합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누구나 일상 공간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전달 체계와 사회서비스의 추진체계는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해 수요자의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구조의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제2절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 제기되는 쟁점을 고찰하겠음

## 제2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의 쟁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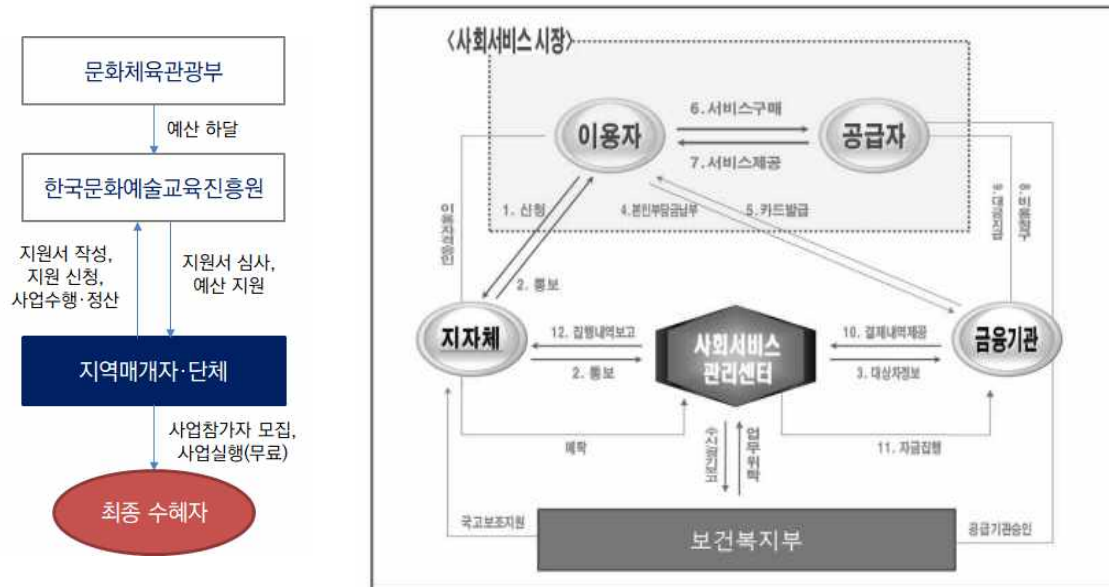
### 1. 정책 전달체계의 전면 재조정과 역할의 재조정 필요

-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외연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중앙-지역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운영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이 정책의 대부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되었는데, 매개자를 파견하거나 공모지원을 통해 지역 또는 이해관계자를 직접 지원하거나, 때로는 중앙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Top-down) 구조’를 고착화하게 됨
  - 최근 지역이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상향식(Bottom-up) 구조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예술교육 정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개자 지원과 공모지원의 방식은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 생태계의 중앙의 공급자 중심 체계를 지속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와 재정기반은 중앙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서비스의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목표로 하는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이 일상의 공간에서 쉽게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더 맞춤형하여 정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임
  - 사회서비스도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 달리 정책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을 통해 중산층의 사회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이용자 중심의 정책전달 체계는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달리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용자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인 ‘상향식(Bottom-up)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서비스 정책은 정반대의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상향식 구조로 정책전달 체계의 전환을 추진한다면 지금까지의 정책구조 전반을 크게 재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무엇보다도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함. 기존의 하향식 구조에서는 중앙이 공모사업을 발표하고 지역의 매개자·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으면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할 매개자·단체를 선정하고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매개자’에게 예산을 지원함

[그림 3-4]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차이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달체계〉

##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출처 : 이재원 외(2008),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 보건복지부 4대 전차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관리센터.

- 매개자는 지원신청서를 통해 국고지원을 할 충분한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모든 활동이 종료된 이후 국고지원에 대한 정산도 명확히 이루어질 수 있어 국고 활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타당한 근거 마련과 투명한 운영이 가능함
- 그러나 상향식 구조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이 매개자가 아닌 ‘최종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됨.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모지원의 심사과정과는 전혀 다른 지원결정 구조가 필요하게 됨
  - 공모사업의 경우 매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만 하면 되지만, 최종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는 수혜자가 지원에 적절한 대상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원을 신청하는 국민이 해당 바우처 사업의 사업의도에 맞는 대상인지 파악해야 하며, 사업이 저소득층이나 소외 계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할 사업의 경우 이들의 소득, 신분 등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같은 시스템과의 연결된 행정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행정과정을 수행할 주체가 필요함
- 대상에 대한 확인 절차 및 지원을 위해서는 하향식 구조보다 ‘더 많은 정책이해관계자를 필요’로 함. 공모사업은 자동적으로 신청서가 중앙으로 모이는 구조였다면, 상향식 구조는 최종 수혜자의 지역 생활권에 문화예술교육 이용을 신청하고 이들의 서류를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지원금에 제공하는 주체가 있어야 함

- 즉 하향식 구조는 행정절차를 중앙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수행했다면, 상향식 구조는 각 지역에 이러한 행정절차를 수행할 주체가 있어야 함
- 이러한 상향식 구조에서는 중앙이 최종수혜자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신청자가 사업에서 정해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하게 됨
- 심사의 내용도 달라지는데, 하향식 구조에서는 매개자가 기획한 사업기획서와 같은 내용이 심사 내용이라면, 상향식 구조에서는 신청자가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상인가를 판별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짐
- 그러나 현재 지역 생활권에서 이러한 이용자를 위한 정책서비스 지원을 하는 주체의 개발과 정책전달체계 구축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지자체 및 지역재단 등과의 중앙-지역 협의체가 구축되어 있으나, 위에 언급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체계는 갖추어지지 못함
-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도 하향식의 경우 공모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의 매개자·단체가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있으나, 상향식 구조의 경우 지역에 이미 이용자가 선택할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많은 기초 지역에서는 아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그나마 중앙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이 있어야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단발성 행사일지라도 실행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상향식 구조에서는 이미 지역에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용자는 자신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이 매우 미흡한 지역에서는 실행이 매우 힘든 정책체계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상향식 구조는 현재의 정책 이해관계자 간의 구조와 역할이 전반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이슈가 있음
- 현재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대부분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임. 광역 지자체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의 경우 중앙과의 협력은 물론 각 광역 지자체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중앙에서 이양·이관받은 사업지원을 운영하고 있음. 기초 지자체의 경우 실제 실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직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담당하거나 관련 생태계를 지역에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 외에도 민간 매개자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중앙의 예산지원을 받아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지난 20여년간 이러한 정책실행 구조가 상당히 자리잡은 상황으로 특히 예산의 경우 중앙의 지원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앙인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기획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상향식 구조에서는 중앙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됨. 정책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정책요구도에 따라 구체적인 기획을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며,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짐
  - 사업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은 지역이 되며, 중앙은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역할을 바꾸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와는 다른 지역의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도 필요하게 되는데, 현재는 광역, 기초에 각 지자체와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거점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중앙-지역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그러나 만약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고 이용자가 지역에서 바우처를 신청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지금과는 다른 추가적인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임
- 지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과의 관계와 역할도 달라짐.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리더십을 가지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재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이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나 매개자와 어떻게 역할을 구분할 지가 필요함
  -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기획과 행정을 구조 맡아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만약 바우처가 도입될 경우 행정기관에 행정의 역할을 위임해야 할지, 아니면 이들이 이용자 편의 중심의 행정체제로 바뀌어야 할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나 매개자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예산 구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후 모객을 하던 방식을 벗어나, 경쟁체제에서 예산 지원 없이 모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
-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하향식 구조였던 전달체계를 상향식 구조로 바꾸는 것으로 정책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매우 큰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음
  - 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의 개발과 협력체계의 구축, 기존 정책 이해관계자의 역할 변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며, 아직 기반이 미흡한 지역에서는 실행이 힘든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 선택권 강화와 국민의 정책체감도 향상 등 사회서비스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 국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 향유 환경 구축을 효율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구조임

## 2. 문화예술교육 향유의 지역 격차 및 품질관리의 문제

- 사회서비스와 같은 상향식 구조는 이용자의 선택권의 확대를 통해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음. 그러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이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지역에서는 이용자가 선택할만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앙의 공모지원을 통한 예산 지원이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발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국고지원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공의 예산지원이 없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단체에서는 별도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할 비용이 없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실현은 거의 어려운 상황이며, 만약 추진될 경우 지역 간의 향유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이나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잘 구축된 일부 지역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이 가능하지만 많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우리 문화예술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 국민의 고른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기조와 맞지 않는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는 현재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 사회서비스에서도 서비스 이용 시간이나 이동 수단,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같은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 접근이 취약한 지역은 이용 욕구가 있음에도 서비스 접근을 할 수 없어 인구집단 간,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임
  - 또한 지역으로 갈수록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해석 등에 있어 수도권의 이용자들보다 취약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움
- 최종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현재의 하향식 구조에서는 중앙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모지원을 한 매개자·단체의 지원서를 보고 심사를 거쳐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구조임
  - 그러나 상향식 구조의 경우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있고 하향식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의 공급을 전제하게 되므로 중앙이 현재와 같은 품질관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지속적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데, 각 지역에서 이를 모니터링 할 주체가 있지 않는다면 적절한 관리가 진행되기 어려움
- 바우처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은 국가가 개입할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데, 서비

스의 질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나 관리방식 자체가 변화해야 함(김은정·정소연, 2009)

- 바우처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에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결정이 개별화(Warner and Gradus, 2009)되기 때문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성과평가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와 같이 품질관리의 문제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도 제기되는 문제로 정기적인 품질관리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서비스 단가에 근거한 단기간, 시급제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노동환경이 보다 악화되었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종사자는 서비스의 질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와 함께 교육과 훈련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공공의 관리·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각 지역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을 두고 정기적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부정수급을 경계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문화예술교육도 사회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실효성 있는 관리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충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공급과 이를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지만, 많은 지역은 아직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그 동안 꾸준한 지역이양과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반을 조성해왔으나, 아직도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운영·관리할 지역은 많지 않은 상황임
  - 아직도 기반 구축이나 자원개발 등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앙의 예산에 의존하는 지역이 많으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할 리더십이 부재한 경우도 많음
- 아직 문화예술교육 지역 이양의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상황은 사회서비스 개념이 도입될 경우 지역격차나 품질관리 문제 등 현재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겪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을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적용에 있어 수도권과 지역 간의 상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3. 문화예술교육 정책 국고지원 대상의 문제

- 그 동안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정책 주요대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국고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음
  -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기부터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정책초기부터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대상이었으며, 취약·소외계층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대상임
  - 정책효과성 측면에서도 취약계층은 짧은 기간에 더 극적인 효과성을 보일 수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인 가치를 설득하는 데에 효과적인 대상이었음
  - 2010년대부터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의 공급이 강조되어 왔지만 여전히 이들이 주요 정책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소요된 것은 국고지원의 정당성 확보와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도입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에게 폭넓게 확대한다면 이러한 국고지원의 정당성에 있어 논란이 일게 될 수 있음
  -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제공될 경우 국고지원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
  - 그 동안의 주요 정책대상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제약이라는 문제로 국고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충분히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들에게 국고지원을 통해 문화향유를 제공하는 것은 국고 운영의 타당성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지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업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중위소득 120%로 대상을 설정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20%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자들을 보면 저소득층이 많은 상황임
  - 사회서비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서 정책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경우 소득 기준을 어디까지고 설정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제2차 종합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서 추진하는 중위소득 160%까지의 확대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들에게 취약·소외계층



과 동일하게 국고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의 확대인지, 일반 국민을 위한 기회의 확대 중 서비스를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도 이용자 편의성 제고의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바우처와 같은 형태를 도입하고 있는데,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이 이에 해당됨. 이 경우 국고지원의 정당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던 원래 목표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공급의 확대와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달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일반 국민의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취약·소외계층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에서는 후술할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도입하고 국고 차등지원을 적용하고 있음

#### 4. 문화예술교육 예산 확대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유료화의 문제

-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정책초기부터 현재까지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프로그램 개발 등의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국고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지원하는 대상이 대폭 확대되게 되므로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공모사업을 통해 매개자·단체에게 프로그램 기획·운영비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정해진 예산 규모에서 심사를 통해 한정적인 대상을 상대로 지원 규모를 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매개자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한정된 매개자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대상인 국민을 상대하게 되어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중·고 소득층까지 확대 제공될 경우, 이들도 취약·소외계층과 마찬가지로 계속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사회서비스의 경우 국고지원이 있으나 이용자에게 일정 부분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자부담의 범위는 사회서비스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소득에 따라 이용자의 자부담의 비율에 차등을 주기도 함
  - 이러한 자부담 비율 차등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운영주체가 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여 이를 위한 정책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사회서비스의 도입은 공공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주체들만 참여가능 했던 기존의 구조와 달리 더 많은, 다양한 민간의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 대거 유입됨에 따라 2020년 기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중 개인사업체의 비중은 57.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본격적인 산업화와 경쟁체제 도입을 강조하였는데, 현재에도 다수의 민간 기업·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때,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 김혜인·차민경(2022)는 기존 문체부의 사회서비스 제도인 문화누리카드 가맹서비스에 문화예술교육 분류 신설과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내 문화예술교육 수강료의 인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유료 서비스의 예산지원을 전제하는 것이어서 유료 프로그램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이렇게 문화예술교육을 이용자 중심 모델로 설계하여 다양한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전제할 경우 이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체계’ 도입을 구축하는 것이 됨
  - 이 경우 기존 민간 문화예술교육 시장 중 어디까지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프로그램 공급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 또한 기존의 공공에서 지원받아 운영되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지속적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면 민간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간의 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형평성의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가 있음
- 그러나 민간 문화예술교육 시장의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참여는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음
  -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 중 가장 수혜 혜택이 미흡한 청년, 중년, 장년, 노년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나 사설 예술학원·강습소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기회를 가지는 경우가 많았음
  - 지역 생활권의 교육기관이나 수요에 맞는 기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민간 시장의 포괄은 특히 공공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이 미흡한 지역에서 충분한 프로그램 공급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표 3-9〉 사회문화예술교육 선호 교육기관 현황

(단위: %)

구 분		사례수 (명)	사설 예술 학원·강 습소	주민 자치 센터	개인 교습 및 레슨	평생 교육 기관	문화 시설	생활 문화 센터	동아리 및 동호회	사회 복지 시설	기타
전체		492	21.5	27.3	14.1	14.3	8.6	3.6	5.4	6.2	2.4
생 애 주 기	청년(19~34세)	(110)	38.3	2.1	22.3	10.0	16.1	3.4	10.8	-	1.9
	중년(35~39세)	(105)	29.2	17.6	19.0	16.7	6.0	5.3	5.3	1.0	1.7
	장년(50~64세)	(154)	13.5	33.0	9.7	20.2	7.0	4.3	4.3	5.0	3.6
	노년(65~79세)	(113)	5.1	57.6	5.4	10.4	5.2	1.2	1.2	12.6	2.3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평생교육기관: 평생 학습관(평생학습센터 등), 초·중·고·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문화센터(백화점, 신문, 방송사 부설 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그러나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비판도 있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민간 시장의 참여 이후 오히려 공공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임
  - 바우처 도입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공급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비영리기관으로 대표되는 민간영역에 의해 생산 및 공급되었을 뿐 공공의 역할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최재성, 2005)
  - 바우처 방식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제도로의 변화는 정부가 민간 서비스 제공자를 대행자로 양성하여 민간 의존성을 보다 심화시키고 사회서비스 공급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함으로써 공공은 민간에 대한 규제와 평가만을 통해 통제하고자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함(김영중, 2012)
  - 그러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는 상당수 소규모, 영세기관이었으며, 정부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이 중심이 된 이용자의 특성은 충분한 수요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영세성을 극복하기 어려워짐
  -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라는 긍정적 작용보다 영세기관 유입과 과잉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악화, 종사자의 고용불안, 서비스 사각지대 등 시장실패에 따른 부정적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

## ■ 제4장 ■

---

### 사회서비스 제도 사례 및 시사점 분석



## 제1절 |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서비스 사례

### 1. 통합문화이용권

#### □ 사업 내용 및 특징

##### ○ 사업 소개

-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임.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 등 분산된 체계로 추진되다가 수혜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에 통합문화이용권으로 통합됨<sup>33)</sup>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3, 4에 근거해 추진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갖는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일정 액수의 구매권을 인정해주는 사업임<sup>34)</sup>
-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이 경제적·시간적 여유 부족과 정보의 격차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음. 실제로 문화소비에 있어서 경험 여부가 소비에서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층 문화예술 소비의 기회 확대에 작용하고 있음
- 2023년 267만 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실제적인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문화예술 창작으로 재정을 선순환시키는 것이 목표임. 보조금 규모는 매해마다 증액됨

##### ○ 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함(6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 지원 범위

-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함
- 등록된 가맹점(오프라인, 온라인)에서만 결제(카드)로 가능
- <표 4-2>에서 보듯이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구매 가능한 것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물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3) 고정민(2020). 기초예술분야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pg.

34) 고정민(2020). 기초예술분야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6pg.

〈표 4-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 문화예술 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표 4-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의 가맹 업종 및 품목

구 분		가맹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문화콘텐츠, 신문
	음악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 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 체험, 드론 체험, 방탈출 체험, 유청소년 직업 체험 등
관광	교통수단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 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국내 여행사
	관광 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업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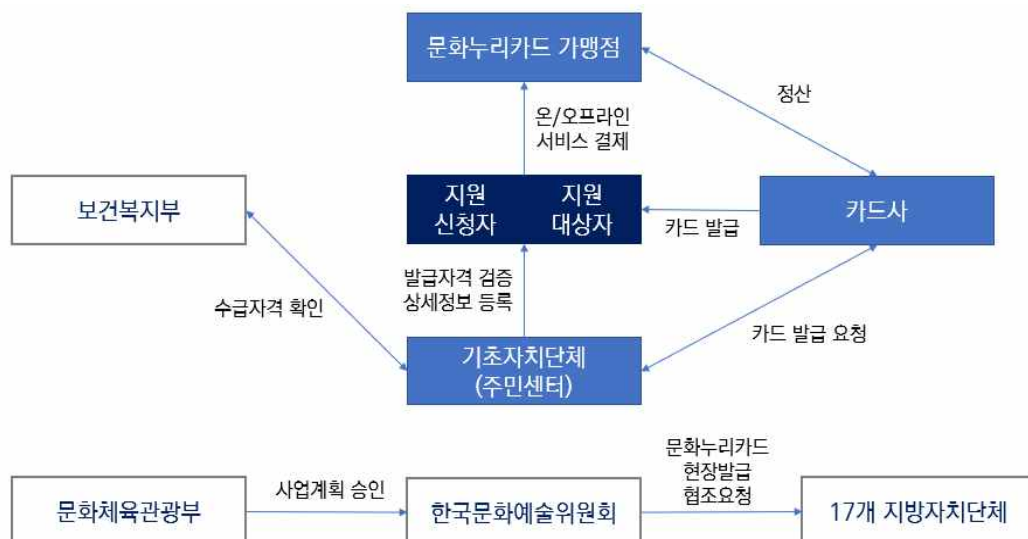
체육	스포츠 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체육시설 이용 예약 플랫폼, 스크린 체육시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참고.

## □ 사업 전달체계

- 문화누리카드는 사업 대상자를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선정하는 행정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 특히 행정안전부와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효율적인 (행정) 사업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 [그림 4-1]을 보면 수급자격 확인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를 활용하고, 대상자에게 발급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관할의 주민센터가 진행하며,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는 가맹점 관리 및 품목 조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들은 <표 4-2>의 가맹업종 및 품목 내에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도서·티켓·악기 등 물리적인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음

[그림 4-1] 통합문화이용권의 정책 전달체계



출처: 통합문화이용권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통합문화이용권은 대표적인 문화복지정책의 바우처 제도로 기능하며 경제적 문제로 문화향유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문화소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주관하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증진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격차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
- 2022년에는 사업 시행 이래 최초로 수혜율 100% 달성 및 연도 중 지원금 상향을 진행해 취약계층의 문화접근기회를 보장함<sup>35)</sup>
- 2015년 이후부터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을 1만원씩 지속적으로 증액하면서 예산 규모를 키워가고 있으며 예산 규모 확대에 따라 대상자와 지원 인원의 규모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2016년에는 사업 개선을 위해 문화누리카드의 가맹점을 늘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과 할인정책을 추진하여 관광 분야 사용액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림 4-2] 최근 5년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지원 현황

(단위: 만원, 만명, 매,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지원금	연 6만원	연 7만원	연 8만원	연 9만원	연 10만원	연 11만원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263만명	256만명	220만명	238만명	263만명	263만명
지원인원 (발급매수)	1,523,506매	1,591,777매	1,629,036매	1,752,875매	1,975,060매	2,319,973매
발급률	94.6%	96.7%	101.8%	102.5%	100.3%	88.2%
발급대비 이용률	90.7%	90.8%	92.3%	91.9%	89.6%	88.9%

출처: 김민정(2019.2). 2018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성과평가연구, 34pg.;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9.12).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4pg.; 문화체육관광부(2023.1),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22pg. 참고해 연구자 재구성

-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점의 취급업종과 품목이 문화, 관광, 체육의 전 분야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가맹점의 수가 많아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인하여 온라인 가맹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sup>36)</sup>
- 매년 통합문화이용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타 분야에 비하여 적은 지원금 규모이고, 인근의 오프라인 가맹점 부족, 가맹점에 대한 낮은 질적 만족도 등으로 인해 지원금 불용문

35)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22pg.

36) 고정민(2020). 기초예술분야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87pg.

#### 제가 발생함

- 지역적 특성 혹은 세부 품목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용자 경험이 상당하며 온라인에서의 이용도 상당히 불편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
- 연간 지원되는 금액 내에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 소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나, 카드 사용액이 일부 분야 또는 장르로 편중되어 있어 제도 도입의 본래적 목적인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나 순수예술 분야의 관객 확대 차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sup>37)</sup>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업종 및 품목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순 관람이나 강좌 수강이 아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이나 서비스 참여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가맹업종 및 품목의 확대가 필요함
- 제도설계가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문화소외계층 중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사업 대상이 한정되어 있음
- 부정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사업의 목적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었음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중 타 부처의 행정체계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정책전달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음
- 행정체계의 말초단위인 주민센터와 연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민센터에서 사업 대상자 안내 외의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와 연계했을 때 주민센터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행정안전부를 통한 사업대상자의 검증은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로의 확대 전환을 위해서는 유형을 구분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지원방식의 도입이 필요함
- 기존의 정책전달체계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광역 및 기초 문화예술교육센터 → 지자체 및 지역 문화재단 등의 역할 재조정이 필수적이며, 각각의 기관이 어떻게 협력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함
- 통합문화이용권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서비스를 결합하는 경우 결국 정책대상은 저소득층에 국한될 수밖에 없음

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01).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6 기초예술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방안 연구, 14pg.

- 기존 통합문화이용권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가맹업종 및 품목을 추가한다면 저소득층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공공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이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유료 프로그램의 결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진행되던 교육 프로그램을 유료화해야 하는 이슈가 있음
- 정책대상자의 연령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분야와 장르, 영역이 매우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민간과의 결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공공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만으로는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 가맹처가 공공과 민간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가맹처의 확대 개편 시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민간시장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수용하기에는 민간시장과 경쟁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섬세한 민간 협력방안이 필요함

## 2. 스포츠강좌 이용권

### □ 사업 내용 및 특징

#### ○ 사업 소개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취약계층 유·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을 견인함으로써 스포츠복지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임<sup>38)</sup>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와 제22조에 기초해 2009년 3월 체육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왔으며 2018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 이용이 허용됨<sup>39)</sup>
-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급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을 이용할 때 강좌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육 분야 유·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임
- 2006년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됨

#### ○ 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가정 유·청소년(만 5세~18세)

- 전국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 자활 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 가구,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
- 우선선정 기준: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를 기준으로 우선 선정 기준 마련하여 적용 중

〈표 4-3〉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기금의 사용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개정 2012. 2. 17., 2014. 12. 23., 2015. 3. 27., 2016. 5. 29., 2017. 12. 19., 2020. 2. 4., 2020. 8. 18., 2020. 12. 8., 2021. 8. 10.>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38) 손진희(202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제도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239pg.

39) 손진희(202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제도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243pg.

	<p>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p> <p>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p> <p>6. 삭제 (2021. 8. 10.)</p> <p>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용자</p> <p>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p> <p>9. 삭제 (2014. 12. 23.)</p> <p>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 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p> <p>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p> <p>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p> <p>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p> <p>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신설 2014. 12. 23., 2017. 12. 19.&gt;</p> <p>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p> <p>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p> <p>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p> <p>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p> <p>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p>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표 4-4〉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의 우선선정 기준

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제한 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등)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족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참고.

## ○ 지원 범위

-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또는 스포츠강좌(프로그램)를 지원하며, 월 지원금은 95,000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함
- 매월 지원금이 입금되며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는 구조임
- 대상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에서 시도, 시군구, 체

육 분야별로 참여하고 싶은 시설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강좌는 공공을 포함하여 일부 민간시설이나 강좌도 포함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림 4-3]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 시설 및 강좌 조회 예시

시/도 전체

시군구 전체

전체

시설명 또는 주소를 입력하세요

태권도

수영

검도

헬스

축구

유도

승마

농구

롤러인라인

합기도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복싱

발레

빙상

요가

댄스

스쿼시

볼링

필라테스

야구

골프

테니스

펜싱

배구

기타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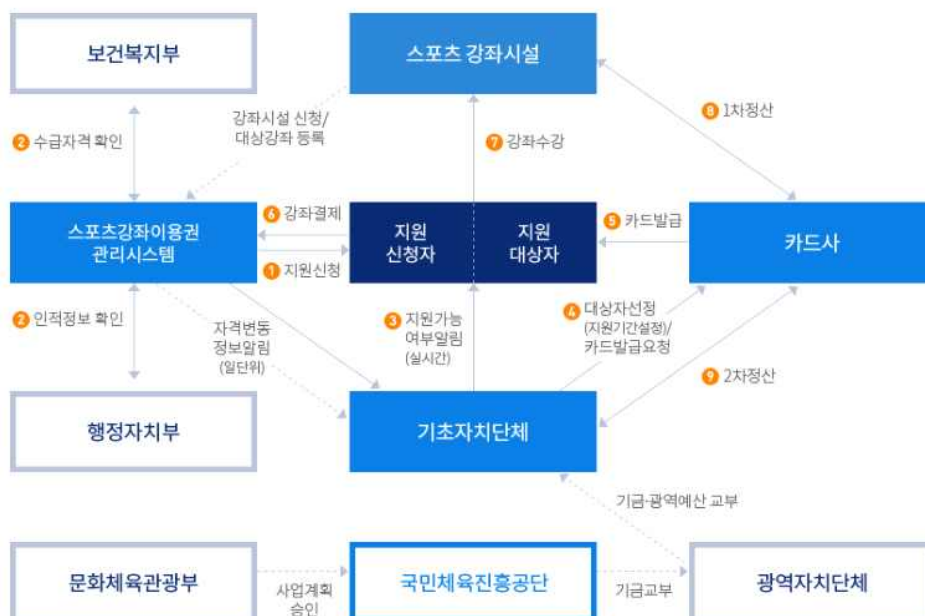
Q 조회

출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http://www.svoucher.kspo.or.kr)) 시설 및 강좌 조회

☐ 사업 전달체계

- 여타 사회서비스 제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복지부를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1차적으로 거치고 있을

[그림 4-4]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정책 전달체계



출처: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참고.

- 수급자격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지원대상자는 카드사를 통해서 스포츠강좌이용료를 결제할 카드를 발급받게 되고, 반드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좌를 신청하도록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있음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시설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시설 가입을 하여 웹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결제한 날에 따라 정산일에 정산을 해주는 구조임
  - 단 홈페이지가 아닌 현장 결제의 경우에는 스포츠강좌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2023년 10월 기준 전국 총 17,101건의 시설이 조회되고 있으며, 종목별 최소 15개(펜싱) 시설부터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인 태권도의 경우 7,569개의 시설이 포함되어 거주지역 인근에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수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음
  - 대상자가 원하는 강좌를 가까이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선택권이 가장 잘 보장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sup>40)</sup>
  - 특히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가맹점을 보유하여 이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힘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월 9만 5천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액이 연간 85만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이며, 수혜대상도 7만 6천명에 달해 예산규모가 타 지원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큼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혜를 받은 유·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는데, 이는 거주지역 근처에서 대부분의 생활체육 분야를 지원금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며,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무려 13년 동안 지속적·장기적으로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혜자의 높은 만족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임
  -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안정적 재원을 기반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 금액 및 기간 증대와 시설·강좌 확충을 목표로 삼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 간 서비스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서울 및 수도권, 일부 광역 사·도의 경우 공공과 민간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수요자의 선택권

40) 노용구 외(2017). 스포츠바우처사업 효율적 운영전략에 관한 고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70호, 220pg.



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소멸로 인하여 유·청소년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시설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음<sup>41)</sup>

- 더불어 중앙·지방 간 복지 재정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여부에 따라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임
  - 스포츠강좌이용권이 국민체육진흥기금 70%, 지자체 30%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구조 때문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여부에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sup>42)</sup>
- 통합문화이용권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목에 서비스가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이 문제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일부 특정 종목만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거주 지역 내 특정 종목의 체육시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스포츠강좌를 이용하고 싶어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수강할 수 없는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되어있지 않음
- 서비스 제공 업체의 대부분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실물 카드 및 로그인 정보를 수집해 일괄적으로 결제를 진행하는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sup>43)</sup>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공공과 민간시설을 아우르는 제도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유료화 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임
  -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종목에 따라 본인이 공공과 민간 시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가장 강화한 형태의 바우처 제도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연간 지원 금액이 민간 시설의 비용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임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이 민간시설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민간 시설에서 책정하는 금액의 일정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이 급선무임
  -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포함하면서 민간시장에서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간 시설들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에 들어와야 할 유인이 전혀 생기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민간시장에서 안정화되어 있는 수업료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41) 김지선 외(201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문제 : 공급자와 이용자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8(5), 73pg.

42) 노용구 외(2017). 스포츠바우처사업 효율적 운영전략에 관한 고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70호, 221pg.

43) 김지선 외(201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문제 : 공급자와 이용자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8(5), 75pg.

-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국민체육진흥기금 70%, 광역자치단체 30%의 예산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구조가 문화예술교육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앞서 다른 바우처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지역 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스포츠의 경우 민간 시설을 포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만으로는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 또는 특정한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이동성을 강조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문화비 소득공제

□ 사업 내용 및 특징

- 사업 소개
  -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사업임
  -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0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적용됨<sup>44)</sup>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의거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문화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제 혜택을 부여함<sup>45)</sup>. 조건에 충족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표 4-5〉 문화비 소득공제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24., 2019. 12. 31., 2020. 3. 23., 2020. 5. 19., 2021. 3. 16., 2022. 12. 31., 2023. 4. 11.>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 사업 대상: 근로소득자 중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중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사람
- 지원 범위: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 부터 적용)

44)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2023.9.1.,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45)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2023.9.1.,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표 4-6〉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별 적용범위

분야	적용범위	대표적 적용 불가 예시	관련 법령
도서	ISBN979, 978로 시작하는 도서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	개인간 중고책 거래, 교구 상품 및 잡지, ISBN 880으로 시작하는 도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공연	공연 티켓 구입비 (온라인의 경우 수수료 포함),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	공연 녹화 중계 영상, MD 상품 등	「공연법」 제2조 제1호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관람을 위한 입장권 비용 및 일일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 비용	박물관 미술관 내 음료 및 기념품 박물관 미술관 장기 교육, 문화 강좌 비용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신문	종이신문의구독료 *인터넷신문은 해당되지 않음	인터넷 신문 구독료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영화	영화 관람을 위한 영화관 티켓 (2023년 7월분부터)	OTT 플랫폼의 영화 시청을 위한 지불 비용, 팝콘 등 영화관 판매 식음료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2023.9.1.,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참고.

[그림 4-5] 문화비 소득공제 기준

공제 전 전체 소비금액	공제 반영되는 금액	비율	22년 공제한도	23년 공제한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 a	공제 문턱 금액 = f			
	신용카드 사용 공제금액 = a - f	15%	300만원 한도	300만원 한도
직불카드 등 사용금액 = b	직불카드 등 공제금액 = b	30%		
문화비 = c	문화비 = c	30%	100만원 한도	300만원 한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 d	전통시장 공제금액 = d	40%	1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사용금액 = e	대중교통 공제금액 = e	40% (80%)	100만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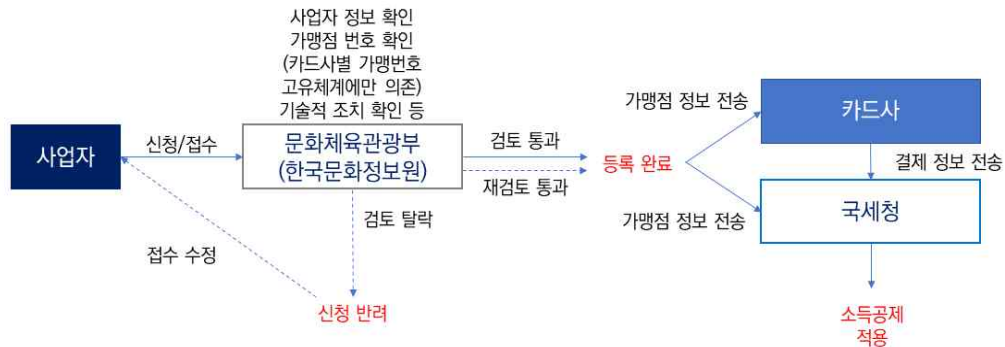
출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2023.9.1.,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참고.

#### ○ 사업 전달체계

-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전달체계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이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하면 바로 국제청 연말정산과 연계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별도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음
- 문화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은 뒤,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이 진행됨. 한국문화정보원의 검토를 통과해 최종 등록이 완료됨. 이후 가맹점 정보가

카드사로 전송되어 국세청으로 최종적으로 결제 정보가 전송되어 소득공제가 적용됨. 단, 현금영수증일 경우 카드사 없이 바로 국세청으로 송부되어 연말정산에 적용됨<sup>46)</sup>

[그림 4-6]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사업자 등록 처리 과정



출처: 김광원(2020).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2020-05호(15호) 정보화 기반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과 데이터 활용방안. 한국문화정보원, 6pg.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공제비 체감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용 분야와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제한도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문화비 소득공제의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이용자들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방법에 대해 적용해 이용수단을 확장하고 있음<sup>47)</sup>
  - 2023년 기준, 총 6,652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소득공제 사업자를 살펴 보면 도서 분야는 3,220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대형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이 포함되어 있고, 공연 사업자는 총 1,061개로 온라인 티켓 예매처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전국 404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음
- 그러나 근로소득자 중 연봉 7천만원 이하(25% 이상 초과 사용자)이라는 정책 대상 집단이 전국민이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실 공제비용의 비율이 높지 않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지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공제액(비율)의 확대 등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상황임<sup>48)</sup>
- 2021년 신문구독료까지 공제항목이 늘어났지만, 사실 가정 내에서 가장 접근이 쉽고, 소득공제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수강료는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46) 김광원(2020).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2020-05호(15호) 정보화 기반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과 데이터 활용방안. 한국문화정보원, 6pg.

47)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2023.9.1.,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48) 이종한 외(2022)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화정보원, p.16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되면 문화예술교육이 학생과 소외계층 대상이라는 정책이라는 인식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것으로 인식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2018년부터 시행된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예술 분야의 유일한 소득공제 제도로 기능하고 있지만, 공제효과에 체감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이견이 있음
  - 공제 체감율이 낮은 이유로 연간 300만원 이상을 문화상품으로 구매하는 사람의 비율이 적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소득공제상품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꼽음
  - 특히 OTT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영화관에서 영화를 소비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고, 종이신문을 구독하는 문화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이 많아 실질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임
- 따라서 문화비 소득공제의 정책 체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국민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부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늘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분야이며, 최근에는 취미로 문화예술교육을 받는 성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의 체감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근로소득자 중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한,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한다고 소득공제 체감율을 높일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임

〈표 4-7〉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서비스 사업별 특성 요약표

사업명	사업대상	대상자 기준검토 (전담 부처)	서비스 총괄기관	결제 방식 (온오프라인)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센터 (행정안전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기관)	온·오프라인 혼용
스포츠강좌이용권	저소득층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정)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기관)	온라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중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시 적용 (국세청)	한국문화정보원 (산하기관)	신용카드 등 (온·오프라인 혼용)

## 제2절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례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 보건복지부는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도입 이후 2023년 현재 16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운영 중인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대부분은 전자바우처 사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비용의 결제와 정산 등이 이루어짐
  -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16개의 전자바우처 사업 외에도 장기요양이나 보육 역시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들은 개별 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바우처가 집행되는 사업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의 목표는 공유하고 있으나 사업 목적이나 수행 절차 등은 사업마다 상이함(김은하 외, 2020)
- 이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목적에 따라 돌봄, 비돌봄 서비스로 구분하거나(이정은, 류진아, 2022),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정제, 등록제로 구분하거나(안수란, 2020), 바우처 관리방식의 차이에 따라 자체지불형, 금융형으로 구분하는 등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도 함(김은하 외, 2020)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을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함
  - 우선 대면으로 제공되며 돌봄서비스 성격이 강하며, 주로 자체지불형 바우처로 분류되는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구분하고 서비스 제공형으로 명명함
  - 다음은 일반 시장에서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금융형 서비스 성격을 가진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등 6개 사업을 서비스 구매형으로 구분함
- 이 중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유형별 대표적인 바우처 사업을 검토하였음



- 특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대표적 사업으로서 지자체가 사업의 기획과 예산 배분 등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심층 검토하였으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내 타 부처 사업으로서 타 부처 사업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 내 관리 운영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와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함께 검토하였음. 두 사업은 서비스 유형과 제공 방식은 상이하지만 향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사회 서비스 제도 도입 방식을 판단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표 4-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구분

서비스 제공형	서비스 구매형
장애인활동지원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여성청소년생리대바우처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부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	
아이돌봄지원사업(여성가족부)	에너지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주: 음영부분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사업임

##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사업 내용 및 특징

- 2007년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사업으로서 지역 주도성 강화, 사회서비스 시장화, 이용자의 보편화와 능동적 소비자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하고 기획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으로 의의가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함께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mass customized services)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함과 동시에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지역주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자원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3년부터 재정지원 방식을 포괄보조(Block Grant)로 전환하여 가사·간병 방문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함됨

〈표 4-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

구분	사업 명	비고
단위사업	<b>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b>	(복지부)시·도별 배분액 총액 결정
내역사업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시·도별 배분액 총액 내에서 3개 내역사업에 대해 자율 편성
내역사업2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역사업3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주: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ssbni.or.kr/bbs/page.php?hid=0103>

-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전환하여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변화는 지자체의 기획력과 자율성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의 개발과 공급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음(박세경, 2016)

〈표 4-10〉 지자체 개별보조와 포괄보조의 비교

	개별보조	포괄보조
대상사업	-전국적 통일성·보편성이 있거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사업	-지역 특성이 강한 사업 -보편적 욕구가 있더라도 집행 재량이 필요한 사업
장점	-통일된 기준을 설정, 집행하여 지역간 형평성 달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운영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실험적 사업 용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단점	-집행의 경직성 -사업 간 분절적 운영	-지역 수요를 반영한 보조금 총액 편성 필요 -지역 간 편차 발생 유의

주: 보건복지부(20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5p.

- 이후 시·도별 예산 불균형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2019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전환되어 중앙부처(보건복지부)가 예산 편성의 주체가 되었음
  - 포괄보조 하에서 세부사업별로 과부족액을 지자체가 조정이 가능했다면, 지역지원계정 하에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과부족액을 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보건복지부, 2019)
- 2022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지방이양 되었으며, 신규사업(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을 분리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지역 자율계정 사업으로 시도의 예산 편성의 권한이 다시 강화되었으며, 두 개의 신규사업은 부처가 직접 편성하는 지역지원계정으로 운영됨

〈표 4-11〉 2023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회계 계정 운영방식

	지역자율계정 ( 시도 자율편성사업 )	지역지원계정 ( 부처 직접편성사업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 보건복지부(20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6p.

-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산은 2013년 국비를 기준으로 1,411억원에서 2020년은 1,872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2022년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전국적으로 대략 1770억원에 이르며, 매칭되는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소요될 총 공공 예산은 약 26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김은정, 2022)
-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휴먼서비스가 중심임에 따라 대부분의 서비스가 집으

- 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나 시설에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구성됨
- 이에 생활권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 욕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강혜규, 2018)
- 즉 표준화되고 일반화된 기준선을 활용하여 소득보장을 해왔던 공공부조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제도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주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의 개별화, 유연한 접근이 요구됨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기부터 지역의 고유성, 주도성, 책임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설계함
- 최근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지역중심의 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의 기획 및 발굴
  - 여타 지자체 보조사업과 달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관할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 역량을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기획·개발하여 운영함
  - 시도지사 혹은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개발의 주체로서 시군구는 시도의 승인을 받고, 시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기획, 운영하되 매년 진행하는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유도하고 있음
- 서비스는 크게 광역서비스와 시군구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 광역서비스의 경우 해당 광역 내 모든 시군구가 동일하게 제공되는 시도 서비스와 1개 이상 복수의 시군구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시군구 공동서비스로 구분됨
  - 광역서비스의 경우 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하거나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시군구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개별 지자체가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음
  - 광역서비스 중 시도 서비스를 신규로 기획하거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복지부의 승인이 필요하며, 시군구 서비스의 경우 시도가 승인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시도에서는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시군구 서비스를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심의대상과 심의 절차, 심의 기준 등은 복지부의 지침에 제시되어 있음
  - 2023년 상반기 기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은 352개로 광역사업이 249개(시도 개발 서비스 133개, 시군구 공동서비스 116개), 시군구 서비스가 98개, 전국단위에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표준형 사업(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청년 신체건강증진사업 등) 5개로 구성되어 있음(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23)

## ○ 표준모델의 활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기획 및 집행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인력의 기준이 상이하여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정홍원 외, 2013),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김용득 외, 2009)
- 이에 2010년부터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들을 선정하여 서비스 주요 목적, 내용, 대상자 기준, 제공 인력 등에 대해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표준모델이라 부르고 있음
- 표준모델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하도록 함
- 2023년 기준 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모델은 총14개의 사업이며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자체에서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사업 수를 기준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 규모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에서 표준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안수란 외, 2018)

〈표 4-12〉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현황

표준모델명	서비스 내용	이용 대상	소득기준	서비스가격·기간·횟수
영유아 발달지원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중재 서비스 제공	만0~6세 발달지연 우려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20만원 ·12개월 ·주 2회
아동·청소년 정서 발달지원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악 교육 이론 및 실기와 정서순화 프로그램 제공	만7~18세 정서행동문제 우려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20만원 ·12개월(재신청1회) ·주 2회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행동 위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언어, 놀이, 상담, 음악·미술치료 등 조기개입서비스 지원	만 18세 이하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청소년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월 18만원 ·12개월(재1) ·주 1회(월4)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수중 또는 유산소 운동 처방·지도를 통한 건강 증진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12만원 ·12개월 ·주 3회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노인·장애인에게 전문 돌봄 인력이 동반하는 여행 서비스 제공	등록장애인(또는 상이 등급자), 만 6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18만원 ·평생1회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소득기준 없음	·월 12만원 ·12개월(재신청 5회) ·연간(연2회 점검)
시각장애인 안마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월 16.8만원 ·10개월(재신청 1회) ·월2 or 월4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병행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20만원 ·12개월(재신청 2회) ·월 4회
자살 위험군 예방서비스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살위험검사에 의한 자살위험군 해당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월 16만원 ·12개월 ·주 10회 이상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아동·청소년에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기 위해 리더십 형성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 등 지원	만7~15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14만원 ·12개월(재신청 1회) ·주 1~2회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지원을 통해 의료비절감, 건강증진	장애인, 산모(임신 3개월 이상)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19만원 ·12개월 ·주 3회
비만아동 건강관리	경도 이상 비만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한 체질개선 및 질병 예방	만5~12세 경도 이상 비만 아동	소득기준 없음	·월 6~10만원 ·12개월 ·주 1~2회
성인 심리지원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한 사회구성원 역할 촉진	만 35세 이상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한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20만원 ·6개월(재신청 1회) ·주 1회(월4)
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기기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만 24세 미만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월 20만원 ·12개월(재신청 1회) ·월 4회

## ○ 전자바우처 방식의 활용

-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공급자의 진입을 촉진시켜 사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공급자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음

## ○ 지역의 예산과 수요에 적합한 이용자의 선정

- 저소득층 중심의 취약계층이 아닌 서비스 욕구와 구매력이 있는 ‘일반 국민’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의 보편화를 이루고자 함
- 중앙은 이용 대상자의 소득기준 기준을 제시하되, 실제 서비스별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은

-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역개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 2023년 표준모델의 소득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표준모델 사업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 160~170%의 기준을 두거나, 소득기준을 아예 두고 있지 않기도 함
  - 지자체에서는 표준모델에 준하여 지역의 주요 수요 계층, 사회서비스 시장화 정도,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박세경 외, 2023)
  - 특히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전략에 맞추어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가 충분한 중산층까지 고품질 서비스 확대를 도모함
  -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부담금 차등의 폭을 넓히고 가격탄력제를 도입하여 가격규제를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공기관의 등록제 시행
- 수요자 지원방식을 통해 사회서비스 등록기준에 적합한 제공자는 제공기관 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수의 제공기관 중 이용자가 선정하여 시장을 활용하는 구조
- 지원조직 보유: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및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및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종사자 교육과 훈련,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기획·발굴, 지역사회 서비스 홍보, 제공기관 현장조사 등을 지원함
- 품질평가 실시 및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2023년 시범사업)
-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사업별로 2개년으로 나누어 3년마다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등록된 제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등에 대해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5등급을 부여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게시. 우수기관은 인센티브가 진행되며 미흡기관의 경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
  - 한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 품질수준을 충족한 제공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음. 서비스 운영, 인적자원, 재정건정성, 경영관리 등을 평가하여 인증마크를 활용하고 다양한 홍보를 지원함

[그림 4-7]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현판 수여
- 기관홍보물 및 매체에 '사회서비스 품질인증' 마크 활용
- 홍보 지원 등



출처: 중앙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www.kcpass.or.kr/mps>) 참고.

#### ○ 부정수급 모니터링 실시

- 부정수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에서 결제정보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결제 패턴을 자동으로 점검·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함

#### ○ 지자체 성과평가 실시

-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함
- 지자체의 사업관리 실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컨설팅 등 중간관리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 사업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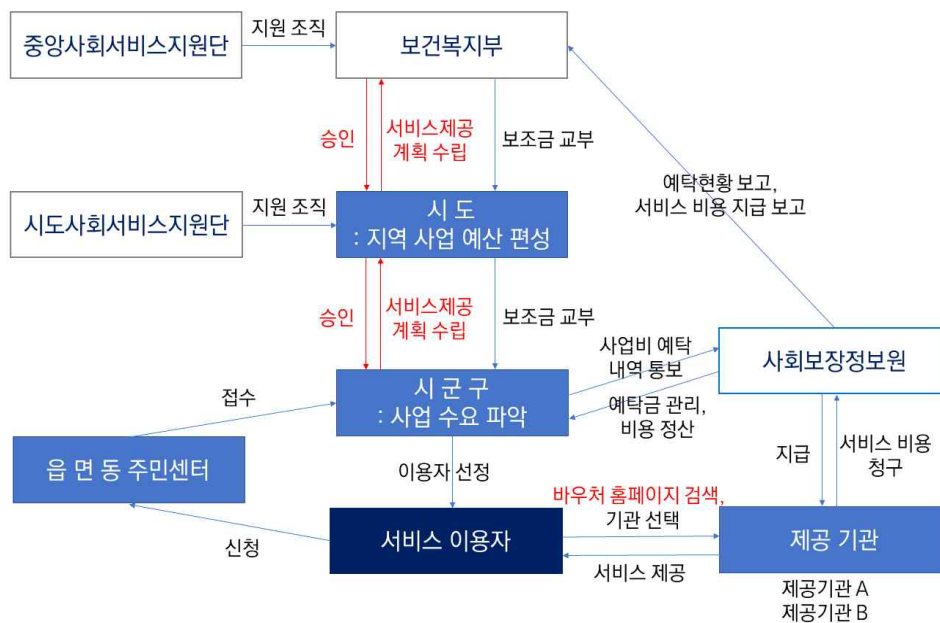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사업과의 총괄 하에 시·도에서 시·도서비스를 기획하고, 소관 지자체의 서비스별 예산 조정 및 집행을 관리하고 자체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사업의 대상자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 전달체계'와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음
  - 행정적 절차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 이는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사업별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소득수준, 연령, 건강상태, 장애유무 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임
  - 이는 사회서비스 전달의 기본적 절차로 사회서비스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 차원의 사업 전달체계라 할 수 있음
- 반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사업 대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선택권을 주는 상향식 구조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된 전달체계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시·도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설립하여 지자체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림 4-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정책 전달체계



출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2023, pp.12,23)를 포함하여 사업안내 전반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즉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는 행정적 절차상으로는 하향식 구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존의 틀은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업대상자들은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에 접속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과 시를 선택하고 해당 사업을 검색하면 제공기관명, 품질평가, 주소, 서비스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갈 수 있음

[그림 4-9] 전자바우처포털 내 서비스 제공 정보 예시

## ■ 제공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업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서비스명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프로그램,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프로그램, 음악심리(상담)프로그램,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앞의 프로그램 중 3개 이상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제공기관에 한하여 실시 가능) (선택제공)

## ■ 제공기관

제공기관명	품질평가	대표전화	주소(본사)	서비스경보
-------	------	------	--------	-------

출처: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사업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표 4-1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해관계자의 역할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군·구 예약금 관리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평가 등)
시·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총괄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별 예산조정 및 집행관리 시·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수립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 시·도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시·도 성과관리 시·군·구 자체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 시·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총괄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당 총괄·지원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재 양성 사회서비스 기획 및 발굴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평가 및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원 민·관 네트워크 구축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

시·군·구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기획·관리 및 시행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 분석 및 예탁금 집행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중도포기자, 미이용자, 대기자 관리,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관리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	---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난 15년간 투입된 예산이나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바우처 방식의 이용자 지원방식으로 이용자의 주권 강화 등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공기관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을 시도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장이 확대됨
  -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도입으로 그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발달하지 못한 비돌봄 서비스, 상담 분야의 서비스 시장 확대와 종사자의 고용 창출에 기여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음
  - 이용자 선정에 있어 저소득 중심에서 소득조건을 점차 완화해감에 따라 욕구가 있는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거나, 성과평가 및 컨설팅의 과정을 통해 지역의 역량과 주도성을 강화시키고 서비스 기획력을 상승시켰다는 점 역시 눈에 띄는 성과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과 평가·관리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구성·제공되는 특성을 보여 지역의 고유성 및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표준모델형 사업 이용자가 전체의 약 80%이며, 최근 지자체 신규 사업은 복지부가 제시한 전국표준형 서비스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역 기획력이 약화되는 양상을 보임
  - 이들 표준모델 사업 중 아동·청소년 대상 3개 표준모델(아동청소년정서발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는 등 아동 대상 사업에 편중된 현상을 보임(안수란 외, 2018),
- 또한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조직과 인력의 역량에 따라 안정적 사업운영에 영향을 받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자체에서는 복지 분야에서도 기피 사업으로 인식되어 신입 공무원이 배치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러 사업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등 인력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됨
- 확대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역시 간과하기 어려움
  - 제공기관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이용자 증가율은 낮음에 따라 제공기관의 영세성

- 과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서비스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용자 유치를 위한 불법행위나, 담합 등이 발견되는 등 영세 영리기관의 난립에 따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 이러한 시장 내에서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종사자들의 처우 역시 열악해지는 것으로 확인됨
- 지역간의 격차,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제공기관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의 제공기관 증가율은 46.4%에 이르는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12.4%에 불과하며, 물리적인 서비스 접근성 역시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박세경, 2016)
  -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윤 창출이 어려움에 따라 제공기관 진입이 어려운 까닭임(전용호, 이민홍, 2018)
  - 이에 2023년 6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거점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출장비나 추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선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노력함
- 대부분의 서비스가 여전히 저소득층에게 제공됨에 따라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며 일반 구매를 통한 산업 활성화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임
  -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반구매전환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반한 서비스 이용자인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 이용자 선별을 위한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로 여전히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서비스 이용자는 저소득 이용자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음
  -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약 28만명의 이용자 중 소득기준 1등급(대부분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인 비중이 14.5%였으며, 2등급 이용자가 43.6%로 나타남.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을 이용하여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이용자가 약 10만명으로 36.4%를 차지하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함에 있어 소득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실제 저소득 이용자의 비중을 더욱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유연한 사업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편성을 포괄보조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사업 기획과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음
- 시도에서 사업 범위 확대나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이 필요할 때 시도 개발 사업 총액 내에서

- 자율적으로 증액이 가능했으며,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수요 및 제공기관의 공급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는 서비스별 예산을 배분할 수 있었음
- 물론 지자체에서는 수요 예측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내역사업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 배분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음
  - 그러나 예산 편성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음에 따라 지역의 욕구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신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시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임
  - 유연화된 예산 활용의 가능성과 지자체의 예산배분의 권한 확보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 → 광역 시도 → 시·군·구’의 행정 전달체계가 잘 구조화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획·운영할 수 있는 조직화가 갖추어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여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구조 상 기초문화재단 혹은 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함
  - 따라서 기존의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 재조정을 통해 중앙 → 광역 → 기초에 이르는 조직체계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 제공기관들이 제도 내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입한 제공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는가도 중요함
- 제공기관의 제도 내에 진입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인증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필수적임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한 후에는 지역 내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사업대상자)가 유지되거나 확대되어 기관이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 최근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로 문화예술교육에 비해 월등하게 필요성이 높은 사회서비스의 접근성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지역 간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대상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같이 소득기준으로 한정하게 되면 사실상 저소득층이 주요 정책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대상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2.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 사업 내용 및 특징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바우처 제도 도입 이전인 2004년 복권기금을 바탕으로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으로 시작됨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서비스 제공보다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보다 큰 비중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추진됨
  - 2008년부터 이용자 지원의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변화를 겪었으며, 2010년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2012년 제공기관 등록제가 실시됨
  - 2013년부터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다시 계정이 분리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예산 배정이 가능하게 됨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역시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소득과 욕구 기준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함
  - 만65세 미만으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보호세대),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등이 서비스 대상자가 됨
- 서비스는 24시간을 기준 월 398,400원, 27시간을 기준 월 448,200원, 40시간을 기준으로 는 월 664,000원으로 책정됨. 시간당 16,600원 수준임
  -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음
  - 월 24시간 A형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추가 시간이 필요할 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함

〈표 4-14〉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나형)		월 421,300원	월 26,90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64,000원	월 664,000원	면제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p.59.

#### ○ 서비스 내용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을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침에 제시하고 있음
- 표준서비스 내용으로는, 신체수발 지원(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간병 지원(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으로 구성됨

#### ○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임
-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경우 제공인력에게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

#### ○ 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자체만족도 조사와 연 1회 이상 제공기관 70% 이상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3년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 사업 전달체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사업 전달체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동일함
- 다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표준화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예산과

이용자 규모에 대한 결정의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 역시 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사업운영 및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음

〈표 4-15〉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이해관계자 역할

추진주체			기능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등 사업 총괄 -사업평가 및 지도, 감독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		-사회서비스이용 신청(행복이음)
	사회서비스보육본부		-시·군·구 예약금 관리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리 -바우처 비용 및 교통비 지급 및 정산 -바우처 시스템 관리, 운영 및 통계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품질본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평가 등 품질관리
시·도	사업 담당부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 -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시·군·구	사업 담당부서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사업비 예산 예약 및 집행상황 관리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 -제공인력 교통지원금 청구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및 현장조사
	읍·면·동 공무원		-서비스 신청 접수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서비스 제공기관 대상 컨설팅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지원 -서비스 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 담당자		-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무관리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 -서비스 비용 청구 및 제공인력 급여 지급 -바우처 시스템 활용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p.13.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경우 단일한 서비스로 이용자 요건이 중앙정부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쟁점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비교하여 뚜렷하지 않음
- 특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65세 이상 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관하였으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에 따라 이용자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음
  - 또한 돌봄 영역의 서비스 제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유사한 돌봄 영역에서 포괄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13년 10,893명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이용했고, 2014년 10,981명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 9,317명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안수란 외, 2018)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바우처방식을 적용한 이후 초기 연구에서는 바우처 방식의 변화에 따라 행정비용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으나(조근식, 김공록, 엄태호, 2010), 다른 바우처 사업들에 비해 잔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의 특성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는 경쟁이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거나, 시장경쟁이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김인, 2010)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역할과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자 확보 방안 등에 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며, 돌봄이 추가 되는 단일 서비스로서 일반 서비스 이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지님
  - 따라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확보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유사 돌봄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 설계 자체의 한계이기도 하고 바우처 방식으로의 재정지원방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과 함께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한지, 바우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점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한계는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제도 설계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사업 내용 및 특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방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함께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2006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초기에는 공모방식으로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함
  - 이후 2008년 금융기관을 활용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12년부터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바우처 운영체계를 전환함
  - 2012년부터 제공기관 등록제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과 함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통합관리 되어 포괄보조사업으로 운영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옴
  - 2013년부터 가격자율화를 시행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다산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기간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부여함
  -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2016년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2021년 이후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또한 기본지원 대상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나가고 있음
  - 예외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에 따른(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기본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대상자를 의미하며, 예외지원 해당자는 시도마다 상이함

[그림 4-1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가능 대상자 기준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①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참고 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상병목록
②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	
⑦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⑧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⑨ 분만 취약지 산모	※ [참고 5] 분만 취약지 현황
⑩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31.

- 그러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수행에 위기가 발생함
  - 기존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의 국비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각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22~'26년)
  - 시도에서 예산편성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공기관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지방이양으로 인해 사업 운영 및 서비스 관리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이 우려되는 상황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1일 8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표준서비스와 부가서비스로 구성됨
  - 표준서비스는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부가서비스는 제공기관에서 표준서비스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상품으로 제시하여 추가 비용을 내고 구매할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부가서비스로는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외 다른 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외 가족의 의류 세탁이나 식사 준비 등에 관한 서비스가 있음

〈표 4-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 서비스

구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산모 신체상태 조사 -유방관리(안마, 마사지 제외) -산후 부종관리(안마, 마사지 제외) -산모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정서 상태 이해 -정서적 지지
기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54.

○ 2023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가격은 다음 표와 같음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을 차등화함
-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함

〈표 4-1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기준가격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청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192	598	1062	1394
		A-통합-①형	150%이하							518	916	1195
		A-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418	704	956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A-통합-②형	150%이하							1062	1394	1620
		A-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863	10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A-통합-③형	150%이하							1089	1414	1647
		A-라-③형	150%초과 (예외지원)							890	1135	138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B-통합-①형	150%이하							1424	1863	2219
		B-라-①형	150%초과 (예외지원)							1159	1466	1788
	인력2명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B-통합-②형	150%이하							1939	2596	3216
		B-라-②형	150%초과 (예외지원)							1645	2220	2764
삼태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3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C-통합형	150%이하							3586	4250	4980
		C-라형	150%초과 (예외지원)							3068	3665	4316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49.

- 최종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고 있음
  -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준가격 외 자율 책정 가격(상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을 그 책정 근거를 포함하여 등록 시군구에 보고하고,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http://www.socialservice.or.kr)) 및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이용자의 자부담을 통해 추가 구매해야 하는 부가서비스는 각 부가서비스 항목별로 단가를 별도 공개하도록 함

〈표 4-18〉 바우처 서비스 범위 외 부가서비스 목록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가격	단위
부가서비스	관리사 지정 추가	10,000	일당
부가서비스	성인 가족 추가	5,000	일당
부가서비스	큰아이 추가 - 미취학 24개월 미만	13,000	일당
부가서비스	큰아이 추가 - 미취학 24개월 이상	10,000	일당
부가서비스	큰아이 추가 - 어린이집, 유치원	6,000	일당
부가서비스	큰아이 추가 - 초등학교 이상	5,000	일당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제공기관 및 판매점 검색 상세페이지 | 서비스검색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socialservice.or.kr](http://socialservice.or.kr))

- 서비스 품질관리
  - 자체만족도 조사와 연 1회 이상 제공기관 70% 이상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3년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의 적용을 받아 서비스운영, 인적자원, 안전·예방, 재정 건전성, 경영 관리의 5개 영역을 대상으로 품질인증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 기관에게는 인증마크 활용 및 홍보지원 등을 3년간 제공함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에 등록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공인력의 기준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유자격 대체인력 풀(pool)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거리 교통지원금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 □ 사업 전달체계

-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유사하지만, 시군구청이 아닌 보건소가 추진주체이며,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음
- 지방이양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향후 추진체계가 지역마다 상이해질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기존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운영했던 체계와 크게 차이가 없음

〈표 4-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이해관계자 역할

추진주체			기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재정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등 집행실적관리</li> <li>사업 성과평가 및 보전금 지급</li> </ul>
시·도	보건정책과 등 사업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추진계획 수립</li> <li>사업비 예산 교부 및 조정</li> <li>제공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정</li> <li>시·군·구 사업 관리 감독</li> <li>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li> </ul>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지침 작성</li> <li>「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해석(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및 관리 등)</li> </ul>
		사회서비스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우처 운영계획 수립,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li> </ul>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정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이용 신청(행복이음)</li> </ul>
	사회서비스보육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군·구 예약금 관리</li> <li>국립행복카드 발급 관리</li> <li>바우처 비용 및 교육비 지급 및 정산</li> <li>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및 통계관리</li> <li>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li> </ul>
중앙 사회 서비스원	사회서비스품질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평가 등 품질관리</li> </ul>
시·군·구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기관 등록</li> <li>사업비 예산 예약 및 집행상황 관리</li> <li>지원대상자 신청 접수 및 선정</li> <li>제공인력 교육비 및 교통지원금 청구</li> <li>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 및 현장조사</li> </ul>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중앙사회서비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li> <li>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li> <li>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li> <li>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에 대한 지원</li> </ul>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시·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공인력 역량강화</li> <li>서비스 제공기관 실태조사 및 컨설팅</li> <li>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조사 및 품질평가 지원</li> <li>서비스 홍보 등 지원체계 구축</li> </ul>

서비스제공기관	기관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비스 제공인력 모집 및 교육, 노무관리</li> <li>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li> <li>서비스 비용 청구 및 제공인력 급여 지급</li> <li>바우처 시스템 활용</li> </ul>
지정교육기관	기관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생 모집, 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li> <li>수료생 관리 및 취업 연계</li> <li>바우처 시스템 활용</li> </ul>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5.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 한정된 단일 서비스 사업인 데 반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출생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수는 증가하였음.
- 이는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의 증가와 함께 지자체의 자체적 사업 설계나 부가서비스나 자율 책정상품 등을 개발·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음(김자연 외, 2022)
- 2013년 58,569명이었던 이용자는 2021년 125,675명으로 증가하였는데, 2019년 지원대상 조건이 확대되면서 이용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음. 출생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3년에는 출생아 1000명당 134.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2021년에는 482.3명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산출됨
- 제공 기관 역시 2017년 기준 683개소에서 2020년 기준 917개소로, 제공인력인 건강관리사는 14,163명에서 20,390명으로 증가함(안수란 외, 2018; 김자연, 2023)

〈표 4-2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자수	58,569	67,791	71,120	82,313	79,515	97,905	136,364	114,192	125,675
전년 대비 이용자 증감(증감율)	-	9,222 (15.7%)	3,329 (4.9%)	11,193 (15.7%)	-2,798 (-3.4%)	18,390 (23.1%)	38,459 (39.3%)	-22,172 (-16.3%)	11,483 (10.1%)

주: 1) 2013, 2014년도는 사업연도가 당해 연도 2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이며, 2015년은 2015.2~2015.1월, 2016년부터는 1월~12월 까지를 기준으로 함

2) 사업연도 내 바우처를 1회 이상 결제한 이용자 기준임

3) 연차별 전년 대비 이용자 증감 및 전년 대비 이용자 증감율은 연구진 산출 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 자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바우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일반 구매 이용 비율이 높고, 시장의 경쟁에 의한 품질개

- 선이 이루어졌으며(김인, 2010)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조현승, 고대영, 박문수, 2013)되었다는 평가를 받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안정된 유사시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함(조남경, 2016)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 중에 가장 산업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증가속도를 넘어서는 제공인력과 제공기관의 성장으로 인해 제공기관의 영세화,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음(안수란 외, 2018; 김자연, 2023)
- 2017년에 비해 2021년에 비해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증가했으나, 제공인력 1인당 이용자 수는 2017년과 2021년 동일하게 6.3명으로 나타남. 2017년 기준 제공기관 평균 이용자 수는 116명이며, 2021년은 137명 수준에 머무름.
- 즉, 출산 가구에서 정부 지원 건강관리사를 통한 서비스 이용기간을 고려했을 때, 제공인력 1인당 한명의 서비스 제공 기간은 대략 19주로 한 명의 건강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연내 대략 4~5개월에 불과한 것이며, 제공기관의 영세성에 대한 우려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향후 지방이양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과 품질 관리, 지역격차에 관한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경우, 서비스 지불의향이 높고 추가 서비스의 기획 및 구매가 가능한 영역임
- 이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서비스 목록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
- 여기에 지자체에서 대상자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었음
- 더욱이 이미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사 서비스(민간 산후조리원 등)에 비해 서비스 비용이 낮았고 산후조리사 양성과정 등을 체계화 하여 품질관리를 시도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를 유인할 요인이 되었음
-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아동청소년 사업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높을 수 있으나,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여 서비스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임



## 4.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 사업 내용 및 특징

#### ○ 사업 소개

-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심리정서를 지원하는 사업임. 이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 청년심리지원서비스로 2021년 5월에 시작됨. 이후 지역 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신설되어 2022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함<sup>49)</sup>
- 본 사업은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됨. 단,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마음 지원사업과는 동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지원이 가능함<sup>50)</sup>
- 해당 서비스는 주 1회씩 3개월 간 지원되며 기본적으로 10회가 지원됨. 이 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또한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됨. 사전검사 1회에 맞춤형 서비스 8회, 사후검사 1회로 총 10회로 구성됨. 만약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의 경우 재차 판정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하여 추가적인 이용 가능함
- 세부 종류는 90분으로 구성된 사전·사후 검사와 회당 50분으로 구성된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종결상담까지 총 3가지로 구성됨. 맞춤형 서비스는 일대일 진행이 원칙으로 주 1회씩 총 8회 가량 제공됨<sup>51)</sup>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이용을 희망하는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청년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해 추진됨<sup>52)</sup>

#### ○ 사업 대상

- 지원에 있어 요구되는 소득기준은 없으나 우선순위는 존재함. 1순위는 자립준비 청년으로 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어 만기 퇴소하거나 연장 보호가 종료된 자가 대상임
- A형은 일반적인 심리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 부담 없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사례로 이해됨. B형은 자립준비청년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과 같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인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됨<sup>53)</sup>
- 단, 1순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는 서비스의 유형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됨.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이며 3순위는 일반 청년이

49)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50)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51)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52)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53)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대상으로 설정됨<sup>54)</sup>

〈표 4-2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이용권의 발급기준,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년기본법」 제21조	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 ○ 지원 범위

-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성되며 이용자의 여건에 맞게 선택권이 보장됨. A형은 1등급과 2등급을 포괄하는 유형으로 서비스 가격이 총 60만원이 소비되며 이 중 정부지원금은 54만원에 본인부담금 6만원이 필요함. B형 같은 경우는 3등급 대상자가 해당되며 서비스 가격이 총 70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은 63만원에 본인부담금 7만원으로 구성됨<sup>55)</sup>

〈표 4-22〉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유형 및 가격

(단위: 원)

서비스 유형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A형	600,000	540,000	60,000
B형	700,000	630,000	70,000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54)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55)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 □ 사업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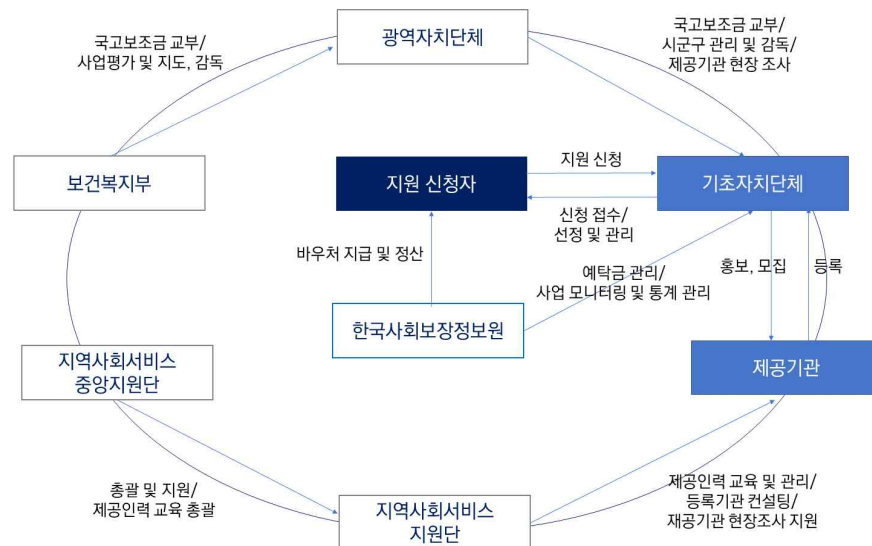
- 해당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를 통해 운영되며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대한 재정을 지정하면 지자체가 이용자를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비율은 서울 50%, 이외의 시·도 70%, 성장촉진지역은 80%를 지원하는 식으로, 차등적으로 예산을 교부하여 진행함<sup>56)</sup>
-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각각의 단계별로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sup>57)</sup>
  - 보건복지부는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검토하며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 및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함
  -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시도는 사업을 홍보하고 시군구를 관리 및 감독하며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 검증을 담당함. 시군구는 시도의 절차에 따라 제공기관을 모집해 등록하며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함. 또한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하고 선정부터 관리, 제공기관 감독까지 담당함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시군구의 예탁금을 관리하고 바우처를 지급한 뒤, 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함. 이와 더불어 투명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과 통계관리를 진행함
  -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지역지원단을 총괄하고 지원하며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또한 제공인력의 교육을 관리함. 또한 등록기관을 컨설팅하고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원함
  - 지역 내 서비스지원단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한국사회보장정보원까지 연계가 밀접하게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예산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모니터링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자치단체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분리하고 예탁금의 관리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맡겨 더욱 꼼꼼한 사업 관리가 가능함. 이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지역 내 복지 생태계 형성에 기여함
- 지역사회서비스를 위해 구성된 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특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사업 품질을 향상시키며 지역에 적합한 사회서

56)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57)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스를 기획하거나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 운영됨<sup>58)</sup>

[그림 4-11]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정책 전달체계



출처: 2023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은 지역지원단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감독함<sup>59)</sup>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세부적으로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을 담당·관리하고 사업을 홍보하며 정보 제공을 통해 등록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함<sup>60)</sup>. 즉,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지원단과 달리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원하며 지역민들에게 더욱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운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능함<sup>61)</sup>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역 특성에 더욱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내 조직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관리하고 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업을 모니터링하며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함
- 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시·도지사의 판단 하에 지역 내 지원단 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은 기관에 설치됨. 이 과정에서 시·도는 지원단의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광역 지자체는 지역사회서비스운영과 관련된 지원단을 관리하고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 역할을 함. 예산 교부 및 관리·감독 업무를 진행하며 제공기관에 대상 현장조사를

58)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59)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60)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61)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총괄함

- 기초 지자체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가 기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함. 제공기관을 모집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비를 관리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신청에 기반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함. 또한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더욱 세부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함
-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법률 내에서 친족으로 정의되는 배우자 및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할 수 있음. 또는 법정 대리인이나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 내 위치한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에 문의하여 이용이 가능함.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이후 사용이 가능하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또한 예외는 아님<sup>62)</sup>
  -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양한 금융 기능과 연계되어 있으며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해 이용이 가능함
  -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신청해 발급이 가능함. 기발급자 또한 신청을 통해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종료 후 금융카드로 사용가능함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적절한 자부담 금액이라는 사용자들의 평가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제공 기관에 대한 만족도로 꾸준히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서비스 추천의향과 자부담 금액의 적절성, 담당자와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이는 이용자들의 수요 증가와도 맞아맞아있음<sup>63)</sup>
- 이용자들 중 기존에 이용하던 상담센터에서 해당 사업을 알려줘 지원을 신청한 경우도 있으나, 상담센터가 사업에 대해 모르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이용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사료됨
  - 본격적으로 사업이 2022년에 시작된 만큼 아직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다수임. 아는 사람만이 알아서 신청해 수혜자가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더욱 높여 사각지대에 놓인 이용자들을 더욱 발굴해야함
  - 실제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서울시 기준으로 1순위인 자립준비청년 중 이용률보다 본

62) 서울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3.11.30.,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63) 서울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023.08). 2023년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물.

인부담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순위 대상자의 이용률 73.5%로, 이는 1등급(26.5%)의 3배에 달하는 비율임<sup>64)</sup>. 본인부담금이 더 부가됨에도 2등급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해야함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고도화된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앞서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지역사회서비스에서 논의했던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에의 유의점과 유사한데, 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기관들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지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기획·발굴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관 및 인력이 충분하게 갖춰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함
- 그러나 특정 연령대의 대상 집단을 설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사회서비스를 설계할 때 연령별 요구도, 필요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정책 수립 시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임
  -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요인 중 하나가 적절한 자기 부담금액이라는 것은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책정하여 공공에서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한다면 충분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인식을 보여줌
  -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설계할 때 공공 영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 할지라도 기관 또는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 이용자들이 유료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한계에서도 노출된 것처럼 여전히 처해 있는 특정 환경에 따라서 기준을 한정하게 되면 대다수의 일반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특정 연령대의 서비스 대상 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차등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음

64)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023.08). 2023년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발간물.

〈표 4-2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별 특성 요약표

사업명	사업대상	대상자 기준검토 (전담 부처)	서비스 총괄기관	결제 방식 (온오프라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유무, 소득수준, 건강상태, 출생년도 등 사업별 상이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자체 산하기관)	오프라인 (전용 단말기 사용)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만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자체 산하기관)	오프라인 (전용 단말기 사용)
산모신행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 및 예외지원대상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자체 산하기관)	오프라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보건복지부)	만 19세~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상태, 일반청년) ※ 소득기준 X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자체 산하기관)	오프라인 (단말기 직접 결제)

## 제3절 | 타 기관 사회서비스 사례

### 1.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 □ 사업 내용 및 특징

##### ○ 사업 소개

-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제도임<sup>65)</sup>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임.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원 규모에 맞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함
- 2018년에 도입되어 이후, 국가 예산 규모가 6배 이상 증가해왔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진흥원이 있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진흥원은 상하관계가 아니며 광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흥원을 설립한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음. 한편 지방 지자체는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운영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기관의 신고증에 기반해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담당함
- 해당 바우처는 전국의 농협에 방문해 신용카드 형태로 신청할 수 있음. 우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함. 이용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카드 발급 진행이 가능함. 농협을 방문했을 때, 관련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신분증만을 준비하여 발급이 손쉽게 가능함
- 평생교육법 제16조에 의거해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sup>66)</sup>

65)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2023.8.31., <https://www.lllcard.kr/Contents.do>

66) 교육부.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교육부 보도자료, 2023.1.16.



〈표 4-24〉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 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2023. 4. 18.>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5.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 사업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지원 대상임(만 19세 이상)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대상임<sup>67)</sup>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기간 내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과 중복지급 불가함(평생교육바우처 신청 불가)<sup>68)</sup>

〈표 4-25〉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구분	자격명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 지원 범위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1인당 35만원씩 2023년 기준, 57,000명 내외의 해당 인원에게 지원됨. 또한 우수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35만원을 재충전(2023년 하반기 예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임<sup>6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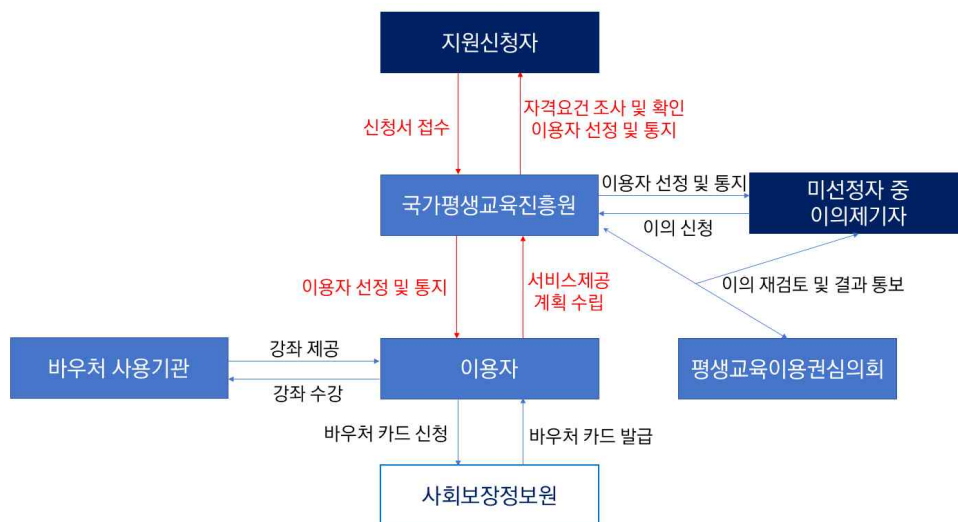
67)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2023.8.31., <https://www.lllcard.kr/Contents.do>  
 68)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2023.8.31., <https://www.lllcard.kr/Contents.do>  
 69) 교육부.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결제 시 한도가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함. 단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 이상일 경우, 초과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함. 또한 본인 사용 및 본인 수강이 원칙으로 만19세 미만 대상 강좌에 사용 불가함<sup>70)</sup>
- 원칙적으로 강좌 수강료로 사용해야하며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강좌의 교재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유무선 전자 통신기기 등은 구매 불가함. 수강료 결제는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지할 때까지 기간으로 설정됨. 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이나 현금 인출이 불가함<sup>71)</sup>

## □ 사업 전달체계

-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행정망을 통해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함
-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음

[그림 4-12]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의 정책 전달체계



출처: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을 위하여 체크카드 (농협과 협력하여 평생교육희망카드 발급 중)를 발급받아 사용기관에서 현장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교육부 보도자료, 2023.1.16.

70)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2023.8.31., <https://www.lllcard.kr/guide/useVcMethod.do>

71)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2023.8.31., <https://www.lllcard.kr/guide/useVcMethod.do>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바우처를 위한 별도의 가맹점 코드를 부여받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가 발급받은 평생교육희망카드는 평생교육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되도록 세팅되어 있어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반드시 연 2회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관의 기본 정보, 업무담당자,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평생교육강좌 운영계획서, 교육과정 영역별 분류 등이 최신화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함
- 정기적인 최신화 작업을 통해 평생교육을 서비스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요자가 최선의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사용기관 및 대상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부정사용 관리에 대한 가이드를 사전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사용기관 및 바우처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는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온오프라인(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2023년 10월 기준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가능한 기관은 전국 기준 총 2,927기관이며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여러 개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림 4-13]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의 사용기관 조회 예시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interface for Lifelong Education Voucher providers. It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 사용기관명** (Institution Name): A text input field.
- 지역** (Region): Two dropdown menus, both set to '전체' (All).
- 기관 구분** (Institution Type): Three checkboxes:
  - ☐ 온라인 교육기관 (Online Education Institution)
  - ☐ 오프라인 교육기관 (Offline Education Institution)
  - ☐ 온/오프라인 교육기관 (Online/Offline Education Institution)
- 기관 연계사업 유형** (Institution Linkage Program Type): Three checkboxes with icons:
  - ☐ 학점은행제 (Credit Bank System)
  - ☐ 평생학습계좌제 (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
  - ☐ 성인문해교육 (Adult Basic Education)
- 기관 운영강좌 유형** (Institution Operating Course Type): Three checkboxes:
  - ☐ 학점은행제 (Credit Bank System)
  - ☐ 성인문해 및 학력인정 (Adult Basic Education and Credit Recognition)
  - ☐ 외국어 (Foreign Language)
  - ☐ 취미/교양 (Hobby/Civics)
  - ☐ 컴퓨터(IT) (Computer/IT)
  - ☐ 자격증 (Certificate)
- 검색하기** (Search): A large blue button on the right side.

출처: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사용기관 안내

- 평생교육바우처사업은 다양한 참여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독특한 구조임
-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책을 사업화하고, 평생학습기관이 제출한 신고증에 기반하여 평생학습시설로 인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각 지역에는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단위의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상하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지역의 평생학습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평생교육 분야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에서 먼저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 단위의 활동지원과 광역의 관리·감독체계가 잘 구축된 상태에서 중앙 단위의 통합적 지원이 설계된 케이스라는 점에서 풀뿌리 사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볼 수 있음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평생교육바우처는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는 취약계층 성인 학습자들이 갖는 학력보완에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으며<sup>72)</sup>, 단순한 학습참여율 증가 외에도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식으로 다양한 효과를 유도함
  -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평생교육기관이 꾸준한 추세로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이고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바우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인프라가 점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임
- 평생교육바우처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함
  - 평생교육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무기력증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기회로 작용하거나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옴
  - 성인이 되어 스스로 교육을 받기 위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바우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평생교육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데에 비해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못하는 추세임
  - 평생교육바우처의 신청인원은 매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2022년에는 신청인원이 72,000여 명을 기록해 초기에 비해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이에 반해 선정인원이 한정되어 선정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sup>73)</sup>
  - 즉, 수요에 비해 예산 확보가 부족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강한 욕구를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72) 김민정(2023.2.28.).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105pg.

7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23.9.5., <https://www.nile.or.kr/index.do>; 김민정(2023.2.28.).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102pg.

[그림 4-14] 최근 5년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현황

(단위: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인원	5,000명	5,000명	8,000명	15,000명	15,000명
신청인원	5,851명	8,127명	10,671명	28,000명	72,000명
선정인원	5,361명	7,325명	9,544명	21,000명	39,000명
선정률	91.6%	90.1%	89.4%	75.0%	54.2%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김민정(2023.2.28.).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102pg.

-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중앙과 지역이 분리되어 있어 중앙과 지역 평생교육진흥원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 구현이 필요함
  - 관련 행정의 이원화, 네트워크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역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특히 법 내에서는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 배치해야하나 현장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해 사업 운영과 관련해 보완해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sup>74)</sup>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역할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가파르게 상승하는 이용자들의 평생교육 수요를 원활하게 소화하고 적절한 교육 사업을 공급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개선되어야 함
- 2021년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발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전 국민에 대해 평생 학습이 유도되어야 함<sup>75)</sup>
  - 처음으로 도입된 2018년 당시의 예산에 비해 약 6배 이상(2,391백만 원→ 14,073백만 원) 증액되었으나 보편적 제도로 공급하기에는 여전히 예산의 한계가 존재함
- 바우처를 가족을 포함한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를 해주거나 사용기관과 공모해 바우처 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담인력 확대가 필요함

74) 김정원 외(2021).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 연구. 교육문화연구, 27(6), 140pg.

7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평생교육바우처는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중앙으로 제도가 올라온 바우처 제도로 그만큼 지역 단위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중앙에서 하향식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문화예술교육 분야와 다른 구조로 진행되어 옴
- 윤석열 정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 생애 학습기회 제공이라는 정책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함
  -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세상에 직면하여 지속적으로 원할 때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전환은 정책 대상의 전면적인 확대를 시행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제도의 도입은 국민 모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평생교육바우처의 정책전달체계에서 지역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평생교육원과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조정·개발·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조직의 변화에 따라 현재 설립되어 있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문화재단의 역할 재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평생교육바우처 역시 민간 시설을 협력 기관으로 포섭하여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했다는 점에서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학습권을 최대한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준은 아니지만, 평생교육바우처도 1인 35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으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를 운영학교 기관과 연계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 민간 기관들을 선택하는 사용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친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평생교육바우처에서 사용 가능한 항목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시설, 단체들이 평생교육법 상의 시설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을 포함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이나 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상이하기는 하나 「평생교육법」상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기관이어야 함
-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평생교육시설로 인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사업을 통해 문체부에서 별도의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대신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내로 편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증 받은 후 관리·감독은 문체부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함



##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 □ 사업 내용 및 특징

#### ○ 사업 소개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해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게 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임
- 또한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개선을 위해 운영됨<sup>76)</sup>
- 일시적인 양육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여 보육복지와 관련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정 내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됨<sup>77)</sup>
-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제서비스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로 구분되어 서비스가 제공됨<sup>78)</sup>
- 해당 사업은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됨. 각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상이함

#### ○ 사업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소득기준에 따라 ‘가~다’형과 ‘라’형으로 가구 유형이 구분됨. 구분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을 차등하게 적용함<sup>79)</sup>
- ‘가~다’형 : 양육공백 발생 가정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들이 해당함. 행정구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하여 유형이 확정된 뒤,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 이용함.
- ‘라’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혹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가구들이 해당함

76)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3.9.1.,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7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3.9.1.,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78)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23.9.1.,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79)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13pg



〈표 4-26〉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제2조	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9.〉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목적	이 규칙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9pg.

〈표 4-27〉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가형	75% 이하	3,327,000	4,051,000	4,749,000	5,421,000	6,081,000	6,741,000
나형	120% 이하	5,322,000	6,482,000	7,597,000	8,674,000	9,730,000	10,785,000
다형	150% 이하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12,162,000	13,481,000
라형	150% 초과	-	-	-	-	-	-

출처 :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3pg.

## ○ 지원 범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아동까지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로 정부에서 서비스를 지원함. 단,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됨. 돌봄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구성됨. 연 960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지원하며 중증장애 부모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또한 적용됨. 단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서비스 이용대상은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기관 이용 아동임. 또한 이용가정이 정부지원시간 차감을 적용할지, 미적용할지

이용가정이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함

- 기관연계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이 돌봄 대상임. 기관 내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를 보조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됨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 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 부 혹은 모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가구유형이 '가~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함

〈표 4-28〉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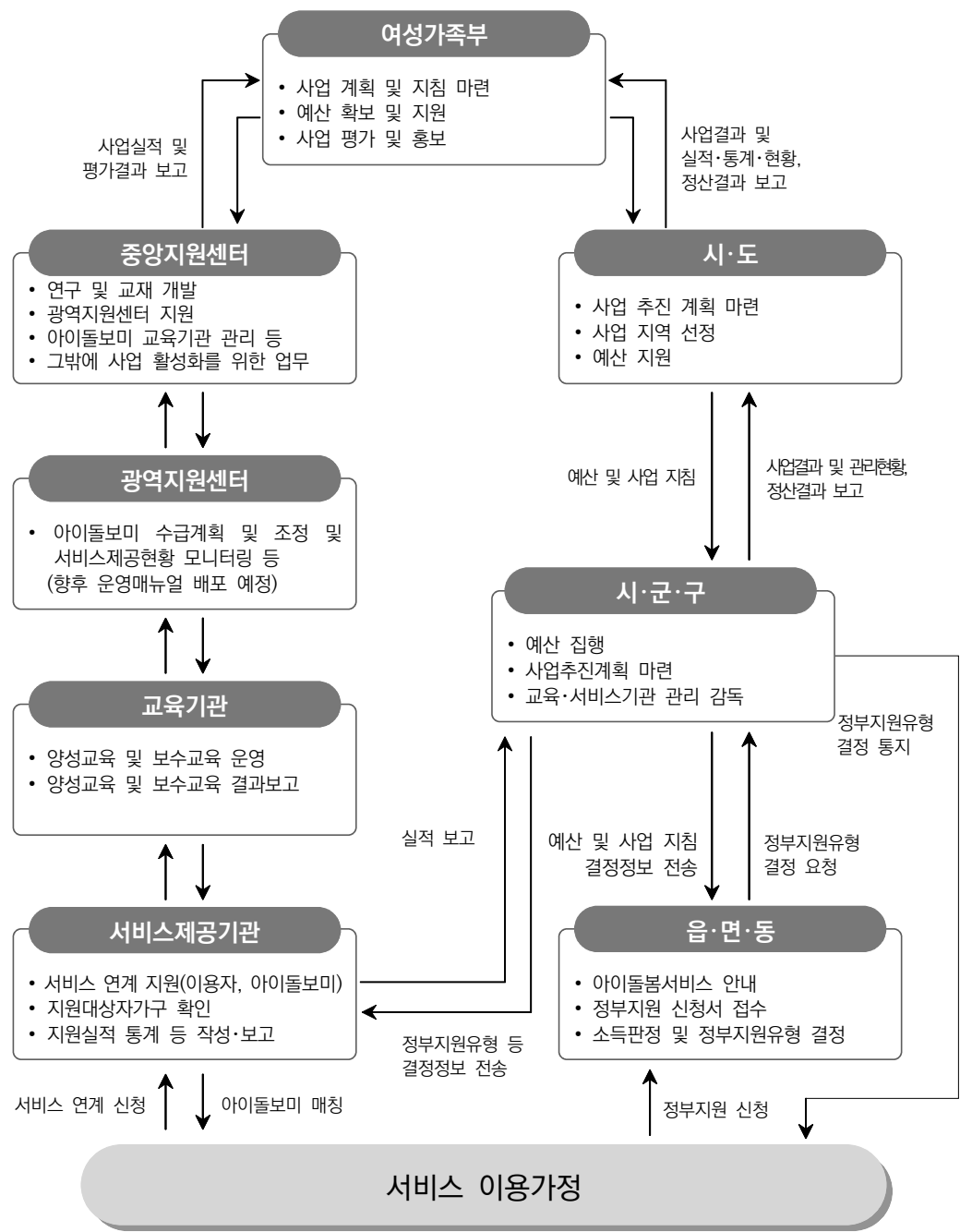
구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기관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돌봄활동 범위	영아 돌봄 활동 전반. 대상 아동 관찰 사항을 이용 가정에 전달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 보육, 놀이 활동, 간식 및 식사 챙기기(조리 미포함)	기본형 돌봄서비스 아동 관련 가사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돌봄 대상 건강, 질병 관련 특이사항, 가정에 전달	기관 내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 보조
최소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월 최소 60시간 이상 이용 시 정부 지원)	1회 2시간 이상			
정부지원 시간	월 80~200시간	연 960시간 (중증장애 부모 자녀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1,080시간 적용)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과 미적용 중 이용 가정이 선택	-
비고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로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금지)				

출처 : 이정원(2022).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전략. 육아정책포럼.;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3pg.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 사업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사업 대상자의 소득수준과 가정 유형에 따라 가-라 등급을 구분하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는 사업을 안내하는 형태로만 결합되어 있는 구조임
  - 구분된 등급을 통해 서비스 지원금액과 서비스 사용시간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음
- 시·군·구는 시·도에서 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고, 서비스제공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집행-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아이돌보미관리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 교부

[그림 4-15]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정책전달체계



출처 :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p. 14.

- 시·군·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필요액을 예약하여 결제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함. 시·군·구는 연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약금 및 서비스제공기관 교부금간의 적절한 분배 등을 통해, 예약금 부족액 및 서비스제공기관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회서비스 대상자임을 결정통보를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 서비스제공기관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정부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라’ 유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교육기관 관리, 광역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는 기관에 수탁사업의 형태로 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시간당 기본요금을 기재부와 협의 후 고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예산과 정책을 관리하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함
-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앙 - 광역 매칭, 광역 - 기초 매칭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가족부가 광역 지자체가 50%:50%(서울만 30%:70%)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고, 광역은 다시 기초와 매칭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아이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사업 확장과 유형의 다양화, 확대된 지원형태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임
  - 특히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번 서비스를 경험한 부모들은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sup>80)</sup>
  -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고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지원 유형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거나 아예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
  - 아이돌보미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였으며, 여가부에서 고시하는 서비스 비용에 수당 및 각종 4대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사회안전망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
- 아이돌봄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여 아이돌보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서비스 매칭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
  - 특히 이용자들의 신청이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돌보미의 수를 확대

80) 육아정책연구소(2023).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주요내용. 육아정책연구소, 1pg.

하지 않는 이상 원하는 수요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한계임

- 이러한 이유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현행 <80시간 교육 이수 → 10시간 실습>에서 이론보다는 실기·실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사한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들이 아이돌보미 제도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하여 운영 예정임
- 민간의 돌봄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인증한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집으로 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들은 아이돌보미에의 신원확인 및 경력 여부, 교육 이수 등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지만, 공공이 아닌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 아이돌보미 별로 역량이 상이해 개별 차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역량 강화와 선정 기준 보완 역시 요구되는 중임<sup>81)</sup>
  - 이에 공공과 민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국가 자격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이나 민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연간 지원예산 수준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소득유형별 지원과 일부 추가지원 유형으로 지원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소득기준의 경우 맞벌이 가정은 여성의 복직에 따라 달라진 소득유형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급격하게 체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sup>82)</sup>, 다태아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가구 단위로 이용 시간 총량을 부여해 자녀수가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아이돌봄서비스는 타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세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적용에 있어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입(역할)이 가장 최소화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됨
  -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바우처가 생성되고 국가지원금액에 대한 예탁금으로 비용지급과 정

81) 윤자영(2022). 아이돌봄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21-13, 163pg.

82) 윤자영(2022). 아이돌봄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21-13, 146pg.

- 산이 가능하지만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비용지급과 정산 절차일 뿐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 접수 결과 등 사업에 관한 사안은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지 않음(김은하 외, 2020)
- 별도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서비스 승인과 이용이 가능한 구조임
  - 중앙과 지역의 매칭 구조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예산 규모가 2023년 기준 3,400억, 2024년 4,500억을 예상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사업임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용자들의 민감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제도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중앙 - 광역 - 기초’의 주체별 역할구분이 매우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제공기관의 관리·감독은 현장과 가장 맞닿아 있는 기초 단위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임
  -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는 사용자의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에 비하여 사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민감성은 낮을 수 있지만, 사업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 결국 문화예술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해야 하는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차용하여 문체부가 여가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센터와 문화재단이 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인 예술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역할 재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내에 지원사업으로 포함되어 타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들에게 동시에 홍보되고, 예약금 관리, 바우처 생성 및 지급 등의 업무를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전적으로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지원대상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사업대상자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도 차용할만한 홍보 방식임
    -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예산, 기관 운영·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및 매칭 등 모든 사업을 문체부가 진행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별도의 포털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와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 □ 사업 내용 및 특징

- 에너지바우처는 2013년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방안 중 하나로 기획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지만 ‘바우처 통합관리시스템 공동활용’이라는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 효율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됨
- 2013년 예산은 1,665억원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투자계정)로 운영됨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한정함
  -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였으며, 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는 구매형 에너지비용 바우처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청구된 에너지비용을 에너지공급사가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상카드 형태의 바우처도 함께 활용하고 있음
  - 전기(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도시가스(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사용), 지역난방(가상카드 사용), 등유(실물카드 사용), LPG(실물카드 사용), 연탄(실물카드 사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 사업 전달체계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읍면동에 위치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군구 행정기관으로 전달됨. 이후 시군구 행정기관에서 대상자격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결정하면, 선정결과가 통보됨
- 선정결과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정보가 전달되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대상자는 카드 결제마다 지원금이 차감됨
- 각 지역 행정기관에서 바우처 발급과 사용의 관리하며,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주택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카드 비용 정산을 진행함

〈표 4-29〉 에너지 바우처의 정책 전달체계

구분	주체	내용
신청·접수	읍·면·동 담당공무원 (본인, 친족,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li> <li>에너지요금고지서(영수증)</li> </ul>
↓		
신청 서류 검토	읍·면·동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특성(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원 수 확인</li> <li>에너지요금고지서 고객번호 확인</li> </ul>
↓		
대상자 선정·결정	시·군·구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자격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li> </ul>
↓		
통지	시·군·구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정결과 통지(서면 및 전자문서 발송)</li> <li>*결정정보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등으로 전송</li> </ul>
↓		
카드발급 정보전송	한국사회보장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물카드 정보는 국민행복카드 사업자로 전달</li> <li>가상카드 정보는 에너지 공급사로 전달</li> <li>*관련 데이터는 한국에너지공단도 공유됨</li> </ul>
↓		
카드발급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li> <li>*거동이 불편한 경우, 전화로 발급신청 가능</li> </ul>
↓		
결제·차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판매소 등에서 에너지비용 결제</li> <li>* 가상카드는 에너지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li> </ul>
↓		
정보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우처 대상자 사망·전출입 등 재신청 등을 통한 정보관리</li> </ul>
↓		
사후관리	읍·면·동/시·군·구 담당공무원,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바우처 발급 및 사용 안내</li> <li>부정사용 등 사용중지 사유 발생시 바우처 사용중지 조치(담당공무원)</li> <li>*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중지처리 후 국가바우처시스템(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li> </ul>
↓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에너지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용 예탁 및 정산</li> <li>카드 사용 비용 청구 및 정산 등</li> </ul>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23).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p.10.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sup>83)</sup>

- 취약계층인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는 바우처로 제공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장 취약한 연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이 지적되고 있음

83) 에너지바우처의 예산부족과 이용자 확대, 단기적 해결방안 등의 한계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논의이므로 제외함



- 바우처라는 지원액 안에서 가장 값싼 연료인 연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연탄 사용이 결코 환경유해물질 배출이나 안전사고의 위험성 측면에서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이상민, 2023)
- 즉,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형태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함
- 한편 에너지 바우처의 낮은 정보접근성, 시장의 미발달 등에 따른 미사용 문제가 지적되기도 함(최혁구, 2022)
  - 2021년 기준 부산지역 에너지바우처 비사용 비중이 20.3%로 나타났는데, 이는 에너지바우처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함에 따라 사용처를 찾지 못한 미이용자가 많으며,
  -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정보 접근성 등이 떨어짐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에너지바우처 역시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타부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다만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아닌 기존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하는 구매형 바우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에너지바우처 사업 역시 타부처 사업이기 때문에 전자바우처 시스템 활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주택관리공단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주택관리공단시스템에 바우처가 생성됨에 따라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는 이용실태를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거나, 일부 변경사항의 경우 여전히 수기로 관리되어 전달되는 등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 서울형 여행바우처

### □ 사업 내용 및 특징

#### ○ 사업 소개

- 서울형 여행바우처는 휴가 문화의 확산과 국내여행 활성화 기여를 위해 진행되는 제도로, 서울시 내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소득 수준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노동자들에게 휴가비의 일부를 지원해 여행상품 구매를 촉진시킴<sup>84)</sup>
- 해당 제도는 관광기본법 제1조, 관광진흥법 제49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는 사업<sup>85)</sup>으로 수혜자들에게 온라인몰 포인트 제공 방식으로 구매권을 인정함
-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 패키지, 입장권 등 국내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여행바우처 사업은 지자체 보조 70%에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으로 시행됨<sup>86)</sup>.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기획 및 재원 조달을 담당하고 직접적인 사업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임

〈표 4-30〉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관광기본법 제1조	국민관광복지 향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관광진흥법 제49조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②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구분된 권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5., 2009. 3. 25.> 1. 권역의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권역의 관광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정비·보완 등에 관한 사항 4의2.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6. 관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 권역의 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3. 5.>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의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84) 서울시, 서울관광재단(2023.4.3.).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85) 한숙영 외(2017). 여행바우처 이탈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7(9), 488pg.

86) 한숙영 외(2017). 여행바우처 이탈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7(9), 488pg.

		<p>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p> <p>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p>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0.1.27]</p> <p>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p> <p>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p> <p>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7]</p> <p>③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p> <p>⑦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⑧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p> <p>⑨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p>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 ○ 사업 대상

- 서울시 거주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동 종사자 중에서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임(만 19세 이상)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해당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제출이 가능한 자
- 특수형태근로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고용형태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 제출 필수). 주로 하나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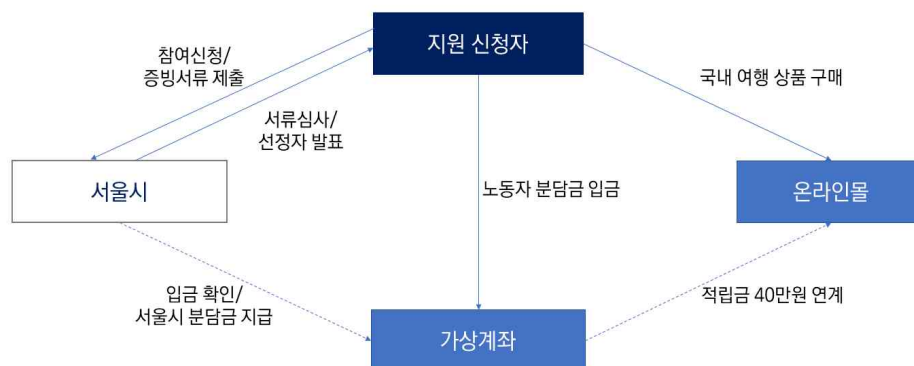
- 플랫폼 노동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일을 얻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다수에게 개방된 경우에 해당함. 지원 예산 규모가 한정된 만큼 전년도에 해당 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함
- 서울형 여행바우처 제도는 근로형태, 소득기준과 거주지역이라는 조건으로 사업대상을 구분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추천 방식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함

#### ○ 지원 범위

- 모집 정원 내에서 무작위 추천을 진행해 3,200명을 선정 및 진행함
- 참여하는 근로자가 15만원을 부담함. 나머지 25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해 총 40만원의 적립금을 조성함
- 지원 받은 적립금은 지정된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국내여행패키지, 레저 입장권 등 국내여행 상품구매에 사용가능함. 적립금 사용 시한은 6월부터 11월 중순까지임
- 부여된 포인트 중 50% 이상 미소진한 참여자는 추후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됨. 그러나 사용기한 마감 3개월 이전에 반납할 경우, 예외로 허용됨

#### □ 사업 전달체계

[그림 4-16]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정책 전달체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 사업의 성과

- 여행바우처 사업은 개인과 가족 자본을 향상시켜 국내 관광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함. 즉, 국내여행상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옴<sup>87)</sup>
- 서울시민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해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그 결과, 2023년 서울행복여행 사업의 지원 인원은 총 1,900명으로 전년 대비 400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었던 국내 관광업계에 대해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함<sup>88)</sup>
- 2022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 신청자는 3,197명, 참여자는 1,316명을 기록함. 이와 더불어 포인트 사용률이 97.7%로 높은 수치를 드러내 사업 이용자들의 활발한 사용행태를 확인할 수 있음<sup>89)</sup>.
-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형 여행바우처 참가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전 만족도’와 ‘재참여 의향’은 각각 94.7%와 96.6%를 기록<sup>90)</sup>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냄. 즉,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은 참가자의 수요에 맞춰 적절한 복지를 공급하고 있음
- 서울형 여행바우처 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들은 성수기에 저렴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여행 외에도 생활 용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음. 또한 관광 취약계층에게 더욱 나은 근로를 위해 환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해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함<sup>91)</sup>

### ○ 사업의 한계

- 바우처 사용방식의 제한과 지원 금액 및 사용가능 기간 부족 등 정책적 문제들로 인해 수혜자들은 여행바우처 사용을 포기해 이탈되는 경우가 다수임. 여행자 평균 지출액에 비해 적은 지원금 및 짧은 사용기간은 큰 제약으로 작용함. 즉, 여행바우처 사업 이탈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함<sup>92)</sup>
- 지자체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여행바우처 사업 형태가 상이하게 다름. 다양한 추진방식으로 인해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함<sup>93)</sup>. 사업 신청 및 진행 기간과 홍보 콘텐츠 및 자료 등을 통일해 대상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야함

87) 한숙영 외(2017). 여행바우처 이탈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7(9), 492pg.

88) 내 손안에 서울. “지원 받고 떠나자! 서울형 여행바우처.” 서울시 보도자료, 2023.4.13.

89) 서울관광재단(2023.2). 2023년 주요업무보고, 65pg.

90) 서울관광재단(2023.2). 2023년 주요업무보고, 65pg.

91) 내 손안에 서울. “‘서울형 여행바우처’로 떠나요! 사회초년생의 속초여행기.” 서울시 보도자료, 2023.8.16

92) 한숙영 외(2017). 여행바우처 이탈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7(9), 493pg.

93) 한숙영 외(2017). 여행바우처 이탈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7(9), 495pg.

〈표 4-31〉 서울형 여행바우처의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주요 내용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계획수립 및 온라인몰 구축 (운영사 선정)	2,000명 지원	5,000명 지원	5,000명 지원	5,000명 지원	5,000명 지원

출처 :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2018.10). Seoul Tourism Plan 2023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 14pg.

- 기존에 수립되었던 발전계획에 따르면 시행 초기인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5000명을 2023년까지 지원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음<sup>94)</sup>. 그러나 실제 참여자 규모를 살펴봤을 때, 4000명이 안 되는 규모로 모집되어 계획과 달리 충분한 지원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함. 즉, 시민 생활관광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과거 코로나 19로 인한 국내 관광업계 불황으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음. 또한 이후 사업 재개가 연기되고 지원 규모 또한 타 업종 대비 낮다는 한계점이 지적됨. 여행바우처 이용자가 꾸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함<sup>95)</sup>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특성 직군에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사회서비스와는 매우 다른 구조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이 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준(우선순위, 접수 순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서비스제도 자체가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조화된 다른 사회서비스와는 다른 구조임
  - 추첨제도는 신청자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서비스 신청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거주 지역, 문화예술교육 경험의 유무 등 여러 요인을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분리하여 제도를 설계하게 될 때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기회를 제공받고 싶어하는 대상자는 무수하게 많을 것임
  - 따라서 소득이나 연령, 문화예술교육 경험 유무 등의 기준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자를 제한하고 특히 지원금의 한계로 인하여 소득이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면, 오히려 역차별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

94)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2018.10). Seoul Tourism Plan 2023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 14pg.

95) 김기남. “[취재 후] 줄줄이 중단된 여행 지원 사업…업계 살릴 근본 대책도 강구해야.” 여행신문, 2020.10.05.

- 문화예술의 경우, 신청 당시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자라오면서 노출된 환경에 의하여 관심이나 경험이 전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재'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야임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는 단순히 소득이나 환경을 가지고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행바우처 제도처럼 추첨방식을 활용해 보는 것도 제도의 확산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고민해볼만한 방식임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 □ 사업 내용 및 특징

#### ○ 사업 소개

- 과학문화바우처는 과학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문화 상품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하는 과학문화확산 사업의 일환이며 2019년에 시범사업이 추진된 이후 지원 규모가 확대됨
-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과 같은 개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 및 전시·체험, 도서 및 교구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포인트를 제공함
- 2023년 기준,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며 개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됨(2023년 지원자 수 33,000명). 사업의 진행을 위해 포인트몰을 신규로 구축하고 개인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는 추세이며 과학기술진흥 기금과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임
- 과학문화바우처 사업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과학문화의 확장을 목표로 하는 재단의 특성에 맞게 운영됨. 실제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몰은 SK엠앤서비스(베네피아)가 위탁을 받아 서비스함
- 즉 이용자들의 자격을 점검하고 선정하는 것과 상품을 등록할 업체를 관리하는 것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재단의 주도하에 선정된 사용자와 업체 및 상품목록이 정리되면, 이에 기반해 실제 사용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업체가 위탁을 받아 용역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
- 한편,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창의 인재 육성 등의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됨. 특히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을 통해 과학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해마다 지원금액의 범위를 넓혀 소외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재단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황임. 이에 발맞춰 예산의 규모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표 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의 법적 근거

구 분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p>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지원한다. &lt;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li> <li>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li> <li>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li> </ol> <p>③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lt;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gt;</p> <p>④ 삭제 &lt;2014·5·28&gt;</p> <p>⑤ 삭제 &lt;2014·5·28&gt;</p> <p>⑥ 삭제 &lt;2014·5·28&gt;</p> <p>⑦ 삭제 &lt;2014·5·28&gt;</p> <p>⑧ 삭제 &lt;2014·5·28&gt; [전문개정 2010·2·4]</p>
--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참고.

#### ○ 사업 대상

- 6세 이상이며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과 가족, 단체로 기준 단위를 구분하여 신청을 받음. 단, 중복신청은 불가함

〈표 4-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지원자격

구 분	개인/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경증),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단체	<p>사회복지시설·법인, 도서벽지접적지역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드림스타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서비스를 받는 자</p> <p>* 사회복지시설·법인 세부자격은 공고문 확인</p>

출처 :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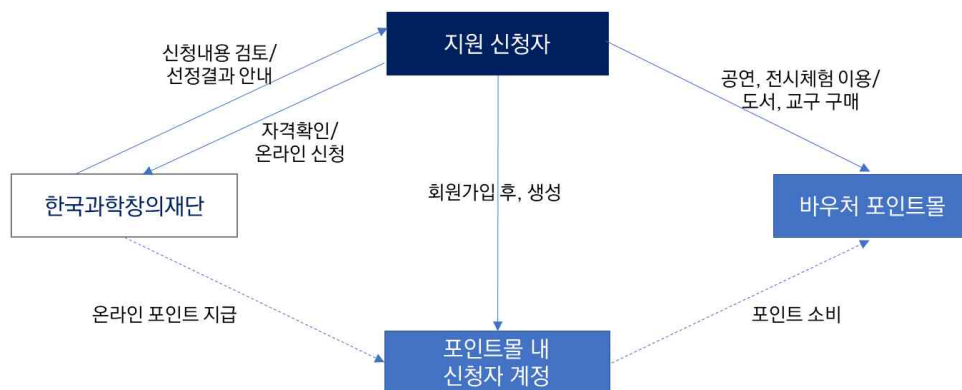
- 개인, 가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이 포함됨
-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중 일부 시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드림스타트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함
-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개인은 만14세 이상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 14세 미만이나 본인 신청이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소외계층에서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자격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가족대표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함
- 한편 단체로 신청할 경우, 법정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진행함

### ○ 지원 범위

-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하며, 이중 기존 이용 이력이 없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함. 연간 1인 1회만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를 이미 수령한 수혜자는 연내 중복 신청이 불가함
- 1인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온라인 포인트를 지원해주며, 바우처 전용 포인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또한 가족이나 단체의 신청은 포인트가 합산되어 지급됨. 포인트몰 내 공연, 전시체험, 도서 및 교구 등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음.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으며 국고로 자동 반납됨
- 지원 받은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나 재판매하는 것이 불가하며 사용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사용이 제한됨. 사용한 포인트는 ‘포인트 사용정책’에 따라 취소 가능 기간 내에 환불이 가능하며 상품 유형별로 취소 가능기간이 다름

### □ 사업 전달체계

[그림 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의 정책 전달체계



출처: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 재구성

- 과학문화바우처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사업으로, 지원 신청자가 사업에 대한 자격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진행됨. 이 과정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선정된 결과를 안내한 뒤, 포인트몰 내에 생성된 신청자의 계정으로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함
- 바우처 지급을 위한 자격의 증명을 위해 ‘복지로’와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있음. 별도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어 빠르고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인하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단체의 경우, 전체 금액이 합산되어 일괄적으로 포인트가 지급됨. 수혜자들은

바우처 포인트몰에서 해당 포인트를 소비하여 공연 및 전시체험과 도서, 교구 등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전달 체계가 구성됨

- 또한 포인트 외에도 온라인 몰 내에서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을 통한 개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수혜자가 개인결제를 할 수 있는 구조임. 이 과정에서 포인트로만 구매하거나 포인트와 개인결제를 합산하여 구매, 또는 개인결제로만 구매할 수 있는 등 결제 방식을 다양화 하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임

〈표 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상품 현황(2019~2022)

(단위: 개)

분야	2019	2020	2021	2022
공연	3	7	9	8
전시체험	15	26	28	43
도서	96	119	216	164
키트	7	45	71	269
교육·강연 등	-	-	-	44
계	121	197	324	528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2022). 2022년 과학창의 통계일람(과학기술문화), 12pg., 한국과학창의재단(2023). 사업별 설명자료 (과학문화 확산). 참고.

- 포인트몰 내 과학바우처 상품의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9년 대비 2022년 상품 수는 5배 이상 확대됨. 특히 교육·강연 등의 카테고리가 작년부터 신설되어 수혜자가 더욱 다양한 유형의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함

## □ 사업의 성과 및 한계

- 과학문화바우처는 소외계층에 대해 과학문화 향유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부터 가족,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의 참여를 도모함
  - 상품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하며 이는 이용후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sup>96)</sup> 나아가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수기 공모전을 진행해 사업에 대한 수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전하려고 노력 중임
- 또한 과학문화바우처는 발행인원과 발행액, 사용 인원과 사용액, 사용률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사용률은 서비스 초기에 75.6%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100%를 기록하여 바우처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런 결과를 통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내 대상자들이 바우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십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96)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2023.11.29., <https://scivoucher.kofac.re.kr/kr/main/>

〈표 4-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사업 수혜자 현황(2019~2022)

(단위: 명, 백만원, %)

분야	2019	2020	2021	2022
발행인원	31,639	46,121	53,463	56,855
발행액	474	692	1,603	1,706
사용 인원	23,905	42,470	45,677	51,097
사용액	327	641	1,391	1,500
사용률	75.6	92.1	85.4	100.0

출처 : 한국과학창의재단(2022). 2022년 과학창의 통계일람(과학기술문화), 12pg., 한국과학창의재단(2023). 사업별 설명자료 (과학문화 확산). 참고.

- 특히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했던 과거와 달리 대상을 성인과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바우처와 구별되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으며 온라인몰을 기획 및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 제고함<sup>97)</sup>
- 과학문화바우처는 타 부처에서 진행하는 바우처와는 달리,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와의 연계가 부재한 상황임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몰과 연계하여 운영을 위임하였는데,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이용자 선정과 온라인몰 운영업체의 상품 심사관리 역할에 집중하고 있음
  - 오히려 온라인몰 활용으로 인하여 과학문화바우처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활용법과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상품을 제작하는 민간 사용자에게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sup>98)</sup>
- 과학문화바우처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사업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인 ‘과학문화’ 개념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또한 이미 수행되고 있는 다른 복지 사업들과는 다른 과학문화바우처 사업만의 특색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한계로 지적됨<sup>99)</sup>
  - 또한 바우처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과학바우처라는 서비스 개념과 특성,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홍보 방식을 개선의 숙제가 있음<sup>100)</sup>
  - 온라인몰 내 상품의 개수를 확대하여 수혜자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온라인몰 상의 품목은 도서나 키트와 같은 특정 카테고리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
  - 특히 키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향유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꾸준히 상품을 확보하여 과학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보충해야 함

97) 한국과학창의재단(2021.02.03.).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추진 방향.

98) 조현희(2020). 과학문화바우처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창의재단.

99) 조현희(2020). 과학문화바우처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창의재단.

100) 조현희(2020). 과학문화바우처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창의재단.

- 또한 자부담과 관련된 사용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적용의 시사점

- 과학분야의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때에 살펴볼 수 있는 선행사례로 파악됨
  - 특히 개별 분야의 진흥을 위한 별도의 진흥기금의 일부와 복권기금 일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사업 설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기존 바우처 제도에서 주로 활용하는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포털이 아닌 민간의 포인트몰과 협력하여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참고할 만함
  - 과학문화와 달리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경우, 민간 포인트몰을 활용하면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민간 온라인몰이라는 특성 상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 큐레이션을 잘 해 둔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음
- 2023년을 기준으로 지원예산 16억 5천만원(33,000명\*50,000원) 규모는 타 바우처제도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크지 않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접근 가능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바우처 제도와 달리 민간 온라인몰과 협업하고, 기금을 활용하여 바우처 제도를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이나 장애유무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대상자 중복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바우처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조손 가족 등을 수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시에는 일반국민까지 포함하는 소득 구간에 따른 수혜대상의 확대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표 4-36〉 타 기관 사회서비스 사업별 특성 요약표

사업명	사업대상	대상자 기준검토 (전담 부처)	서비스 총괄기관	결제 방식 (온오프라인)
평생교육바우처	저소득층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65% 이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행정안전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하기관)	오프라인 (전용 단말기 사용)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소득유형에 따른 구분 (취약계층 추가 지원)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민간위탁)	예치금 충전 후 국민행복카드 결제, 가상계좌 입금, 돌봄페이(모바일앱) 결제
에너지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산업통상자원부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 결재를 통해 차감
서울형 여행바우처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노동 근로자 중 만 19세 이상 연 소득 3,900만원 미만 서울시민	증빙서류 제출 후 기준통과 시 추첨으로 선정	서울관광재단 (서울시 산하기관)	온라인몰 사용 (포인트 지급)
과학문화바우처	만 6세 이상 개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 단체: 사회복지시설·법인, 도서벽지집적지역 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드림스타트,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서비스 대상자	접수 기간 후 우선순위(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예산 대비 1.1배 선발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온라인몰 결제 (지급된 포인트 사용방식)

## 제4절 | 소결 및 시사점

### 1. 소결

-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봄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스강좌이용권, 문화비 소득공제를 사회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었고,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는 복지 영역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었음. 복지부 사회서비스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최근 들어 중앙 단위에서 운영하는 사업보다는 지역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으로의 전환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 교육부에도 평생교육바우처제도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문화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중앙에서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서울시에 거주하는 특수형태근로 및 플랫폼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주로 바우처(현금 또는 포인트) 지급으로 바우처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문체부의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이용권,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는 각 사업별로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복지부 및 여가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서비스는 민간 카드사(롯데, 삼성, 신한, BC, KB 국민) 중 한 곳을 이용자가 선택해서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사회서비스 결제에 활용할 수 있음(국민행복카드 발급으로 17종의 국가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
  - 서울형 여행바우처와 과학문화바우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온라인몰에 가입하면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위한 별도의 카드발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은 대부분 유사하게 설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1순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 사회서비스 제도의 특성에 따라 연령대, 장애유무, 근로환경 등 추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개념의 도입은 실상 광의의 개념인 '모든 공공서비스'로의 전환이었으나, 사회서비스 개념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의 합의된 개념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사실상 사회복지로부터 파생된 협의(狹義)의 개념에 기대어 ‘사회적 돌봄’ 차원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따라서 대부분의 부처에서 사회서비스 제도를 설계할 때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서비스 제도에 투입되는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협의의 개념으로 지원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이 갖는 특징임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에 있는 말초 행정조직인 주민센터까지 연결되어 이용자에게는 편리성을 제공하고 지원주체에게는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 이용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유무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주민센터는 행안부에 소속된 조직이지만, 타 부처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의 기관으로도 활용되며 행정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함
  - 따라서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 증명 확인을 기준으로 서비스 수혜대상을 관리하며,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효과적인 정책전달체제로 기능하며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도움을 주고 있음
-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대체로 오프라인에서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는 결제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바우처로 지급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서비스 제공기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에 전용 단말기 활용을 통해 여러 목적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실물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결제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해놓은 경우도 있음
  -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에 포인트를 지급하여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며,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개인이 추가적으로 금액을 입금하여 잔여 포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구조화해놓음

## 2. 시사점

- 본 장에서 살펴본 사회서비스는 모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이러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데에 최대한 편리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보다는 중앙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과는 매우 다른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공모사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서비스 제도가 도입되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이질성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많은 사회서비스는 유료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의 대상자 확대에 있어 자부담 비율 구성과 차등지원의 확대는 사회서비스의 정책범위 확대를 위해 많은 사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임
  -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정책대상을 한정하는 기존의 사회복지의 일반적인 방법을 유지하지 않고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광의의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사회서비스 사업들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었음
  - 즉 사회서비스 이용기회는 모두에게 열어두는 대신 소득구간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여, 이용자는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비교·분석하여 본인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서비스 이용료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줌으로써 이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공공과 민간 영역의 서비스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사회서비스 제도의 지원대상을 대폭 확장할 수 있음
- 일부 사회서비스의 경우 공공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로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보다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나 품질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향후 일반 국민들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유료화(자부담 비율 확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임
  - 즉 공공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질적으로 신뢰성을 획득한다면 이용자에게 자부담을 설정하는 것도 이용자들에게는 만족을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사회서비스에서 관리·감독기능의 수행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많은 사회서비스 사업들이 대부분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소도시의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이런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소멸 등의 사회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서비스 제도에서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은 사실상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 최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역 또는 중앙 단위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 사례에서 살펴본 많은 사회서비스 사업들은 행정의 가장 말초단위인 주민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신청, 발급,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정책전달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 정책전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책대상자들이 수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정책이 의도하는 바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향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주민센터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정책이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 제5장 ■

---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 제1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우리 정부의 대표적인 수요자 중심 문화예술 정책으로 정책 초기부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빠르게 그 외연을 확대해 왔음
  -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개념이 생소했던 정책 초기부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실행할 주체로서 ‘매개자’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해왔고, 중앙에서 직접 이들을 현장에 파견하고 관련 사업을 기획·운영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달체계는 중앙 직접 운영방식, 매개자 파견방식, 공모사업 지원 방식 등 중앙에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방법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 최근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단계적으로 지역이양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심사 또는 파견 등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중앙의존도가 매우 높은 현실임
  - 지역의 중앙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아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재정의 매우 미약하고 정책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책전달 구조가 중앙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중앙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기획·제공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지적되고 있음
  - 이러한 중앙집권 방식은 매우 다양한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우리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맞춤형 한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조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 그 동안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을 목표로 하며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은 중앙에서 심사를 통해 지역에 예산을 제공하는 형태로 결국에는 하향형(Top-down) 정책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공모사업 중심의 지원구조가 많은데, 이러한 구조는 결국 중앙의 사업의도에 맞추어 사업기획을 진행하게 함. 우선 중앙으로부터 사업예산을 획득한 이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민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지역민의 수요에 우선하기보다는 중앙의 예산획득이 더 일차적인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이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의 일상 공간에서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문화예술교육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서 정책전달 구조를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에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했고, 이를 적절하게 운영할 매개기관 및 매개자가 매우 부족했지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역사가 쌓인 현재에는 지역이양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생활권에서의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책전달을 추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지역민의 수요를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전달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이해관계자의 역할도 변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전달 구조 개선을 고려하기 위함임.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는 ‘바우처의 제도화’라고 불릴 만큼 바우처 제도 중심으로 발전해왔는데, 바우처 제도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고 정부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자의 선택’으로부터 정책전달이 시작되고 운용된다는 점에서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전달 구조와 많은 차이가 있음
-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중앙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책전달이 시작되고 이용자인 국민의 선택은 예산배정 이후에 모집하거나 때로는 일방향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임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할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면서 지원이 시작되는데, 정부는 이용자가 선택한 서비스의 이용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요자에게 맞춤형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기존의 사회복지 정책은 대부분 정부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며 운영했던 ‘공급자 중심의 방식’이었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하며 정책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음
-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서비스의 기획 및 발굴을 독려하고 있는데, 민간의 다양한 기관·기업이 이 과정에서 참여하여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민간 분야와 협동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지역에서 스스로 개발한 서비스는 지역 생활권의 특징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민의 만족도와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표준화된 기준선을 설정하고 소득보장을 해왔던 공공부조와는 달리 사회서비스 제도는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함께 주민 욕구를 고려해 서비스를 개별적이고 유연하게 개발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율성과 주도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음
- 또한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은 서비스의 대상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서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정 계층에게 집중된 정책전달로 인해 낮은 인지도를 가진 문화예술교육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대상자의 확대, 고품질 서비스의 실현, 양질의 공급자의 육성, 사회서비스 기반 강화 등의 4가지 방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특히 사회서비스의 ‘대상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원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취약계층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
  -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중산층에 대한 지원에 차등을 두어 비용 부담이 있는 취약계층에는 현금보조를 지속하고 중산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문화예술교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정책전달 체계와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예술교육 환경 조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해결방식이 될 수 있음
- 그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공급자 중심의 ‘하향식(Top-down) 구조’를 지역중심, 현장중심의 상향식(Bottom-up) 구조로 전환하는 데에 좋은 모델로 참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일상 속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예술교육 환경의 조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가능함
  - 아울러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한계로 지적되어 오고 있던 한정적인 정책대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낮은 인지도 또한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그러나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매우 많은 상황임
- 무엇보다 오랜 기간 하향식(Top-down) 구조로 고착화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전달 구조를 상향식(Bottom-up)으로 바꾸는 것은 기존의 제도를 뿌리부터 크게 바꾸어야 하는 매우 급격한 변화이며, 이에 따라 정책전달 체계의 구성, 이해관계자의 구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각각의 역할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져야 하므로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혼란이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이 아닌 지역으로 넘어가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직 많은 지역이 문화예술교육을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아직 지역은 중앙의 예산 및 인력, 자원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며 갑작스러운 체계의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에 큰 혼란을 제공하거나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에도 현재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유료화, 국고지원 대상에 대한 정당성 확보, 서비스 양과 질의 고른 공급과 관리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음
- 아직은 지역이양의 과도기적인 시기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과제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 또한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적용했을 때에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라 사료됨
- 이에 본 연구는 다음 절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제2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쟁점의 해결방안 제언

-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대부분 '바우처(voucher)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우처는 다양한 공급자들간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생산비용 절감, 가격인하,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해 생산효율성(productive efficiency)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분배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을 제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임
  - 동시에 예산통제의 가능성과 정부의 관리 감독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효율성(administrative efficiency)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앞서 살펴본 많은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도 바우처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정책효율성의 제고, 정책대상의 확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및 확대 등 바우처가 가진 다양한 장점은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도입을 고려하는 주요 이유와 동일하므로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개념 도입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 많은 사회서비스가 바우처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바우처 제도는 가장 인지도 높은 사회서비스 전달 방식이므로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함
- 그러나 바우처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이러한 바우처 제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환경 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은 중요함.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 초기에 상당수의 연구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전자바우처 제도의 전제조건이나 성공요인 등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짐(〈표 5-1〉 참고)
  - 연구마다 상이하지만 바우처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는 서비스 공급영역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 시장이 존재하는지, 경쟁이 가능성은 있는지 등과 함께 이용자의 정보접근과 선택 가능성 등을 주요 전제조건으로 꼽았음
  - 그 밖에 서비스 비용의 지불 가능성, 서비스 품질, 지역간 서비스 격차, 바우처 서비스 관리 체계의 구축과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환경을 검토해보았을 때,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많은 해결과제가 있음. 본 절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사회서비스 제도, 특히 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와 이와 관련된 본 연구의 제언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표 5-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도입의 전제(성공)조건 : 선행연구 정리

김순양(2019)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성공요인	강혜규 외(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틀	Doughert 와 Eggers(1996)의 바우처제도의 전제조건	Savas(1994)의 바우처 방식의 실현조건
1.공급자들 간 경쟁 -복수의 공급자 -시장진입장벽 -서비스 수요 형성 및 시장진입 메리트 2.수급자의 선택권 -서비스 다양성, 품질, 가격의 차별성 -정보접근성 -정보 및 서비스 품질 판단능력 -이동성과 구매능력 3.서비스 품질 -품질에 관한 정보공유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품질에 대한 평가 4.형평성 -수급 요건의 엄밀성과 포괄성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본인부담금의 적절성 5.효율성 -투입되는 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 -서비스 질 등과 연계한 거시적, 사회적 효율성 -서비스 관리체계의 통합·연계성 -서비스제공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서비스제공에서의 평가기반 구축	1.서비스 공급 -공급기반과 경쟁의 형성 -사회서비스 기관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사회서비스 제도 운영상의 이용자 중심성 강화 2.서비스 이용 -이용자의 선택가능성 -이용자 권한의 확대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의 욕구 충족 및 만족도 향상 3.서비스 정책관리 -사회서비스 이용 공급 일자의 확대 -사회서비스 정책의 강화와 인식 개선 -서비스 지원의 체계화 및 효율화 -행정부문의 사회서비스 제도 관리 운영 책임성	1.제공되는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공급자가 시장에 존재하여야 한다. 2.소비자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직접 조달에서 바우처 시스템으로 변경하는데 드는 비용이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편익의 규모보다 커야 한다. *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될 경우에만 도입	1.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에서 차이(variation)가 클 때 효과적임. 2.소비자가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서비스의 비용과 질, 구입 장소 등 시장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3.경쟁적인 공급자가 많고, 시작비용이 낮아서 수요만 있다면 부가적인 공급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함. 4.서비스의 질을 이용자가 쉽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함. 4.서비스의 가격이 비교적 비싸지 않고, 구매가 자주 행해지는 경우가 바람직 (경험으로부터 서비스관련 정보 체득이 가능).

## 1. 민간 예술교육 시장의 포괄과 프로그램 유료화 도입

### □ 예술체험 증진의 관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사설 예술학원에 대한 재인식 필요

- 그 동안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기존의 사교육으로 진행되는 예술교육 시장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효과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공 지원에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고 기존의 예술교육 시장과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였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통한 예술체험의 기회와 이를 통한 심미안(審美眼)의 개발, 예술에 대한 문해력 증가뿐만 아니라 상상력과 창의력 증진, 국민 행복감 증진,

- 사회에 대한 공동체성 및 포용력 함양 등 예술 활동과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인 목표의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구해왔음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지향은 예술을 통한 창조적인 삶, 문화적인 공동체의 구현이라는, 예술로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인 효과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음. 이러한 지향점은 기존의 예술학원으로 대표되는 예술교육 시장과의 차별점을 강조하는 근거가 되었음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입장에서 예술교육 시장은 기예(技藝) 중심의 시장으로 예술을 통한 사회적 배움보다는 전문예술가 양성을 위한 예술기술 및 지식 교육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 효과나 의미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활동으로 통한 사회적 역할과 효과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발생한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일 뿐 문화예술교육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기 어려움
- 문화예술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문화예술교육 참여를 통해 예술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심리적 부담없이 즐길 수 있으며, 참여자가 자신의 삶을 예술적으로 풍부하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도 아동·청소년을 가장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아 왔는데, 어린 시절의 예술경험 기회 제공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예술향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이러한 예술체험의 기회 제공을 넘어서는 이를 통한 자아발견, 사회성 증진, 교정 효과, 공동체성 함양 등 극적인 변화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그 동안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집중해왔던 대상인 취약·소외계층의 경우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목표를 생각할 때, 문화예술교육은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예술참여의 기회를 얻고 예술체험을 통해 예술을 자신의 일상에서 가까이하며 예술활동이 그들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민간 예술시장의 예술학원들은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음
- 입시전문 예술학원을 제외하고는 예술학원 등록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아동 또는 성인들은 대부분 취미 차원에서 예술교육을 받고 있음. 이들이 예술교육을 받는 이유는 엘리트 예술인이 되기 위한 기예훈련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술체험의 기회를 예술적 문해력을 증진하고 좀 더 예술적 삶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데에 있음
  - 이러한 수요자들의 예술학원에 등록하는 목적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술학원 또한 결국은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문해력 상승, 삶의 질 증진, 심미적 안목 개발 등 문화예술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함께 이룩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의 예술교육 시장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실제로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수강하는 장소는 ‘시설예술학원·강습소’와 ‘주민자치센터’였는데, 특히 가장 문화예술교육 수혜 기회가 미흡한 청년, 중년의 경우 시설 예술학원·강습소에서의 수강기회가 가장 많았음<sup>101)</sup>
  - 청년과 중년의 경우 자신의 지역 생활권에 있는 자신의 수요에 맞는 시설 학원·강습소를 찾아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게 자신의 지역 생활권에 존재하는 시설 학원·강습소는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소로 보임

## □ 민관 협력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증가시키는 사회서비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주체들만 참여했던 기존의 폐쇄적인 구조와는 달리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함
  - 현재의 폐쇄적인 공공지원 프로그램에만 한정된 정책전달 구조에서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공공이 지원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음
  - 이용자 선택권을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민간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 경계해 왔던 민간 예술시장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참여의 문을 여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들인 국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방식과 공급자지원 방식을 바탕으로 운영해 온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주된 서비스 제공자는 오랫동안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기관이 주로 서비스 제공을 담당해 왔음. 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영리기관을 공급 주체로 활용하는 시장화의 방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리기관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주체가 사회서비스 공급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음
  - 특히 2012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일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 진입 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공기관의 진입은 급증함. 실제로 2007년에 1,274개소였던 바우처 제공기관은 2011년에는 5,149개

101)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소로 증가했으며, 10년 뒤인 2017년에는 12,000개소를 넘어서는 등 증가 속도는 빠른 것으로 나타남(강혜규 외, 2012;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23). 2020년 기준 제공기관 중 57.4%가 개인사업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야에서 민간 예술학원을 포괄하는 것을 경계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문화예술교육과 민간 학원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인데, 임시 중심의 학원만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추구하는 바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민간 문화예술교육 시장을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영역의 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 또한 학원의 경우 문체부의 업무영역이 아닌 교육부의 업무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음
- 민간 예술학원 시장을 정책범위 영역으로 포괄하는 것은 국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
  - 현재에도 청년, 장년 등의 경우 많은 사설학원·강습소에서 자신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선택하고 있는데, 지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민간시장을 활용하는 것은 공공지원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이 미흡한 지역에서 더 많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공급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강화라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기획, 공급해왔던 현재의 구조로는 예산적, 물리적 한계가 있으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시장 확대와 생활권 내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서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민간 기업·단체들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장을 성장시키고자 하고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사회서비스들도 민관 협력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좌이용권 또한 공공과 민간 시설을 모두 아우르는 바우처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및 생활권 내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의 필요

- 그러나 이러한 민간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참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를 전제하고 있음
  - 민간 문화예술교육 분야인 사설 예술학원·강습소나 주민센터 문화센터 등도 모두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현재 모든 문화예술교육 정책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듯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을 권장할 수 없는 상황임
  - 현재의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 프로그램은 국고 지원과 일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전부

- 공공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자는 모두 무료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많은 예산지원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 파견사업의 경우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 또한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 또는 이양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참여자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은 없는 상황이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대관료, 각종 기자재 등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 지원금에서 소요되고 있음
  - 이들이 무료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관련한 비용 전부를 지원해야 하지만, 수많은 민간 시장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실상 불가능하며 타당하지도 않음
  - 기존의 타 분야 사회서비스 사업의 경우 사업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를 지원하는 방식임
  - 이는 참여자가 신청하는 수강 프로그램이 이미 유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뜻하며, 공공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수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이렇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지원 가능했던 것은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참여대상으로 삼았던 계층이 주로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이었기 때문임
- 아동·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부터 아동·청소년기에의 예술체험이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대상으로 삼아왔고, 지원의 대부분이 학교로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었음
  - 또한 취약·소외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에게 문화의 민주화 관점에서 균등한 기회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었고, 유사한 많은 정책 프로그램들이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료 운영이 가능했던 측면이 있음
- 사회서비스는 민간기관·기업이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며, 오히려 산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돕고자 정부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사회서비스 제도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참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많은 양질의 민간기관·기업이 사회서비스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더 많은 참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등을 통해 산업조사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기획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이에 참여할 민간기관·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도처럼 상호 경쟁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함
  - 기존의 공공지원을 통해 100% 기획·운영되던 구조는 수익이 참여하는 민간기관·단체에게 돌아가는 것을 극히 경계하였으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도록 함. 그러나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민간예술시장의 참여를 허락할 경우 유료화를 도입할 수밖에 없음
  - 또한 지원의 대상도 서비스 제공기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 참여자에게 참여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여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유료화된다는 것을 전제하므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유료화로의 전환이 필연적으로 필요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제도인 통합문화이용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여자의 문화예술 참여비용을 지원하는데, 유료 프로그램 참여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할 경우 유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만 참여가능함
- 문화예술교육의 유료화 도입과 민간기관·기업의 참여, 그리고 지원금을 참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구조는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시장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을 이용자 중심 모델로 설계하여 다양한 민간 공급자의 참여를 전제할 경우 이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체제’ 도입을 구축하는 것이 됨
  - 이렇게 다양한 민간 공급자가 참여할 경우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양이 증가할 수 있게 되며, 경쟁체제의 도입으로 서비스의 질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던 공공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민간 참여 기관·기업의 영세성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공급기관의 증가가 반드시 경쟁이 가능한 시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 것은 아님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실제 공급기관은 예산의 증가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시장 안에서 정부지원이 없이 자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음
  - 지역마다 편차가 발생하여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독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소규모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영세기관의 생존에 관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

- 영세한 영리기관의 난립은 불가피한 경쟁을 발생시키게 되고 결국 인건비를 낮춤으로써 이윤을 확보하는 불합리한 공급구조가 만들어짐(양난주, 2016)
  -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고 열악하게 만드는 데 기여함
  - 제공인력의 임금은 대부분 서비스 단가 내에서 책정됨에 따라 단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바우처 서비스의 특성상 시간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이용변경과 중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의 안정성은 낮고 이용자의 요구에 종속된 노동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석재은, 2020; 박세경 외, 2021)
  - 이에 사회서비스 확충에 따른 일자리의 규모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양질의 공급자, 제공기관의 규모화 전략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고, 이들의 규모화를 지원하기도 하며(보건복지부, 2020),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규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3)을 시도하기도 함
  -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은 소셜 프랜차이즈 방식을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급주체를 육성한다는 목적이 있음
  -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동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공급주체의 자생력을 확보하면서 고품질의 사회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두 가지의 목표를 설정함
  - 2023년 상반기에 3개의 거점기관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유료화를 도입할 경우 프로그램 참여 가격의 적정선을 어느 정도까지로 하느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원의 규모와 폭도 어느 정도까지로 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 현재 많은 사회서비스 지원이 정액제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1인당 공공이 지원하는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참여를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가격에 상관없이 지원금하는 금액의 한도선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음
  - 또는 프로그램의 가격에 비율을 적용해 국고지원과 개인부담금의 비율을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프로그램 가격의 적정선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프로그램의 성격, 재료, 악기 등의 특성에 따라 그 비용의 수준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서 비율을 적용해 지원하는 방식의 지원 규모와 대상인원을 예측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



- 그러나 많은 해결과제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민간 예술시장의 문화예술교육 분야 참여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생활권에서 쉽고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또한 무엇보다 더 많은 민간기관·기업의 참여로 인해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하는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양과 폭을 크게 늘릴 수 있어 이용자 선택권 강화와 만족도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 2. 국고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 또는 차등지원

### □ 국고지원 대상 확대와 정당성 확보의 문제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경우, 많은 민간기관·기업의 참여로 인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양과 폭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의 특징 중 하나인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앞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는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대상을 국민 모두로 설정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경우 정책대상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생애주기의 개념을 도입해 문화예술교육 전달의 확대를 추진해왔던 것도 이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앞서 살펴본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평생교육바우처 등은 일반 국민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한정된 국고지원의 문제를 고려해 가장 지원의 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는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도 명시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를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선정대상의 우선순위에서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저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사회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에서 정책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문화예술교육도 그 동안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며 지원을 집중시켜왔는데, 이는 한정적 정책예산으로 우선대상에 우선적 지원을 하고자하는 이유도 있으며,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음
  -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의 문화예술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책 초기부터 주요 정책대상이었으며 취약·소외계층은 문화예술 향유의 사각지대 해소의 관점에서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데에 큰 거부감이 없었던 대상임

- 특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대상은 상대적 취약 계층 또는 주요 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했음. 중산층 등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사설 예술학원 등 이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대상의 수익을 공공이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지양해왔던 부분임
- 이에 따라 생애주기 개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의 확대는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2021년 이후에는 감소폭을 보이며 축소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도입된 것은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 등 일부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예술 활동을 통해 예술적 삶을 풍부하게 향유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정책대상으로 추구해야 하는 바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할 때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적 한계를 들 수가 있는데, 정부지원 예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한정적 지원예산 배분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거나 또는 다른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이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국민에게도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될 경우 현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매우 많은 예산이 요구됨
- 또한 소외계층과 달리 스스로 예술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경우 국고지원의 정당성의 논리가 매우 떨어지게 되며, 이들이 주로 비용을 유료로 지불했던 민간 예술시장의 수익을 공공이 침해하게 될 수 있음
- 그 동안 취약계층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정책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도 국고지원의 정당성에 큰 문제가 없었으며, 이들의 경우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짧은 기간에 더 극적인 효과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책 주요대상이 될 수 있었음
- 취약계층은 경제적 문제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에 제약이 발생하므로 국고지원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충분히 문화예술향유를 위한 비용 지불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의 일반 국민의 경우 무료 수강과 국고 지원에 있어서 설득의 논리가 부족함
-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합문화이용권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가정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옴

#### □ 국고지원 대상의 점진적 확대의 필요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현재의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 만을 정책대상으로 하는 구조는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해야 함

-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에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일반 국민으로 현재보다 더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개념의 도입은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함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엄청난 물량 및 예산 투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으로의 단기간 내의 획기적인 대상 확대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아직 우리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충분한 프로그램, 인력, 예산, 지원기반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임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갑자기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국고지원의 정당성 측면에서도 충돌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하고 그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아직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이를 도입할 기반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정책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것, 즉 서비스 운영자에게 직접 공공 지원금을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정책대상의 확대는 사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즉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서비스에 참여하는 민간기관·기업이 일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생산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도입되어야만 대상의 확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도 중산층으로까지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며 중위소득 16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유용한데,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와 ‘정책대상의 확대’를 들 수가 있음. 이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대상의 확대보다는 이용자 선택권의 강화를 우선하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이용을 원하는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반을

각 지역에 구축하고 중앙과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참여를 허용하면서 유료화의 도입, 관련 시스템의 도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예산의 측면에서도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일반 국민으로의 대상 확대에 민간 시장의 참여와 협력은 공공지원의 예산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또는 기존의 사회서비스 사업과 문화예술교육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일부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우선 사회서비스 개념을 적용해 시작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통합문화이용권이나 평생교육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기존 구축되어 있던 사회서비스 사업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최근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문화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알리고 수요를 조성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현재 문화예술교육이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을 서비스 대상 영역에 포함시켜 바우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음
  - 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기존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경우 지역 이양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많은 민간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인만큼 우선적으로 유료화를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도입을 시험해볼 수 있음
- 이러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문화예술교육에의 사회서비스 도입은 문화예술교육이 아직 전 국민적으로 수요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 우리 국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성인들에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이들에게는 아직 문화예술교육의 수요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실제로 사회서비스 이용을 보면 의식주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더 높은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일상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우 참여율이 높을 수 있으나 문화예술 향유의 경우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도입은 우리 국민들, 특히 아직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과 수요가 낮은 성인들의 수요 형성과 함께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이 문화예술교육 참여가 주는 가치에 대해 이해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 소득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의 차등화 적용

-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정책대상인 아동·청소년이나 취약·소외계층 사회적으로 약자 또는 주요 투자대상으로 여겨지는 대상이므로 이들에게 정책사업이 무료로 제공되는 데에는 정당성의 문제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음. 그러나 스스로 지불능력이 있는 일반 국민, 특히 중산층과 같은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들에게도 공공 지원을 통해 무료로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고지원의 정당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음
  - 문화예술교육이 취약·소외계층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경제적 이유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이들에게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중·고소득층의 경우 스스로 지불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정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문화예술교육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고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문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사회서비스 사업 모두 주로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사업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사업만이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이에 윤석열 정부는 소득에 따라 사회서비스 비용 지원에 차등화를 적용하고자 하며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사업대상 한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던 기존의 사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소득에 따른 차등화 적용은 소득이 적은 이들은 국고 지원은 강화하고, 충분히 지불능력이 되는 대상에게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지원이 없도록 하여, 국고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동시에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불능력이 되는 계층들도 자부담을 한다면 충분히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서비스의 대상의 확대와 국고지원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 이러한 소득에 따른 국고지원의 차등화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앞서 살펴본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들 수가 있음
  -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구소득에 따라 ‘가~라’로 유형을 구분하고 정부지원을 차등지원하는데, 특히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라’형)은 국고지원을 하지는 않으나 서비스의 신청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이면 누구나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정된 국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가능케 함

- 이러한 소득에 따른 국고지원의 차등화 적용은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됨
  - 한정된 국고지원 예산에서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기회가 부족한 이들에게 국고지원이 더 많이 제공되는 것은 국고지원에 있어 불가피한 선택임
  - 그 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을 비롯한 많은 사회서비스들이 이러한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대상을 취약·소외계층에만 한정하여 제공해왔음.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의도치 않게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이 오히려 역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함
  - 문화예술교육과 사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이 사회서비스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현실적인 자원 한계와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른 차등화 된 국고지원은 사업대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3. 지역격차 문제해결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과 중앙의 개입

#### □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지역 격차와 서비스 제공의 격차 예상

- 우리 문화예술교육은 지난 제1차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지역예의 문화예술교육 공급을 꾸준히 추진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 거점 네트워크 사업’,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 운영 사업’ 등 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중앙-지역 간 협력체계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음
  -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라 광역과 기초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광역 중심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공급체계를 마련하였음
  - 최근에는 기초 지자체예의 정책공급을 강조하면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초 지자체 내에 자율적인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공급의 지역 격차는 매우 큰 상황으로 특히 지방의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매우 미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의 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이를 수행할 인력, 경험, 여건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지방의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인적자원의 부족은 물론, 관련 시설, 예산, 그리고 지역의 지지도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중앙의 인력 파견 또는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내에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자원의 개발, 네트워크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매우 한정적임
  - 이들 지역에서 아직 문화예술교육의 정책 위상 및 관련 예산이 매우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중앙의 지원이 감소 또는 중단될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투명함
- 특히 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인적 자원의 부족인데, 지역 문화예술 분야의 기반이 매우 미약하여 예술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련 시설이나 이를 지원하는 행정, 그리고 지역의 관심도도 매우 약한 상황
  - 문화예술교육 정책 초기부터 매개자의 역할을 강조해왔듯이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적 자원인데,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할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역민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부족을 의미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인력의 대부분이 수도권 또는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이를 중심으로



-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이러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환경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이러한 지역 격차는 계속 이어지거나, 또는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매우 미흡한 지역의 경우, 중앙의 공모지원 또는 파견지원이 있을 때에 한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발성 행사 실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국고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무료로 운영되고 별도의 수익을 얻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 예산지원이 없다면 비용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지역격차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전반적으로 보면 제공기관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에서의 제공기관 증가율은 46.4%에 이르는 반면, 농산어촌의 경우 12.4%에 불과하며, 물리적인 서비스 접근성 역시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박세경, 2016)
    - 특히 일부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이윤 창출이 어려움에 따라 제공기관 진입이 어려운 까닭임(전용호, 이민홍, 2018)
  - 문화예술교육에 사회서비스를 적용한다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할 제공기관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인적자원은 물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 관련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는 많은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공급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움
    - 수도권이나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지역 내에 많은 관련 자원이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이 가능하지만, 많은 기초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제공기관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하향식(Top-down) 지원의 경우 중앙에서 한정적인 범위에서나마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했지만, 상향식(Bottom-up) 구조에서는 하위(Bottom)에 많은 이해관계자(players)가 존재해야만 제공할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데 많은 지역이 하위에 이러한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음
    - 공급의 불균형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데, 하향식은 중앙이 의도적으로 한정적 범위에서나마 균형을 맞추어볼 수 있지만, 자율성에 기반한 상향식에서는 기반 및 자원의 차이가 지역 불균형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아직 많은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및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장기간 노력을 통해 수요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지역 격차의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 간 서비스 공급 및 질의 격차 문제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도 오랫동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인데, 지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정보, 이동수단, 시간 등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최근에는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 등으로 인해 점점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인구소멸 문제가 있는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민간기관·기업들의 진출을 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 이에 따라 지역은 이용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에서 목표로 했던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됨

#### □ 지역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의 모델 제시 또는 적극적 개입 필요

- 이러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 중 하나로 표준모델의 제공이 있음
- 앞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표준모델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 많은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보편적 서비스들을 선정해 타 지역에서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기하는 것임
- 표준모델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재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약 절반이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안수란 외, 2018)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서비스 도입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모델의 개발 및 보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있어 중앙인 문체부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요구됨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모델 제시가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는데, 지역에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는 사회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은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표준모델의 제시가 필요함
- 이러한 역할은 중앙의 중요한 역할이며,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례와 경험을 쌓아온 정책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가능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표준모델 제공에 있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분야도 이러한 이슈를 고려하여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분야에 제공되는 표준모델은 기반이 미흡한 지역의 사회서비스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용자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제시한 표준모델형 사업 이용자가 전체의 약 80%되고 있어, 지역의 고유성 및 특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표준모델이 주로 집중하는 대상도 기존의 많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었던 아동·청소년에 집중되어 정책이 다양하지 못하는데, 사회서비스를 통해 정책대상의 다양화를 시도하는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표준모델 개발에 있어 정책대상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이 매우 미약한 지역의 경우無理하게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도입하기 보다는 현재의 하향식 공급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문화예술교육 지역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필요함
- 과거에도 도서 및 산간 지역의 경우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을 통해 중앙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 및 강사를 파견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역에서 스스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이러한 하향식 공급이 오히려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하향식과 상향식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전국적 차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취약지역의 경우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2023년 6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출장비나 추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고 있음

## 4. 광역지원센터를 지역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로

### □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문제의 제기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 개념이 도입되고 민간 기관·기업이 참여하면 우리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게 됨.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또 제기되는 문제가 품질 관리의 문제임
  - 현재의 하향식 구조에서는 중앙이 심사를 통해 공모지원에 신청한 문화예술단체·매개자의 계획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수혜자에게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전에 일차적인 품질관리를 하는 구조임
  - 그러나 사회서비스는 심사 과정이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민간 기관·기업들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 사회서비스가 민간 기관·기업들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하므로 상호 간의 경쟁을 통해 질적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모든 지역에 충분한 수의 제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쟁을 통한 자연스러운 질적 상승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주체가 필요하며, 이들을 통한 적절한 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질이 제공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도 높은 지역도 다수임. 또한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종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음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 이후, 서비스의 단가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단기간의 시급제 노동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노동환경 및 처우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의 질적 저하도 문제로 떠오름
  -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사회서비스 정책사업 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증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감독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3년에 한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대상으로 품질평가가 수행되고 있음. 기존의 사회서비스시설평가와 유사하게 서면 및 현장평가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전화조사)를 추가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평가는 등급으로 구분되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의 관리·감독의 필요성 제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을 위해 각 지역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두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시도하고 있음

- 앞서 제4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과 시·도 지역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구축하고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제공기관 등록 관리, 최근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정수급을 경계하는 한편 제공기관의 현장조사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컨설팅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또한 각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수요에 대해 파악하고 지역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의 발굴,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홍보 등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함

○ 뿐만 아니라 2023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우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선별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임

- 이러한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전자바우처 포털에 우수기관으로 등록되어, 이용자들의 선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 이를 통해 경쟁체제에서 더 유리할 수 있음
- 품질인증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어서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으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건강한 경쟁과 품질 상생을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 □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품질관리 및 기획·운영

○ 앞서 언급한 지역 격차의 문제와 함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품질의 문제는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경우 많은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품질에 있어 들쭉날쭉한 측면은 있겠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이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방의 기초지자체 등 지역의 하위단위로 갈수록 문화예술교육 정책기반이 매우 미흡하고 관련한 이해관계자, 매개자, 단체 등의 수로 매우 적은 상황임.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도 많지 않겠지만, 질도 보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그러나 만약에 품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체할만한 충분한 프로그램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참여하는 데에 많은 한계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기관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필요함

- 아직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역할을 할 주체로서 이러한 관리주체가 필요함
- 정책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어 많은 문화예술교육 제공기관의 참여가 기대되는 지역도 이러한 관리주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특히 선택의 주체가 하위 단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할을 가장 적합하게 수행할 대상은 ‘광역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광역 지원센터는 지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역화를 추진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였고, 현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있어 가장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마다 차이가 매우 크지만 아직 많은 기초지자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할 주체들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아직 많은 기초지자체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에서 광역 지원센터가 관리·감독의 주체로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조직 구조면에서도 상당수의 광역 지원센터는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 조직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 또한 광역 지원센터는 현재에도 각 지역마다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구축하면서 지역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었을 때 이러한 정책 계획에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기획·개발과 품질관리, 부정수급 방지, 인증 운영 등을 함께 계획할 수 있음
- 또한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제공기관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과거에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 바 있음. 안영노 외(2011)는 창의적 체험교육의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과 신뢰성 증진을 위해 중앙에 인증제 추진단과 인증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sup>102)</sup>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은 프로그램 기획·운영역량, 예술강사 역량, 교육 및 시설환경의 적합성, 활동기록 관리, 숙박·체험 안전성 등을 인증항목으로 구성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제공기관간의 상호배움과 우수사례 공유,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음<sup>103)</sup>

102) 안영노 외(201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표 5-2〉 창의적 체험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안)

항목	지표	세부지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역량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특성 반영 정도	1)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는가? 2) 문화예술교육의 감수성이 잘 드러나는가? 3) 프로그램이 소통 중심인가? 4) 교육 참여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가?
	창의적 체험 활동영역 확인	1)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는 자율 활동인가? 2) 학생들이 모여 사회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인가? 3)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는 봉사활동인가? 4) 학생들의 진로를 계획하고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 활동인가?
	프로그램 구성도	1) 프로그램의 대상, 목적, 내용 등이 명확한가? 2) 프로그램의 일정과 관리조직이 목적에 맞게 잘 구성되어 있는가?
	프로그램 지원역량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가? 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프로그램 평가체계 구축	1) 프로그램 평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 프로그램의 학습성과에 대한 관계자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는가?
	홍보 계획	교육 참여자 모집이나 프로그램 내용을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예술강사 역량	예술강사 자격	1)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2) 강사의 역할에 맞게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가?
교육환경 적합성	안전한 교육공간 및 시설 확보	1)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교육공간인가?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보조시설, 보조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가? 3) 프로그램 활동 시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활동기록 관리	활동기록체계 수립	강사나 교육 참가자의 교육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기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숙박·체험공 간의 안전성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체험 공간의 확보	1) 교육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2) 식사 및 숙박시설 급식 체계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출처 : 안영노 외(201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우수 기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프로그램 공급자로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허용 기준에 대한 마련도 필요한데, 민간 기관·기업의 품질향상과 이용자의 수요 반영,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목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 정책 전달체계 및 이해관계자 역할의 점진적 재조정

### □ 정책 전달체계의 전면적 수정이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 하향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상향식 구조인 사회서비스 정책은 정책 전달구조에 있어 정반대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매우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정책 전달체계의 변화를 정책 운영을 위한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의 하향식 구조는 중앙이 정한 매개기관에게 어느 정도는 중앙의 의도한 대로 정책사업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심사를 통해 내려보내는 구조임
  - 그러나 상향식 구조에서는 중앙의 심사라는 과정이 없어지게 되는데, 중앙이 정한 매개기관에게 기획·운영을 맡기는 것이 아닌, 이용자인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책의 성격, 흐름, 전달 범위 등이 바뀌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의 정책에서의 주도권 상당 부분 하위 단위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의 다양한 수요와 취향이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재의 정책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편해야 함
  - 무엇보다도 행정절차가 크게 바뀌게 되는데, 중앙에서 수행하던 공모사업이나 파견의 형태가 아닌, 중앙은 단순히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어떠한 개입이나 심사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될 것임
  -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많은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데,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절차를 지자체에서 스스로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됨
- 사회서비스 방식으로의 변화는 전달체계에 새로운 주체가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임
  - 현재 지역단위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라면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매개자·단체, 학교 등이었음. 이들은 중앙에서 제공하는 예산 및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기획 또는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할 때 가장 필요한 대상은 행정 처리를 위한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음. 바우처 사업의 경우 주민센터 등 생활권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정책에도 바우처 사업을 도입할 시에는 이러한 생활권 내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임
  - 그리고 현재 구성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주체들, 그리고 중앙의 역할에도



매우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은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에 있어서 그 권한은 상당 부분 하위단위로 이양하게 될 것이며, 지역 내에서도 지자체나 문화재단의 권한도 약화될 수 있음

- 반면에 민간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권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에서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복지사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예탁금 관리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예탁금 정산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 주체가 전달체계에 포함됨(김은하 외, 2020). 바우처마다 역할과 범위는 상이하지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예탁금 관리와 정산을 수행하는 주체로 전달체계에 진입함

#### □ 이해관계자의 역할 재조정 필요

- 정책 전달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은 전달체계 내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도 현재와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하게 됨
-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가 도입된다면 현재 가장 많은 권한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중앙’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됨
  - 현재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대부분의 정책 방향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임. 지역 이양 및 이관을 추진하면서 많은 예산 및 권한을 지역에 내려 보내고 있으나, 아직도 중앙이 심사, 공모사업, 파견 등의 형태로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상향식 구조에서는 중앙의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며, 현재 중앙에서 수행하는 매우 구체적인 정책사업의 기획과 공모사업, 심사 등은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됨
  - 현재 지역 문화예술교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앙의 공모사업은 중앙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지역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이러한 사업기획을 구체화하는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 중 하나가 중앙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사업의 성격, 대상 등을 규정하여 지역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기획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면 중앙은 사업의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에 제공하는 역할만 할 것이며, 사업의 성격을 현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됨
- 오히려 중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리·감독의 역할, 교육·훈련을 위한 원칙을 세우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서 제공기관들의 품질관리, 부정수급 방지, 인증마크 제공,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제로 수행하겠지만, 각 지역이 이러한 품질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다양한 우수사례 및 부정사례의 공유, 종사자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후방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지원단이 그러하듯 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교류를 통한 상호배움, 정보교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이 매우 약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찾기 어렵고, 품질을 보증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중앙이 직접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제공·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음
- 또한 아직 기반이 약한 지역에 점차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진행하는 것도 필요함
- ‘지역’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 개념이 도입된다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주체가 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운영하던 주체들의 사업 내용도 상당히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주체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리더십을 가지고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관련 네트워크 조성, 관련 행정의 운영 등의 역할을 해왔음
  - 개별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역은 현재와 같이 중앙의 공모사업 의도 및 목적에 맞추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획득한 이후에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주체들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같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주도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변모한다면, 이들은 중앙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지역민의 수요를 조사·개발하고, 민간의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임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주체들은 지역 내에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처럼 지역민의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지역의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텐데, 을 벗어나게 됨. 오히려 지역민의 수요를 먼저 파악한 후 사업을 기획하게 될 텐데, 이는 경쟁체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지역민이 자신들의 사회서비스를 좀 더 이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역 수요가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으로 생각됨

- 중앙에서 하달된 예산을 운영하고 지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이 될 것이며, 지역은 지역민의 생활권 내 행정서비스 체계망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함
  -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정책 기반을 개발하는 것도 이들 지역의 정책주체들의 역할이 될 것으로 생각됨
-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와 매개자들’의 역할도 매우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됨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도 바우처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전달체계의 개편과 함께 전통적 사회복지조직들의 조직 변화를 야기함.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변화하게 되었다(양기용, 2013)’고 표현할 만큼 공급체계의 변화가 이어짐
  - 바우처 이전부터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온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경우 조직 유지와 생존을 위해 사회서비스 센터를 신설하거나, 바우처 제공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대상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도입하기도 함(권순애, 김교정, 2012). 즉 비영리 기관에서도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리기관과의 경쟁을 포함함에 따라 기존 기관들의 반발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을 요구받음
  -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들과 매개자들은 그동안 공공의 지원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모객하던 다소 소극적인 형태의 방식으로 운영해왔음
  -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도입되고 많은 민간 기관·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며, 모객을 위해서는 다른 기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함
  - 재정적으로도 공공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아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지원이 없어지는 대신 이용자들을 상대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이들은 공공의 의도에 맞는 사업기획보다는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기획을 추진할 것임. 그러나 수익에 있어 업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임
- 단체, 기관, 기업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인력들 역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존에 서비스 제공인력들은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호봉제 혹은 월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은 데 반해 시간에 따라 수가가 부가되는 바우처의 도입은 시간당 임금, 즉 시급제 일자리로의 변화를 경험함(박세경 외, 2021)
  - 때문에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바우처제도의 도입은 기존에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에 있던 종사자들의 임금과 고용조건을 함께 끌어내리게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함(송다영, 2013)
  - 뒤늦게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다양한 개선안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함

- 우리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사회서비스가 도입된다면 관련 인력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것인데, 과거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강했던 우리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이러한 변화를 잘 조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우려되는 바임

〈표 5-3〉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변화(안)

구분	역할
중앙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주요 방향성 제기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 확보 및 지역 전달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리·감독의 역할 총괄 및 가이드라인 제공. 운영 보조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훈련 가이드라인 제공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우수 사례 공유. 표준모델의 개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단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취약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직접 파견 및 운영 지원
지자체· 지자체지원단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계획 수립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 네트워크 조성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환경 및 수요 조사 및 개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관리·감독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지자체 행정기관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신청서 접수 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사회보장서비스 시스템 확인) 사회서비스 신청 통과 여부 통보, 사회서비스 지원금 제공 및 바우처(카드) 등 발급 국고 및 지방비 매칭 예산 운영 및 정산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매개자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관련 행정 처리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및 홍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운영 결과보고

## □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필요

- 우리 국민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에서 쉽게 접근가능한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현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이와 관련한 행정체계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임
-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각 읍·면·동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그리고 소득판정과 정부지원유형을 결정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는 모두 운영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는 읍·면·동 단위의 생활권 행정망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행정시스템의 제공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매년 이용률을 높여나가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이용자는 전자바우처포털을 통해 생활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고, 생활권 내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소득수준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소득을 판정하고 소득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문화예술교육이 어떤 성격의 사회서비스를 추진하든 이러한 행정시스템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
  -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하거나 사업의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든 사회서비스 운영에 있어 신청자의 소득에 대한 파악은 필요한 부분임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권의 행정망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신청자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도 이러한 행정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는데 이미 구축되어 있던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잘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활용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신청 및 발급 등을 진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 접근가능한 사회보장정보 등을 발급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음
  - 행정의 가장 말초단위이자 가장 생활권에서 접근이 쉬운 주민센터에서의 서비스 신청 및 처리 기능은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이용자 접근성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향후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행정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제3절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제언

## 1.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와 연계를 통한 정책전달의 확대

-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달체계는 사회서비스의 정책전달 방식과 거의 정반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정책 전달구조에 있어 전면적인 재편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영역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할도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 필요함
  - 문화예술교육 분야는 아직까지도 중앙의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강력한 분야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민간과 지자체 및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임
  -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전달체계 및 이해관계자의 역할 변화는 단순히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의 역할 변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20년 가까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업무영역, 사업내용 등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을 바꾸어야 하므로 이러한 정책전달 구조의 변화는 단기간에 추진하기 쉬운 일이 아님
-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사회서비스 도입은 매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인식 전환 및 이들의 역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중앙에 요구됨
-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단계적 전달체계 변화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선택해야 할 사항은 ‘대상의 확대’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상향식 사회서비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할 것인가 임
- ‘대상의 확대’를 우선한다면 현재의 아동·청소년과 취약·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했던 정책사업에서 일반 국민의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상향식 사회서비스 구조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임
  - 이 경우 우선 현재의 하향식 방식으로 일반 국민 대상의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지역 및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함
  - 현재의 구조에서 우선은 사업의 수와 대상만 확장하는 것이며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우리 일반 국민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지도와 수요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상향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
  - 이 방식은 국민 지지도 및 수요 확보 후에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어서,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이후 충분히 확보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중앙-지역 간의 관계, 공공-민간 문화예술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에 상향식으로 정책전달 체계로의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

- 반면 ‘상향식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더 방점을 찍는 전략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지역민의 수요 기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상향식 구조의 도입은 지난 20여년간 운영해온 방식의 전면적인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많은 현장과 정책의 혼란을 예상하게 됨
  - 또한 아직 우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않을 상태에서 사회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그러나 광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됨과 동시에 기초 생활권에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구축하려는 이 때에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상향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광역 지원센터에는 지역 내에서의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도, 생활권의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접근하고 즐기는 방식을 습관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타이밍이 될 수 있음
  - 또한 많은 민간 제공기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상향식 정책 전달체계는 더 많은 민간 제공기관·기업의 참여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택권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용자의 만족도 증진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지지도를 점진적으로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상향식 정책 전달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점차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과 같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상향식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지에 대한 전략을 제안함

#### □ 통합문화이용권과의 연계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기업의 개발

-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상향식 정책 전달체계 구축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을 제안함
-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업종 및 품목에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항목이 없으며, 그 외 문화예술, 국내여행 등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에는 활용 가능함
  -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업종 중 문화예술분야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화방 등 ‘관람’을 중심으로 한 항목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은 품목 종류에 없음

- 통합문화이용권의 문화예술교육과 연계는 통합문화이용권이 구축한 상향식 전달체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상향식 전달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지만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권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수급자격 확인, 사회보장정보 확인, 대상자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생활권 내 사회서비스를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행정체제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통합문화이용권에 문화예술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참여수강료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특성상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유료화를 허용하는 것이 되며, 다양한 민간 사설학원·강습소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될 것임
-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단지 공공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만을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민간의 사설학원·강습소도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됨
- 이는 그동안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경계해 왔던 예술 기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도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목적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그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됨
- 이들이 유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허용하고 다양한 제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시장체제를 점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는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음
- 이러한 많은 민간 분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이용자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
- 이러한 방식은 자연스럽게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은 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므로,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서비스 대상의 확대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려움
- 이는 현재에도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취약·소외계층에 중복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되는데,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했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정책대상의 확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짐

-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도입은 기존의 정책 전달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개념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정책 도입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따라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이용자의 생활권에 다가가는 접근성 높은 행정체계의 구축과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기업의 개발 및 확보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도입 초기에 적용하기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 이렇게 확보된 전달체계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성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 도입에 그 다음으로 필요한 절차는 각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지원체계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나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 등은 중앙과 각 지역에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관리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각 지역에서 지역민의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개발, 품질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음
  - 아직까지는 많은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지원단의 역할은 사회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상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민의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전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에서도 이러한 지원체계의 역할이 매우 필요한데, 특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역 내에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이끌어 줄 리더십의 역할이 요구됨
  - 기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회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관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서비스의 제공도 어려움
- 따라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리더십을 갖춘 구심점이 필요한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구성에서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으나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특징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는 파트너로 중앙과의 소통 및 기초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직 구조를 가질 수 있어 꾸준하게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사회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중앙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중앙은 그 동안 가졌던 문화예술교육의 권한 및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이양하는 한편, 지역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권한과 리더십을 충분히 활용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적절하게 도입하고 자리잡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사회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다양한 민간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이해와 이들이 어떻게 역할변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중앙은 큰 방향성만 제시하고, 지역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중앙의 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향이 강하던 민간의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 및 매개자들의 역할도 변화가 필요하며, 어떻게 이들이 그 역할을 변화해 나가야 할지 중앙이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함

- 많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기업의 참여를 통해 경쟁체제를 가지는 것은 민간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와 매개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형태이며, 유료화 또한 이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 방식이 아니어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의 경험이 있는 이들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정책 환경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앞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있는 우수 프로그램 인증마크 도입, 표준모델 제공을 통한 지역과 민간의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과거 검토했던 프로그램 인증제를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며,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기업 간의 건강한 경쟁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증제 운영 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함
- 또한 많은 지역의 상황과 지금까지 운영된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집하여, 우리나라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노력도 필요함

## □ 타 부처 사회서비스 제도와의 연계 추진

- 문화예술교육은 타 사회서비스의 서비스 영역과도 일부 연관성이 있는데,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의 사업 분야에서도 문화예술과 관련한 체험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의 경우 사용가능한 항목에 문화예술교육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서비스는 많지 않은 상황임
  - 그 이유는 앞서 제4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단체, 기관, 시설 등에서 「평생교육법」 상의 시설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이 어렵기 때문임
  - 평생교육시설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상의 인가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단체 등도 가능한데 여기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도 포함되어 있음
- 만약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시설·단체 등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증되는 것을 돕는 지원이 있다면 이들이 각 지역에서 평생교육시설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예술교육 시설·단체가 평생교육시설로 인증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관련 행정처리의 어려움과 인력 부족의 문제임
  - 만약 중앙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이들이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하거나 그 외 관련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각 지역에서 많은 민간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기관·기업이 성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또한 평생교육바우처 운영에 있어 평생교육기관 인증 후 관리·감독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관리·감독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함
-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도 문화예술교육이 제공가능한 서비스 항목에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극히 한정적임
  - 그러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므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민간 제공기관·기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 제공기관·기업을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의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제공하는 것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서비스 도입을 통해 목표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 2. (가칭)문화예술교육 바우처의 도입

###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의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도입

- 문화예술교육에 완전한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인 형태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바우처 사업을 도입하는 것임
  - 문화예술교육 전용 바우처 사업의 도입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사회서비스 개념을 완전히 도입하는 것으로 정책전달체계를 상향식으로 완전히 전환하여 이용자의 수요와 선택권은 가장 충실히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전환할 수 있음
  - 이는 그 동안 중앙하달형 방식으로 비판받아왔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영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음
-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을 검토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문화예술교육 정책 대상의 확대를 바우처 사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현재의 하향식 방식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전달은 일반 국민들도 대상으로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한정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타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는 현재에도 주요 정책대상인 취약·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므로 정책대상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도 바우처를 도입하되, 기존의 사업에 먼저 적용하고 향후에 문화예술교육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우선 적용하는 기존의 사업은 2023년 명칭을 바꾼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임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는 현재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생애주기별 사업으로 지역에서 수요를 개발해 기획·운영하는 방식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임. 비록 형태는 공모사업이라 완전히 하향형 구조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지역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기획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쉽게 상향형 구조를 적용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됨
  - 특히 그 동안 문화예술교육이 취약했던 계층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많은데,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대상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으로 생각됨
  -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사회서비스를 적용하는 것은 많은 예술학원에 문화예술교육시장은 허용하는 것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교육 바우처를 활용해 입시교육을 한다던가 하는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고 취미를 위한 활동에 바우처를 사용하도록 한정하

는 것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함

- 그러나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에 사회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함
  - 행정운영상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바우처를 신청, 확인, 발급받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행정망 구축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또한 지역에서 지역민의 수요, 부정수급의 방지, 품질관리·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할 지원단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바우처가 목표에 맞게 각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 중산층 대상으로의 바우처의 확대와 지원차등화 도입

- 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우리 국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더 예술적으로 풍부한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산층까지 문화예술교육 바우처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도 더 많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본질적 목표였던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고자 하였음
-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한정된 대상이 아닌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 정책수혜가 확대되도록 하는데에 있음. 따라서 문화예술교육 전용 바우처 또한 궁극적으로는 중산층까지는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함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의 대상 확대 문제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는 예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다음 <표 5-4>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 규모를 비교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2023년 기준 예산 규모가 210,227백만원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85,232백만원임
  - 타 부처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예산이 354,613백만원이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18,410백만원, 교육부의 평생교육바우처는 20,600백만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대부분의 사업은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대상이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5-4〉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 규모 비교(2019~2023)

(단위: 백만 원)

사업 총괄기관	사업명	2019	2020	2021	2022	202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7,010	18,270	18,270	17,700	18,410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	-	-	570	570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91,501	109,624	126,094	188,068	210,227
	스포츠강좌이용권	24,668	27,654	33,236	51,896	85,232
	문화비 소득공제	1,300	850	900	810	1,010
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2,509	3,444	7,400	14,100	20,600
서울관광재단	관광 바우처 제도	60	110	59	45	9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문화바우처	15,632	15,455	16,976	16,894	15,538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224,582	243,993	257,313	277,777	354,613

자료: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2019~2023),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2019~2023), 교육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2019~2023), 서울관광재단 사업계획안(2019~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2019~2023),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2019~2023)을 참고해 연구자 재구성

- 우리 문화예술교육 예산과 비교하면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일반 국민 대상 사업은 총 10,357백만원, 취약·소외계층 대상 사업은 총 32,867백만원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다른 사회서비스 사업의 예산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중산층까지 대상 범위로 하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23년 기준 354,613백만원인데 이는 우리 문화예술교육의 일반 국민 대상 사업의 약 34배, 취약·소외계층 대상 사업의 약 10배의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만약 우리 문화예술교육이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고 정책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매우 많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문화예술교육 바우처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할 때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문제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동안의 주요 정책대상인 아동·청소년이나 취약·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 또는 주요 투자대상에게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정당성을 얻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음
  -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에 충분한 지불능력이 있는 중산층의 경우 국고지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은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비용 지원의 차등화를 적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또한 이러한 소득에 따른 지원차등화를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소득에 따른 지원차등화는 향후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있어 적용이 불가피한 제도이며 정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됨
  - 충분히 지불 능력이 되는 대상에게의 지원을 줄여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의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사회서비스에 접근가능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자원 내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못함
  - 따라서 향후 문화예술교육 바우처의 정책대상 확대를 고려할 경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소득에 따른 지원차등의 기준을 세우고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교육 가치를 경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표 5-5〉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단계(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통합문화이용권과의 연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기업의 개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체계의 구성	타 부처 사회서비스 제도와의 연계 추진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도입	(가칭)문화예술교육 바우처 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문화이용권의 가맹업종·품목에 문화예술교육 추가</li> <li>• 통합문화이용권의 행정체계를 이용한 이용자의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이용 가능하게 함</li> <li>• 사설학원·강습소를 문화예술교육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참여 허용</li> <li>• 지역 내 다양한 사설학원·강습소의 통합문화이용권 참여 독려 및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에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단 구축</li> <li>• 광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단으로 설립</li>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li> <li>• 민간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매개자의 사회서비스 인식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매개자의 평생교육시설 인증을 위한 지원 운영</li> <li>• 문화예술교육 분야 평생교육바우처 참여기관에 대한 공동관리·감독의 수행</li> <li>•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매개자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참여 독려 및 가이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다락 문화예술학교에 문화예술교육 바우처 사업 시범적용</li> <li>• 통합문화이용권의 서비스 전달체계 활용하여 교유의 전달체계 구성</li> <li>• 중앙·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단의 관리·감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전용 바우처 사업의 실시</li> <li>•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li> <li>• 통합문화이용권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같은 편의성 높은 전달체계의 구성</li> <li>• 소득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실시</li> </ul>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은나 외(2023), 2023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박수지, 양난주, 엄태영, 이정은(201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혜규 외(2019) 사회보장 유형 및 범위 명확화에 관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2019.
- 고인제(2019.09.27.),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2019년 한국정책학회·한국자치행정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한국문화정보원.
- 고정민(2020), 기초예술분야 이용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메타버스가 불러올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2), 2022(2021.12.31.기준) 평생교육통계 주요지표.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3), 2022년 평생교육바우처 수기 공모전 수상작 사례집.
- 국민체육진흥공단(2021.12), 2022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안).
- 국민체육진흥공단(2022.10), 2023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
- 국민체육진흥공단(2023.07.18.), “삶의 원동력을 찾아준 스포츠강좌이용권.”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체험수기 수상작(대상), 2023.7.18.
- 국민체육진흥공단(2023.07.18.), “시력 날씨 ‘흐림’ 체력날씨 ‘맑음’.”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체험수기 수상작(최우수상).
- 국민체육진흥공단(2023.07.18.), “내 인생.” 2022년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체험수기 수상작(최우수상).
- 권순애·김교정(2012).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비영리 사회복지조직의 시장지향성과 조직성과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27-242.
- 김광원(2020),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2020-05호(15호) 정보화 기반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과 데이터 활용방안. 한국문화정보원.
- 김민정(2023.02.28.),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방안: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 김상원 외(2021),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이행상황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김송이(2016). "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강화가 돌봄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그 의미." 사회복지연구 47.4: 281-307.
- 김순양 (2019). "공공서비스 공급과 바우처(voucher) 사업: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성공요건 분석." 行政論

叢 57.4 : 31-69.

김용득·강상경·금현섭·심창호·이상균·이용표·최원석 외. (2009).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 I. 발전방안. 보건복지가족부.

김유휘 외(2023), 「2023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예정

김은정(2012). "전환기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11 : 22-48.

김은정·정은아(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서비스 효과성 인식과 관련요인." 사회서비스 연구 3.1: 67-94. 대구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은정(2008).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방식의 변화와 품질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사회복지정책 0.35 : 141-168.

김은정(2022. 4. 1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복지타임즈.

김은하 외(202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운영 및 이용 절차의 표준모델 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은희(2023.07.13.), "장애인스포츠강좌 바우처 '속 빈 강정'." 소셜포커스.

김인(2010).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의 시장 경쟁성과 수급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2.2: 397-426.

김인수 외(2019), 지역별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평가체계 구축 연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김자연·이정원·조혜주(202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서비스 인력 관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자연(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인력관리 진단과 개선 방안." 육아정책포럼 75.- : 19-36.

김정원 외(2021), 평생교육 추진체계 개선 방향 연구. 교육문화연구, 27(6).

김용주(2009), 「문화예술교육 장기성과평가모형 구축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인설(2019), 「서울 아젠다 이행실적 점검 연구 :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AEI)의 개발 및 적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종기 외(2021),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산업의 신성장전략」, 산업연구원.

김지선 외(2019),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문제 : 공급자와 이용자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8(5).

김재철 외(2023),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경로분석 조사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김혜인·차민경(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남찬섭(2017).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월간 복지동향 -.227 : 5-13.

노용구 외(2017), 스포츠바우처사업 효율적 운영전략에 관한 고찰: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체육학회지, 제70호.

내 손안에 서울(2023.08.16.), “‘서울형 여행바우처’로 떠나요! 사회초년생의 속초여행기.”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2020.3), 문화복지정책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2022.11),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효과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23.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23~2027).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2 국민문화예술교육조사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18.12).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7pg.
- 문화체육관광부(2019.12).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1pg.
- 문화체육관광부(2021.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1권, 194pg.
- 문화체육관광부(2022.1).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1권, 208pg.
- 문화체육관광부(2023.1).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공개용) 1권, 209pg.
- 문화체육관광부(2023).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2021.12). 2022년도 재정 집행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2023.1). 2023년도 재정 집행계획.
- 박세경(20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37.- : 45-60.
- 박세경 외 (2019). 2019년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외(2021). 사회서비스 의제발굴 및 정책전략의 재구조화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세경 외(202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관리운영 체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예정.
- 박정민(2020).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본 사회서비스의 변화와 추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0년 3월 통권 제281호.
- 배화숙(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0.31 : 319-342.
- 변종임 외(2021).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바우처를 이용한 평생교육 참여경험 분석. 평생학습사회, 17(3).
- 백령(2023.1) 202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전략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보건복지부(201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보건복지부(2021). 2021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2020.1.). 2020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계획 [정책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023).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2023). 2023년 사회서비스 표준모델 공유화 사업설명회 자료집. 세종: 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2023). 2023년도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서울관광재단(2023.2), 2023년 주요업무보고.

- 서울시·서울관광재단(2023.4.3.),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공고.
-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2018.10), Seoul Tourism Plan 2023 서울관광 중기 발전계획(2019~2023).
-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2023.4.11.), “서울 행복여행 같이 가요~’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서울시.
- 서울특별시 관광협회(2023.4.26.), 2023년 서울행복여행 여행참가자 모집공고.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023.08), 2023년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발간물.
- 석재은(2020). "코로나19 국면에서 재조명된 장기요양 돌봄노동자의 취약성과 사회적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72.4 : 125-149.
- 송다영(2013). "돌봄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11: 23-55.
- 손진희(202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제도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1).
- 안수란 외(2018).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수란 외(20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안수란 외(2018).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수란(202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 보건복지포럼 288.- : 36-50.
- 안수란 외(2021). 2019년도 사회서비스 수요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영노 외(201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양기용(201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 89-114.
- 양난주(2011).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특성 분석: 보조금과 바우처방식의 검토." 사회복지정책 38.3: 191-219.
- 양난주(2015).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책 평가." 한국사회정책 22.4 : 189-223.
- 양난주(2016).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조직 특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4 : 259-285.
- 엄태호·조근식·김공록(2010). "정책수단의 변화가 행정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사간병서비스의 전자바우처 전환을 중심으로." 行政論叢 48.2: 65-89.
- 여성가족부(2023). 2023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사업안내자료.
- 유해미(2022.12),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22-05.
- 육아정책연구소(2023),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주요내용. 육아정책연구소.
- 이동철 외(202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2).
- 윤자영(2022), 이돌봄지원사업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2021-13.
- 이인재(2011). "사회서비스 수급체계와 관련 주체 역할 변화." 동향과 전망 -.82: 85-112.
- 이준영(2023.11.29.). ‘난방비 대란 방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 확대 논의…정부 수용 여부 주목. 아시아

- 투데이.
- 이정은·류진아(202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비돌봄서비스 종사자 간 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4.3 : 31-62.
- 이정원(2022)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전략. 육아정책포럼, 72(0).
- 이종한 외(2022),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화정보원.
- 이재원(200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1 : 81-112.
- 이재원 외. (2008).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 보건복지부 4대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관리센터
- 이재원·이남국·정진섭(2009). "사회서비스산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3.1: 223-244.
- 장정현(2022), 장애인체육 변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문재인 정부 장애인체육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특수체육학회지, 30(3)
- 정광호·최슬기·장윤희(2009).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과정 분석 :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231-255.
- 정상원(2021.10.22.), 국립외교원 14기 글로벌리더십과정 정책보고서 코로나19와 한국 관광산업의 방전방안, 국립외교원.
- 정홍원·박세경·박수지·정은희·김보영·김정은·김현진 외. (2013).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경(201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유사시장의 동태, 2012-2014 : 바우처 결제정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연구 6.1: 1-48.
- 조순옥 외(2019),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의 사회적 포용 관점에서의 성과 탐색. 평생교육 · HRD연구, 15(4)
- 조재현 외(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수요조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조현희(2020. 과학문화바우처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창의재단.
- 지은구(2011).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전자바우처." 월간 복지동향 -.158 : 73-75.
- 차민경 외(2021),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2-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보연 외(2017),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 분석 및 개선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혁구(2022. 7. 8.). 부산 에너지바우처 미사용률 20% 왜?... 소외계층 혜택서 배제되기도.국제신문
- 통계청(2019), 「2019년 장애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통계청(2021), 「인구피라미드 정보 활용」.
- 한국과학창의재단(2021.02.03.). 과학문화 바우처 사업 추진 방향.
-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22.12). 중장기 비전·전략(2023-2027) 수립.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1). 2021 문화예술교육 조사.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최근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2018~202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예술교육’ 자료집).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시민·지역연계팀(2023.3). 2023 꿈다락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 가이드북. 꿈다락문화예술학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12).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1.01). 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정책연구 06 기초예술분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23.1.20.). 2022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방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22),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추진결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_\_\_\_\_ (2022), 「지역이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태계를 향하여: 2021년 지역문화예술교육 현황」, arte 365.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2), 최근 지역 문화예술교육 현황 분석(2018~2022) ‘지역에서 꽃피는 문화 예술교육’ 자료집, 6pg.
- 한국문화정보원(2022),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확대방안 연구.
- 한국문화정보원(2023.02.06.),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확대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복권기금사업성과평가단(2023.4), 2023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보고서, 기획재정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2022), 「디지털 전환 시대, NIA가 전망한 환경 변화 13대 이슈」, 한국지능정보사회연구원(NIA).
- 한숙영 외(2017), 여행바우처 이탈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17(9).
- 허민영·임병권(2021),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소비자정책 방향 연구」, 한국소비자원. arte365.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레임워크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2023 유네스코 다자회담 리뷰.” 아르떼 리포트, 2023.7.3.

## 〈해외문헌〉

- Dougherty, Richard. H., and Eggers, Williams, D., (1996). “Delivering services for the mentally ill and developmentally disabled: A consumer choice model”, OECD Policy Study 215,
- Gilbert, N. & Terrell, P. (2005). The dimension of social welfare policy. Mass.: Allyn & Bacon.
- 남찬석·유태균 역(2014),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나눔의 집.



- OECD(2020), Culture shock-COVID-19 and the cultural and creative sector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Salamon, Lester, N.(2002). The Changing Partnership Between the Voluntary Sector and the Welfare Stats. pp41-60. in The Future of the Nonprofit Sector, edited by Hodgkinsin, V. A. and Lyman, R. W. Josset-Bass.
- Savas, E.S. 저, 박종화 역(1994), 『민영화의 길』, 한마음사

## 〈보도자료〉

- 교육부(2023.01.16.),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교육부. <https://url.kr/6i1eq8>
- 기획재정담당관(2023.01.18.),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기획조정실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050](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050)
- 김기남(2020.10.05.), “[취재 후] 줄줄이 중단된 여행 지원 사업…업계 살릴 근본 대책도 강구해야.” 여행신문, 2020.10.05. <https://url.kr/g3upfa>
- 김봉수(2021.11.03.), “메타버스가 넥스트 인터넷?... '4가지' 있어야 현실이 된다[과학을읽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0310332071624>
- 김양진(2021.01.03.), “출생 27만명 <사망 30만명...인구 ‘데드 크로스’ 현실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6991.html#csidxd3c4d68694f4073a997b484e8cd208b](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76991.html#csidxd3c4d68694f4073a997b484e8cd208b)
- 김봉수(2021.11.03.), “메타버스가 넥스트 인터넷?... '4가지' 있어야 현실이 된다[과학을읽다]”,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10310332071624>
- 김형용(2023). 돌고 돌아 다시 사회서비스 산업화. 월간복지동향, 2023.04.03.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32537>.
- 나상현(2022.08.27.) “50년 만에 ‘문화예술’ 인정받은 게임...“그래서 뭐가 바뀌는데?”,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7500001>
- 남상인(2020.10.14.), “평생교육바우처 부적격자 85%가 적격자로 수용.” 서울 PUBLIC NEWS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014500059>
- 이예름(2023.06.30.), “[이슈]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제·금융·공정거래 핵심 제도” 일간NTN 국세신문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580>
- 내 손안에 서울(2023.04.13.), “지원 받고 떠나자! 서울형 여행바우처.” 서울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7605>
- 내 손안에 서울. “‘서울형 여행바우처’로 떠나요! 사회초년생의 속초여행기.” 서울시 보도자료, 2023.8.16

보건복지부(2013.11. 27),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분류 제정」.”

보건복지부(2022.12.21.), “사회서비스 비용 부담 차등화에 78.7% 동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  
 &page=1&CONT\\_SEQ=374190](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190)

보건복지부(2023.7.5),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

보건복지부(2023.6.27.), “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

보건복지부(2023.6.18.), “‘인증’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

보건복지부(2023.9.2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최초로 145억 규모 투자 펀드 결성 완료.” 보건  
 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

보건복지부(2023.8.1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급 혁신 위한 복지기술 보유기업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cg_code=)

장병호(2022.02.22.), “서울예술단 '잃어버린 얼굴 1895' 메타버스로 만난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866726632233144&mediaCodeNo=257>

전규식(2021.07.06.), “‘메타버스 NFT를 만나다’…프린트베이커리, 'The Genesis: In the beginning’  
 진행”, 뉴스케이프 <http://www.newscap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66>

전혜원(2022.03.13.), “가상세계서 만나는 미술작품...NFT·메타버스 전시 줄이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20313010006665>

## 〈웹페이지〉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gwcf.or.kr/ko/>

국가법령정보센터\_사회보장기본법 <https://url.kr/syndlq>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nile.or.kr/index.do>

과학문화바우처 홈페이지 <https://scivoucher.kofac.re.kr/kr/main/>

디센트럴랜드\_White paper 백서 <https://decentraland.org/whitepaper-kr.pdf>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deduction/guide.do>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s://url.kr/ywbgi4>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https://csi.welfare.seoul.kr/front/main/index.do>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http://www.mogef.go.kr/sp/fam/sp_fam_f005.do)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lllcard.kr/Contents.do>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https://url.kr/7cq5ke>

한국콘텐츠진흥원\_기능성게임이란? <https://url.kr/9zd42i>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arte.or.kr/business/school/index.do>

## [ 연구진 ]

### I 연구책임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I 공동연구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이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I 연구원

양윤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문화예술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제도 도입 연구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일 2023년 12월  
발 행 일 2023년 12월  
인 쇄 인 AMC  
ISBN

비매품